



정책자료 2020-07-0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 (제1부)

-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BIG
DATA



【연구책임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진】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윤병석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박정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한나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편저】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자료집 2020-07-0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삼일기획

발|간|사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에 따른 한국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를 경감시키고, 기울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8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시작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의 ‘적응’이라는 관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의 환경 및 산업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수도권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중앙 중심의 인구정책 논의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으로 논의의 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통사업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구조(인구구조, 산업구조, 교육수준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들이 지역의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사업은 「지역의 인구정책」이라는 주제 하에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근거를 기반(evidence based)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부에서는 지역 연구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인권 교수 연구팀이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격차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연구 주제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삶의 질의 지역격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도훈 교수 연구팀이 ‘초저출산화 시대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연구 주제로 출산지원정책을 유형화하고, 출산장려금이 실제 지자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사업에서 진행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기반으로 한 두 연구는 향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사업에서 제시된 결과물은 개별 연구자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3
제1절 삶의 질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5
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차별성	26
제3장 인구 집단별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29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집단별 특성	31
제2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집단별 특성	66
제4장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관계	81
제1절 지역 및 인구 집단별 삶의 질	83
제2절 삶의 질 영향 변수 선정	99
제3절 인구 집단별 삶의 질과 관련 요인	106
제4절 인구 집단별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영향	129
제5장 삶의 질 격차에 대한 대응 전략	149
제1절 정책대상 및 정책과제	151
제2절 국내외 정책사례	156
제3절 주요정책 대상별 대응전략	176



제6장 결론	185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187
제2절 정책적 대응방안	196
참고문헌	201
부 록	213
[부록 1] 인구집단별 삶의 질 격차 분석	213
[부록 2] 연도별 삶의 질 격차 분석	220
[부록 3]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235
[부록 4] 제3차 자문회의 회의록	273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활동 개요	11
〈표 3-1〉 전국 229개 시군구 분포 현황(2018년 기준)	33
〈표 3-2〉 전국 총인구수와 출생 사망률(2000~2019)	35
〈표 3-3〉 전국 시군구별 인구증가율(상위 10%)	38
〈표 3-4〉 전국 시군구별 인구증가율(하위 10%)	39
〈표 3-5〉 전국 인구증가율 변화	41
〈표 3-6〉 전국 자연증가율 변화	42
〈표 3-7〉 남녀 총인구수 및 성비 변화(2000~2019)	43
〈표 3-8〉 전국 노령화지수와 고령화율	47
〈표 3-9〉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계	47
〈표 3-10〉 교육 수준별 인구비율	48
〈표 3-11〉 1인 가구(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55
〈표 3-12〉 외국인 비율	58
〈표 3-13〉 전국 생산가능인구(2000~2018)	61
〈표 3-14〉 연도별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69
〈표 3-15〉 연도별 청년층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72
〈표 3-16〉 연도별 중장년층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74
〈표 3-17〉 연도별 노년층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75
〈표 3-18〉 연령별 순인구이동률(%)	76
〈표 3-19〉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이동 특성	77
〈표 3-20〉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	79
〈표 4-1〉 삶의 질 응답자 현황	85
〈표 4-2〉 삶의 질 격차 분석을 위한 인구 집단 구분 기준	86
〈표 4-3〉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평균)	89
〈표 4-4〉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표준편차)	91
〈표 4-5〉 각 인구 집단별 시간에 따른 삶의 질 격차 분석 결과	92
〈표 4-6〉 각 연도별 인구 집단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결과	94



〈표 4-7〉 각 인구 집단별, 연도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결과	96
〈표 4-8〉 삶의 질 영향 요인 변수	102
〈표 4-9〉 연도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모형(SUREG) 결과	109
〈표 4-10〉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결과(2011년)	116
〈표 4-11〉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결과(2015년)	121
〈표 4-12〉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결과(2017년)	126
〈표 4-13〉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131
〈표 4-14〉 삶의 질 격차가 연령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133
〈표 4-15〉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수도권 전출)	135
〈표 4-16〉 삶의 질 격차가 연령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수도권 전출)	137
〈표 4-17〉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비수도권 전출)	138
〈표 4-18〉 삶의 질 격차가 연령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비수도권 전출)	140
〈표 4-19〉 청년 지역 간 이동 유형별 삶의 질 요인 분석 결과	144
〈표 5-1〉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내용 정리	161
〈표 5-2〉 부처별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내용 정리	164
〈표 5-3〉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따른 우수 사례	170
〈표 5-4〉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 사례	173
〈표 5-5〉 창조도시 조성 우수 사례	175
〈부표 1-1〉 전체 인구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3
〈부표 1-2〉 전체 인구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3
〈부표 1-3〉 비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4
〈부표 1-4〉 비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4
〈부표 1-5〉 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4
〈부표 1-6〉 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5
〈부표 1-7〉 청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5
〈부표 1-8〉 청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5



〈부표 1-9〉 중장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6
〈부표 1-10〉 중장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6
〈부표 1-11〉 노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6
〈부표 1-12〉 노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7
〈부표 1-13〉 남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7
〈부표 1-14〉 남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7
〈부표 1-15〉 여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8
〈부표 1-16〉 여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8
〈부표 1-17〉 저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8
〈부표 1-18〉 저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9
〈부표 1-19〉 고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19
〈부표 1-20〉 고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19
〈부표 2-1〉 2011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20
〈부표 2-2〉 2011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21
〈부표 2-3〉 2011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23
〈부표 2-4〉 2015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25
〈부표 2-5〉 2015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26
〈부표 2-6〉 2015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28
〈부표 2-7〉 2017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30
〈부표 2-8〉 2017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31
〈부표 2-9〉 2017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33
〈부표 3-1〉 전체 인구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5
〈부표 3-2〉 전체 인구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5
〈부표 3-3〉 전체 인구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5
〈부표 3-4〉 비빈곤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6
〈부표 3-5〉 비빈곤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6
〈부표 3-6〉 비빈곤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6

〈부표 3-7〉 빈곤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6
〈부표 3-8〉 빈곤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7
〈부표 3-9〉 빈곤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7
〈부표 3-10〉 청년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7
〈부표 3-11〉 청년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7
〈부표 3-12〉 청년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8
〈부표 3-13〉 중장년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8
〈부표 3-14〉 중장년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8
〈부표 3-15〉 중장년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8
〈부표 3-16〉 노년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9
〈부표 3-17〉 노년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9
〈부표 3-18〉 노년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9
〈부표 3-19〉 남성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39
〈부표 3-20〉 남성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0
〈부표 3-21〉 남성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0
〈부표 3-22〉 여성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0
〈부표 3-23〉 여성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0
〈부표 3-24〉 여성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1
〈부표 3-25〉 저학력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1
〈부표 3-26〉 저학력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1
〈부표 3-27〉 저학력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1
〈부표 3-28〉 고학력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2
〈부표 3-29〉 고학력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2
〈부표 3-30〉 고학력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242
〈부표 3-31〉 전체인구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3
〈부표 3-32〉 전체인구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3
〈부표 3-33〉 전체인구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43



〈부표 3-34〉 전체인구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4
〈부표 3-35〉 전체인구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4
〈부표 3-36〉 전체인구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44
〈부표 3-37〉 전체인구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5
〈부표 3-38〉 전체인구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5
〈부표 3-39〉 전체인구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45
〈부표 3-40〉 비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6
〈부표 3-41〉 비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6
〈부표 3-42〉 비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46
〈부표 3-43〉 비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7
〈부표 3-44〉 비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7
〈부표 3-45〉 비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47
〈부표 3-46〉 비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8
〈부표 3-47〉 비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8
〈부표 3-48〉 비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48
〈부표 3-49〉 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49
〈부표 3-50〉 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49
〈부표 3-51〉 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49
〈부표 3-52〉 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0
〈부표 3-53〉 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0
〈부표 3-54〉 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50
〈부표 3-55〉 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1
〈부표 3-56〉 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1
〈부표 3-57〉 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51
〈부표 3-58〉 청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2
〈부표 3-59〉 청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2
〈부표 3-60〉 청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52

〈부표 3-61〉 청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3
〈부표 3-62〉 청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3
〈부표 3-63〉 청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53
〈부표 3-64〉 청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4
〈부표 3-65〉 청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4
〈부표 3-66〉 청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54
〈부표 3-67〉 중장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5
〈부표 3-68〉 중장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5
〈부표 3-69〉 중장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55
〈부표 3-70〉 중장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6
〈부표 3-71〉 중장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6
〈부표 3-72〉 중장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56
〈부표 3-73〉 중장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7
〈부표 3-74〉 중장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7
〈부표 3-75〉 중장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57
〈부표 3-76〉 노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8
〈부표 3-77〉 노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8
〈부표 3-78〉 노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58
〈부표 3-79〉 노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59
〈부표 3-80〉 노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59
〈부표 3-81〉 노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59
〈부표 3-82〉 노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0
〈부표 3-83〉 노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0
〈부표 3-84〉 노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0
〈부표 3-85〉 남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1
〈부표 3-86〉 남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1
〈부표 3-87〉 남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1



〈부표 3-88〉 남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2
〈부표 3-89〉 남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2
〈부표 3-90〉 남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2
〈부표 3-91〉 남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3
〈부표 3-92〉 남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3
〈부표 3-93〉 남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3
〈부표 3-94〉 여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4
〈부표 3-95〉 여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4
〈부표 3-96〉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4
〈부표 3-97〉 여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5
〈부표 3-98〉 여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5
〈부표 3-99〉 여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5
〈부표 3-100〉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6
〈부표 3-101〉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6
〈부표 3-102〉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6
〈부표 3-103〉 저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7
〈부표 3-104〉 저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7
〈부표 3-105〉 저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7
〈부표 3-106〉 저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8
〈부표 3-107〉 저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8
〈부표 3-108〉 저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8
〈부표 3-109〉 저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69
〈부표 3-110〉 저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69
〈부표 3-111〉 저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69
〈부표 3-112〉 고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70
〈부표 3-113〉 고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70
〈부표 3-114〉 고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270



〈부표 3-115〉 고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71
〈부표 3-116〉 고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71
〈부표 3-117〉 고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71
〈부표 3-118〉 고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272
〈부표 3-119〉 고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272
〈부표 3-120〉 고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	272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1] 시군구별 총인구의 변화(2000-2018)	37
[그림 3-2] 전국 도시 유형별 평균 연간 인구증가율(2000-2018)	40
[그림 3-3] 시군구별 남녀 성비(2000-2018)	44
[그림 3-4] 전국 65세 이상 고령화율(2000-2018)	46
[그림 3-5] 연도별 전국 고학력자 비율	49
[그림 3-6] 연도별 전국 초고학력자 비율	50
[그림 3-7] 연도별 전국 저학력자 비율	51
[그림 3-8] 전국 시군구 집단별 평균 고학력자/저학력자 비율(2000-2015년)	52
[그림 3-9] 전국 1인 가구 비율(2000-2018)	54
[그림 3-10] 전국 시군구 도시유형별 1인 가구 비율(2000-2018년)	56
[그림 3-11] 전국 독거노인 가구 비율(2000-2018)	57
[그림 3-12] 전국 외국인 인구 비율(2006-2018)	60
[그림 3-13] 전국 도시유형별 평균 외국인노동자 비율(2006-2018)	60
[그림 3-14] 전국 도시유형별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2000-2018)	62
[그림 3-15] 전국 시군구 생산가능인구 비율(2000-2018)	63
[그림 3-16] 연령별 인구이동 건수 및 비중(2000-2018)	7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의 자연감소 시점도 점차 당겨지고 있어 향후 인구절벽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지속적인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더욱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혁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반면, 일부 주변 지역의 경우 빠른 인구 유출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문제가 구체화되는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며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 경우에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대도시보다 도 지역이 더 심각하다.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고령화율은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울산, 인천, 대전, 광주광역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인구구조의 자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 인구이동은 인구구조의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과거에 비해 대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체로 안정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간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광역시로의 순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광역시 이외의 도시들은 순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농촌지역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전통적인 이유로는 소득, 일자리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 등은 개인의 가치관을 비롯하여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의 인구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역 간 인구이동에도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구조와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 역시 지역 간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는 여전하다. 여전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삶의 질의 수준이 낮고, 도시보다는 농촌의 삶의 질이 낮다. 또한 인구 집단 간 삶의 질 격차도 여전하여, 빈곤층과 저학력층,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편이다. 특히 빈곤층, 청년, 노인, 여성, 저학력층 등 인구 집단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격차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박인권, 2020). 일부 인구 집단에서는 이러한 편차가 더 크기도 하고 또 다른 인구 집단에서는 편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삶의 질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느끼는 행복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의 지역 간, 인구 집단 간, 지역 내 격차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경제, 주거, 보건복지, 사회, 문화, 교육, 여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지역별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파악해왔지만, 지역 내 다양한 인구 집단들의 이질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집단별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의 양상이 다르듯이,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역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특성, 이에 따른 다양한 인구 집단의 각기 다른 삶의 질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별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격차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한다. 둘째, 각 인구 집단별 삶의 만족도와 그 사회경제적 요인을 도출한다. 셋째, 인구이동에 대한 지역별 삶의 질 격차의 영향과 이동 인구 집단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사례의 분석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격차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과 특성, 인구이동의 분석, ② 삶의 질 수준 변화 및 지역 간 격차, 영향요인의 분석, ③ 지역 간 인구이동과 삶의 질 수준의 관계 분석, ④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격차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집단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 특성을 분석한다. 지역의 인구는 성별과 연령, 학력, 국적 등에 따라 다양한 인구 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인구 집단마다 특성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중졸 이하의 저학력 인구의 경우 과거에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의 확산,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확산은 사회적 인 이슈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동인 중 하나로서, 지역 간 인구이동을 살펴본다. 한 지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생과 사망, 학력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역 간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례로, 과거에는 농촌에서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청년 및 중장년층의 이동이 대다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규모의 변화는 물론, 연령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출발 및 도착지 특성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학력별 인구이동을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지역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비수도권, 특·광역시-도시-농촌 등 지역 유

형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둘째, 지역 유형에 따른 연도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삶의 질의 변화와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고, 어떠한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지역별 전체 인구의 평균적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할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른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을 비교하고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빈곤층, 청년, 노년, 여성, 저학력층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삶의 질 영향 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삶의 질의 개념과 연구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삶의 질 또는 안녕(well-being)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주관적 행복감, 물질적 조건, 행위와 상태 등에 대한 측정 가능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삶의 질 지표 및 변수들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삶의 질 관계에 관해 실증 분석한다. 전입지와 전출지의 인구와 거리에 기반을 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관한 기본모형을 만들고, 전입-전출지 간 삶의 질 격차를 변수로 추가한다. 이 모형을 통해 지역 간 삶의 질의 차이가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에 따른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입-전출지 간 삶의 질 격차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인구 집단별 인구 이동에 영향을 주는 삶의 질 구성요소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수도권 내 지역 간, 비수도권 내 지역 간 인구 이동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인구 집단별로 세분하여 인구이동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 지역 및 집단별로 인구이동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대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지역 격차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정책 대상이 되는 여성, 청년, 노년, 저학력자 등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앞서 도출한 분석 결과와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집단별 삶의 질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실증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정책에서 빠진 공백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영역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삶의 질 등에 관한 중장기적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다. 최근 20년에 걸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중장기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삶의 질의 수준,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지난 20년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이 시기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연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우리 앞에 전개될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척도로 측정할 수도 있고,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을 채택하였다. 물

론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로 환원하기 어려운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이유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조건 중에서 무엇을 포함시키고, 그 요인들 간의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의 측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연구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리 객관적 지표들로 삶의 질을 정의하기보다 분석 결과를 통해 그 조건들을 규명할 것이다. 물론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이 방법을 채택하는 현실적 이유가 되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귀하의 삶에 (대체로)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질의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이 연구는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2018년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는 226개 시군구에,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시(제주시, 서귀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삼은 것은 시군구가 우리나라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로서, 삶의 질에 관련된 많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주택시장이나 생활권의 범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치구의 경우에는 통근권보다 훨씬 작고 도시계획 결정권도 없으며, 지리적 규모의 측면에서도 시군에 비해 작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오히려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단위로 포함하였

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많은 변수들에 대한 자료가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문헌 연구, 정량적 실증 분석, 정책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관련 연구와 정책 보고서 계획 등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삶의 질의 개념, 측정, 지표체계에 관한 이론적 실증 연구와 지역 인구구조의 양상과 변화, 인구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에 대한 문헌과 정보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의 특성, 삶의 질 지역 격차,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조사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거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부동산실거래가 등 정부가 실시한 공식적 조사의 원자료뿐만 아니라, 교육부 에듀데이터(EduData Service System: EDSS),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시도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통계연보, 보육통계, 노인복지시설현황, 사망원인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범죄통계,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통계 및 현황자료들이 있다. 그 밖에 지역별 대학진학률, 학력 자료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은 별도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구득하였다. 각종 조사 자료들은 마이크로 자료로 주어졌으며, 지역별로 집계한 후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방법으로는 각종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지역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구성요소 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도별, 지역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 및 사후분석(Tukey, Bonferroni)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인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시 기본 단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2011, 2015, 2017년 시기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외관상 무상관 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을 실시하였다.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사회학, 지리학 등 관련 분야의 여러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또는 자문회의를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문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표 1-1>과 같이 진행하였다. 초기의 자문회의에서는 연구 방향 및 방법, 삶의 질 지표 선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 후반에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인구구조 및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지역격차에 대한 대응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활동 개요

구분	일시	참석 전문가	주요 목적 및 내용
1차	2020.7.15	서울대 구인회 교수 중앙대 서원석 교수 강남대 이홍직 교수 서울연 변미리 위원	- 삶의 질 관련 기존 연구의 주요 흐름 논의 - 연구 방법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삶의 질 관련 변수 검토 및 보완 의견 수렴
2차	2020.7.17	중앙대 마강래 교수 서울대 임동균 교수 성균관대 전희정 교수	
3차	2020.10.22	서울대 임동균 교수 서울대 정현주 교수 성균관대 전희정 교수	- 연도별, 인구 집단별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의견 수렴 - 지역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논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삶의 질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차별성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삶의 질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의 개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한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민의 행복도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OECD에서 조사한 국가별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BLI)에서 우리나라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 지표는 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OECD, 2019; OECD,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질, 만족감, 행복감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경우 국민 행복을 기조로 삼고 정책을 진행하였으며(김선기·박승규, 2014; 김용욱 외, 2018),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견 명확해 보이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의 개념은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서 매우 복합적 개념이며, 이를 다루는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시 인프라 등 객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객관적 환경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본다(Florida et al, 2013; Liu, 1976; Nussbaum, 2003; 구교준 외, 2012; 서인석·기영화·이승종, 2016; 윤희철·정봉현, 2014; 이희철 외, 2020). 이들은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요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Liu(1976)는 미국 대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 경제, 환경, 건강, 교육 및 사회 등 5개 영역에 대해 112개의 변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연구조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환경에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객관적 요소들만으로는 삶의 질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나 인구 집단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이 진정한 삶의 질을 나타낸다고 보는 연구 흐름도 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1972; Campbell et al., 1976; Sirgy et al., 2000; Sirgy et al., 2010; Cantrill & Roll, 1972). 이 접근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객관적 조건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더 초점을 둔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에 대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삶의 질은 다른 아닌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경제학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Easterlin, 1974; Easterlin, 2001). 나이, 성별, 인종, 성격 등 개인의 속성에 따라 개인의 행복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객관적 요소만 비교함으로써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은 후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삶의 질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이나 집단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평가 척도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과 환경에 처하여 그 요소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

문이다. 즉, 개인의 삶의 질은 그 사람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등을 종합하여 나타내며, 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객관적 요소들과 주관적 의식을 종합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Sirgy et al., 2010).

이처럼 삶의 질을 사람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더라도, 이를 측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김영섭, 2001).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은 객관적 조건들이 존재하고, 이 조건들은 개인 또는 집단마다 다르고 그 중요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주관적 감정 역시 행복감, 만족감, 긍정적 느낌, 부정적 느낌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 삶의 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음으로, 측정할 요소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객관적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이용할 것인가, 평균을 이용할 것인가, 중위값을 이용할 것인가, 요소들 간의 가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결정해야 한다. 주관적 감정 중 만족감에 대해 측정한다면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할 것인지, 삶의 전반에 걸친 만족감을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자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규칙을 찾기 위해서 통계적 분석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 실증적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단순한 한두 가지 지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관적 안녕 또는 주관적 행복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삶

에 대해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개인에게 묻고 이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개인이나 한 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Becchetti et al., 2008; Putnam, 2000; Helliwell et al., 2014; Leung et al., 2011; Cramer et al., 2004; Arifwidodo & Perera, 2011; Balducci & Checchi, 2009; Poon & Shang, 2014; Zagorski et al., 2010; Arifwidodo & Perera, 2011; Benita et al., 2019; Rehdanz & Maddison, 2008; Morrison et al., 2011).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를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그 개인의 삶의 질을 대표한다고 보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 조건들이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삶의 질 지표 개발 및 지역별 비교

2000년대 이루어진 삶의 질 관련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삶의 질 또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군 또는 시도별 전체 인구의 평균적 수준을 측정하여 지역 간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분석하였다(구교준 외, 2012; 김선기·박승규, 2014; 김용욱 외, 2018; 서인석·기영화·이승중, 2016; 윤희철·정봉현, 2014; 이희철 외, 2020; Florida et al, 2013). 구교준 외(2012)는 Nussbaum(2003)의 삶의 역량 이론을 활용하여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영남-호남으로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준거지역(수도권, 도시, 영남) 대비 비교지역(비수도권, 농촌, 호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분석 한 바 있다. 윤희철·정봉현(2014)은 고령층의 증가와 학령아동 및 청소년의 감소, 노인복지시설의 증가와 학교시설의 유희화,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수요의 변화 등 인구감소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였다.

김선기·박승규(2014)는 지역생활권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생활권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삶의 질을 활용하였다. 객관적 지표로는 56개 생활권별 삶의 질 부문별 변수를 선정하였고, 주관적 지표로는 201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지역주민의 행복도 조사」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바 있다. 또한 김용욱 외(2018)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삶의 질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추가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평가를 장려하여 각 지자체에 부합하는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서인석·기영화·이승중(2016)은 Kee의 6차원 모형 지표를 활용하여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인프라 자본, 자연 자본 등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별 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부문별 값의 군집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지역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삶의 질 향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희철 외(2020)는 Nussbaum(2003)의 10가지 역량에 대하여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7개 부문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구성한 지표를 토대로 행복을 평가한 바 있다. 또한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지역을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경제적 변영이 반드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Florida et al.(2013)은 미국 대도시(metropolitan)를 대상

으로 인적자본과 행복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 소득 및 주요 경제지표의 약 두 배 정도의 설명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도시 수준에서 사람의 웰빙, 행복이 소득 등의 경제적 기준보다는 인적자본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구 집단별 삶의 질 비교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측정 및 평가하고, 이를 다른 국가나 지역과 비교하는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는 개인 수준의 삶의 질이나 만족감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인권, 2020; 임보영·마강래, 2016). 이는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개인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른바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특정 구성원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윤희·조영태, 2008; 박인권, 2018; 박인권, 2020; 임보영·마강래, 2016; 최효진·이홍직, 2019). 김윤희·조영태(2008)는 주거지역의 특성이 그 지역 구성원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취약집단에 대하여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우울 경험의 경우 모든 취약집단에서 지역 간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저소득층과 노인의 경우 물질 결핍지수가 낮을수록 우울 경험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박인권(2018)은 사회적 약자의 역량에 특화된 지표체계(CIS-SU)를 구

축하여 시·군 수준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도시 규모별로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수 지표에서 지역 내 격차가 지역 간 격차만큼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박인권(2020)은 지역 전체의 평균적 삶의 질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 집단의 삶의 질 격차와 비교함으로써 전체와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각 지역 전체인구와 사회적 약자 구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층에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구를 통제할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크지 않으나, 사회적 약자에 한하여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임보영·마강래(2016)는 비집계자료와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혼율-이혼 여부, 기초수급자 비율-기초수급 여부 등의 대응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상반된 효과를 갖는 등 지역적 수준에서의 만족도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최효진·이홍직(2019)은 서울 및 경기도의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성별, 학력, 경제활동, 소득, 건강상태 등 개인적 특성은 물론, 기초생활, 건강의료, 자연환경, 교통시설 등 환경적 및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관계를 실증하였다.

4.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관계

한편,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정책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하여, 통계청에 따

르면 2018년 기준 0.98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의 자연증가에 대한 기대가 요원한 상황에서 각 지방 정부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동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동일한 이유에서 인구이동 현상을 분석하고 이동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인구이동은 그 원인을 전통적으로 경제적 요인, 지방 공공재 요인, 가구주 및 개인의 특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서라벌·성옥준, 2019). 가장 일반적인 경제적 요인은 Todaro(1969)의 기대소득에 의한 노동력 이동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요인으로 일자리, 소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지방공공재 요인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이동(vote by foot)한다는 Tiebout(1956) 공공선택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강동우(2016)는 Todaro(1969)의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고용과 지역 간 인구이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5년~2010년 기간에 대한 시군구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40~64세 연령층을 제외한 대다수 인구가 기대임금과 고용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발견하였고, 전반적으로 전입지의 집적경제 효과가 크고, 주택시장의 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의 전입 규모가 크게 나타나 내생적 인적자본이론이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서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연령에 따라서도 15~39세 연령층의 경우 보육시설이, 그리고 40~64세 연령층에서 교육서비스가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가구주 및 개인적 특성 또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이동 요인과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커뮤니티 참여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의 주관적 특성들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별 삶의 질은 개인의 이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병석·서원석(2014)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이동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 요인들(주택 수, 의사 수, 공원면적 등의 증감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을 주장하였다. 서라별·성욱준(2019)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가 이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거주지 주변의 편의, 문화, 복지 시설, 도보 이동 여건이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지자체의 공공서비스가 인구 유입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미현·김보경(2016)은 2007~2014년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변수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기에는 사업체수와 1인당 조세부담률 등 경제적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지만, 후반기에는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여가 향유 만족도 등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경희(2017)는 은퇴 고령층의 주거 이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여, 주거지 이동, 자가 취득,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이주 등의 변수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성효·유수영(2012)은 연령별, 동반자녀 연령별, 권역별 이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은 기대소득보다는 복지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은 사회문화적 기회, 수도권 내 이동은 혼잡비용이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삶의 질과 인구이동 간의 관계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도 한다(김성희, 2008; 이은우,

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1998). 김성희(2008)는 72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2, 2007년간의 인구 변화와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이동에 대한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은우(1998)는 임금함수와 주거비용함수를 이용한 각 요인들의 잠재가격으로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순이동과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순이동은 컸으나 생활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구는 하위 집단의 자연증가율과 더불어 집단별 이주의 선별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기대소득, 지역 공공재, 삶의 질 등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요소가 연령별, 사회계층별 인구이동에 각기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이주의 선별성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지역의 생산성을 전인하는 ‘창조계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제현정·이희연, 2017; 이찬영, 2018; 김창환, 2015; 주미진, 2017).

제현정·이희연(2017)은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을 연령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지난 15년 동안의 인구증가 및 감소 지역에 대한 연령층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매우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모든 지역의 20~39세 청년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50~64세 고령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전국 시군구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유형을 분석하여 지역 간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이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연령 및 인구 집단의 유형별로 지역 간 인구문제에 대한 차별화 된 대응 방안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찬영(2018)은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관련하여 전국 2004~16년 기간 전국 16개 시도 인구이동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40~50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경향이 뚜렷하며, 2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령대별 이주 결정요인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30대의 경우 낮은 주택가격과 문화기반시설의 우수성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별 인구 이동 연구는 특정 연령의 이주 요인 및 선별성이 고려될 때 지역의 인구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창환(2015)은 1990년대 인구이동을 대상으로 광역권에 따른 지역 이동의 인구 집단별 특징을 밝히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의 인구 이동의 계층적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로의 전출 경향은 고위/전문직의 고학력층에 집중되지만, 서울에서의 전출이 주로 신혼 후 독립한 젊은 인구 중 하위직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주로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후 수행된 연구와 마찬가지로, 20, 30대의 이주요인은 주로 직장 관련된 생애 주기적 의사 결정요인에서 비롯되며, 1990년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의 경우 서울에 거주할 확률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주미진(2017)은 인구 집단 간 이주 선별성을 조명하여 특히 지역 내 생산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창조계층'의 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17차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창조계층을 구분 후 이들의 이동 특성과 이주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보다는 남성,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그리고 미혼자 대비 기혼자의 이동이 빈번하며 전세 등 자가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이동이 많다는 특성을 밝혔으며, 비 창조계층과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창조계층의 경우 주거 및 직장에 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밝혔다.

제2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차별성

앞서 살펴본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초기의 삶의 질 지표 발굴 관련 연구들은 가용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여, 주택보급률, 상하수도보급률, 도로포장률 등 공급 측면의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급량 또는 보급률 등의 데이터만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질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보급률 위주 데이터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하더라도 연구 단위 지역을 동질적인 공간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생태학적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그러한 한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지역 내 이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지역 내 특정 인구 집단에 초점을 두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등의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박인권(2018, 2020)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은 단순한 지역 간 삶의 질의 비교를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사회적 약자 집단이 겪고 있는 상대적 삶의 질 격차를 실증함으로써 지역의 이질성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와 사회적 약자 집단을 비교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양분했다는 점과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기준을 통한 이질성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즉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를 곧 ‘삶의 질’로 보고,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지표들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인구 집단들의 삶의 질을 평가, 비교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가능한 변수에 대하여 인구 집단별로 해당하는 값을 분리하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경우 설문 응답자를 인구 집단별로 구별하여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 노년층, 여성, 저학력층 등 각 인구 집단의 삶의 질을 활용하였고, 지역사회관계 횡수 변수의 경우 전체 인구의 값과, 빈곤층의 값, 비빈곤층의 값 등 세 가지로 분리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가 지역 간 인구이동의 요인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인구이동을 세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인구이동에 대하여 이동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인구 집단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권역 내,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 권역 내 등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인구 이동 방향을 구분하여 삶의 질 격차의 영향을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지역 유형을 통제변수로 하고, 주거, 경제, 교육, 보건·복지, 사회관계 및 참여,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변수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에 대하여 기존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변수를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근거리의 이웃과의 모임을 의미하는 지역사회관계 횡수와 상대적으로 원거리의 사회활동 모임의 정기적 참여율 등을 구분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인구 집단별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집단별 특성

제2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집단별 특성

제3장 인구 집단별 인구구조 및 인구 이동

삶의 질은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인구구조는 지역별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변화와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인구이동이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동 인구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 인구구조가 차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구조와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시군구 간 인구 이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집단별 특성

1. 배경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 미만(0.98)인 유일한 국가로 절대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지방소멸¹⁾’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국 97개

1) 지방소멸 위험은 ‘지방소멸위험’을 65세 이상 고령인구대비 20~39세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호, 2016).

인구구조는 크게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 및 감소,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로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축소는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고령자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절에서는 2000년부터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연령별, 학력별, 성별, 취약 집단 등 인구구조에 따른 변화 및 변화 속도를 지역별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 노년층, 고학력층, 외국인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 양상 및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기타 지역 간 인적자본 구성의 지역적 격차 실태와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동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사회경제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인구구조 변화 및 격차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요광역시 및 특별시에 속하는 경우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 시는 ‘중소도시’, 기타 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촌’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

비율로 측정 (1.0 이하는 지방소멸 주의단계, 0.5 미만은 지방소멸 위험단계로 각각 구분)
(자료: 이상호,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 정책 차별화.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2019.11.)

르면,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35개 특·광역시 자치구, 10개 대도시, 18개 중소도시, 3개의 농촌 지역이 위치하며, 비수도권에는 39개 특·광역시 자치구와 6개 대도시, 47개 중소도시, 75개 농촌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표 3-1 참조).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인구 자료로 보완하였다.

〈표 3-1〉 전국 229개 시군구 분포 현황(2018년 기준)

	수도권(66)	비수도권(167)
특·광역시 (74)	서울특별시(25)	부산광역시(16)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천광역시(10)	대전광역시(5)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도시 (16)		울산광역시(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10)	충청도(2)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통합청주시, 천안시
		전라북도(1)
		전주시
		경상도(3)
		포항시, 김해시, 통합창원시

3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수도권(66)	비수도권(167)
중소도시 (65)	경기도(18)	강원도(7)
	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청도(10)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세종시
		전라도(10)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상도(18)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2)
		제주시, 서귀포시
농촌 (78)	경기도(3)	강원도(11)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도(16)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도(25)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도(23)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1) KOSIS 국가통계포털.

2) 행정안전부(2019)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3. 인구구조의 변화

가.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전국 총인구수는 2000년 약 4,770만 명에서 2019년 약 5,180만 명으로 증가해왔으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3-2). 특히, 출생아 수는 빠르게 감소하여, 2019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출생아 수는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수 30만 명 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에, 노령인구의 증가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2〉 전국 총인구수와 출생 사망률(2000~2019)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총인구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26,059	51,849,861
남성	23,962,088	24,456,234	25,310,385	25,758,186	25,866,129	25,864,816
여성	23,770,470	24,326,040	25,205,281	25,771,152	25,959,930	25,985,045
출생아	640,089	438,707	470,171	438,420	326,822	303,054*
사망자	248,740	245,874	255,405	275,895	298,820	295,132

주: *2019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자료에 따름.

자료: 1) e-나라지표 출생 사망 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에서 2020.6.30. 인출.

2) 통계청(2019) 장래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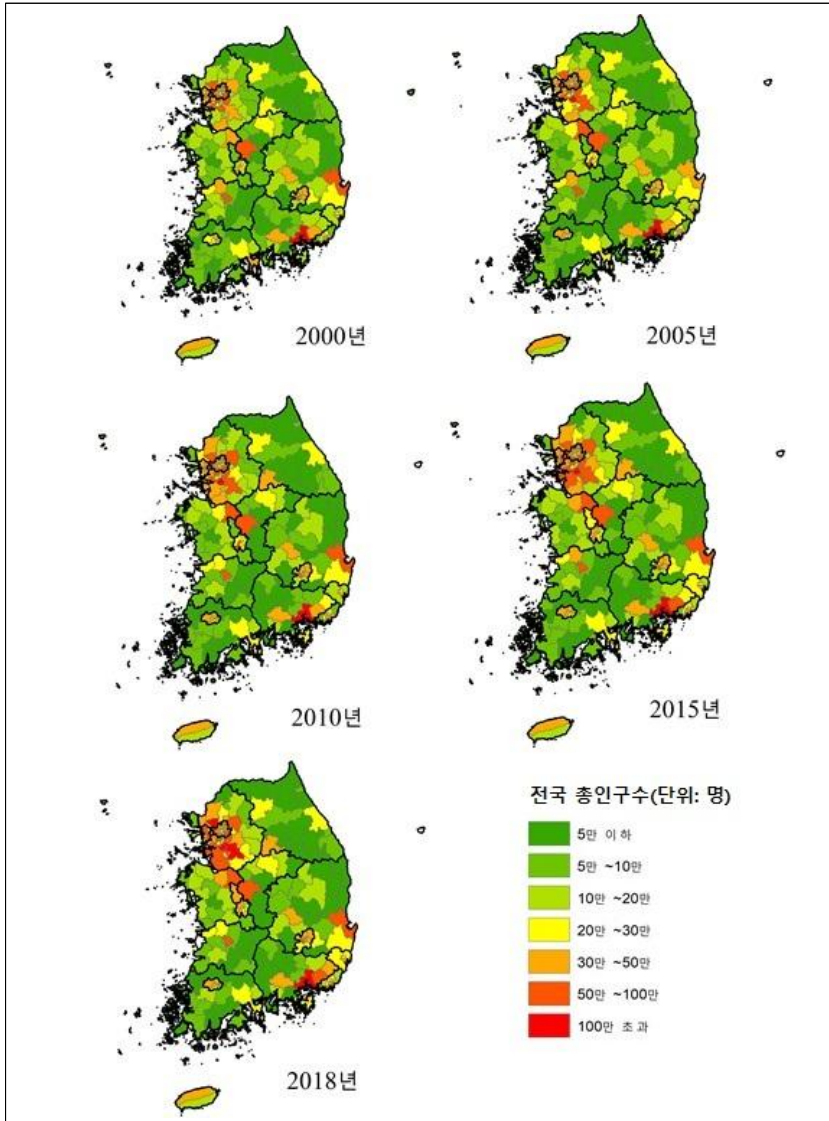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에서 2020.6.30. 인출.

[그림 3-1]의 시군구별 총인구 분포는 2000~2018년 기간 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와 그 인접 지역에서의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2018년 기준 총인구의 49.7%에 이르고, 2019년 주민등록인구 50%를 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의 주요 전입지는 경기도이다. 실제로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대규모 택지 개발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광역교통의 발달 등으로 경기도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3〉의 인구증가율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인구 집중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증가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23개 시군구 중 총 9개 시군구가 경기도에 속한다. 한편, 제주도 지역의 인구증가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0년부터 시가지는 물론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농촌 지역에서도 인구가 급증하여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부혜진, 2015). 세종시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14.19%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인구증가는 대전 등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이주와 청년 1인 가구, 이전기 관 재직자의 이주가 주된 요인이다(김석모, 2018).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 상위 10%(또는 인구 증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23개 시군구 중에 11개 시군구가 전라남도에 속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 상위 10%에 해당했는데, 이는 조사망률의 증가와 조출생률 하락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증가가 인구 유출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대 부산의 인구 유출의 이유를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산권의 성장에 따른 부산의 교외화 및 인구 재편성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구동회, 2007; 윤철현·박봉진, 2003).

[그림 3-1] 시군구별 총인구의 변화(2000-2018)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2020.7.15. 인출.

3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3-3〉 전국 시군구별 인구증가율(상위 10%)

순위	시군구	시도구분	지역구분 ¹⁾	인구증가율 ²⁾				
				2005	2010	2015	2018	연간
1	화성시	경기도	대도시	8.42	10.52	4.39	8.14	7.84
2	세종시	세종시	중소도시	0.19	0.15	18.37	14.18	7.56
3	광주시	경기도	중소도시	9.870	2.06	6.09	5.33	5.89
4	김포시	경기도	중소도시	5.301	2.72	9.04	6.20	5.77
5	용인시	경기도	대도시	11.60	4.33	2.51	1.82	5.43
6	파주시	경기도	중소도시	6.11	6.06	4.71	2.51	5.11
7	기장군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1.40	5.00	9.13	2.65	4.75
8	강서구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2.83	3.05	10.66	9.00	4.52
9	유성구	대전광역시	특·광역시	6.32	5.52	3.52	1.47	4.51
10	오산시	경기도	중소도시	5.10	6.55	3.01	2.14	4.43
11	하남시	경기도	중소도시	0.30	2.52	2.18	14.41	3.79
12	양주시	경기도	중소도시	6.41	4.24	1.83	1.85	3.77
13	남양주시	경기도	대도시	4.45	4.36	3.43	1.69	3.68
14	아산시	충청남도	중소도시	2.84	5.81	2.76	2.25	3.54
15	양산시	경상남도	중소도시	2.46	3.01	3.28	4.93	3.25
16	중구	인천광역시	특·광역시	5.13	-0.59	6.00	1.89	3.24
17	북구	울산광역시	특·광역시	3.56	3.62	2.15	2.55	3.02
18	광산구	광주광역시	특·광역시	4.34	3.69	2.10	0.71	2.93
19	달성군	대구광역시	특·광역시	0.29	2.31	2.30	9.27	2.90
20	김해시	경상남도	대도시	5.25	2.71	1.54	0.32	2.69
21	천안시	충청남도	대도시	4.44	1.92	1.81	2.19	2.63
22	서구	인천광역시	특·광역시	2.06	1.12	4.65	2.14	2.53
23	시흥시	경기도	중소도시	4.88	0.87	0.87	4.05	2.51

주: 1) 지역구분은 앞선 도시분류를 따름.
2) 인구증가율은 $(\ln(P_t/P_o)/T \times 100)$ 을 적용한 값이며 05년 0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임.
3)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에서 2020.7.5. 인출.

〈표 3-4〉 전국 시군구별 인구증가율(하위 10%)

순위	시군구	시도구분	지역구분 ¹⁾	인구증가율 ²⁾				
				2005	2010	2015	2018	연간
1	서구	대구광역시	특·광역시	-2.94	-2.87	-0.83	-3.29	-2.39
2	영도구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2.35	-2.47	-1.51	-2.34	-2.15
3	고흥군	전라남도	농촌	-3.76	-2.74	-0.29	-0.98	-2.05
4	동구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3.27	-1.96	-1.04	-1.78	-2.04
5	보성군	전라남도	농촌	-3.92	-2.69	0.25	-1.09	-1.95
6	서구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2.13	-2.63	-0.80	-1.51	-1.80
7	의성군	경상북도	농촌	-3.73	-2.02	-0.08	-0.92	-1.77
8	중구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2.11	-1.69	-1.20	-1.97	-1.72
9	해남군	전라남도	농촌	-3.80	-2.29	0.94	-1.49	-1.68
11	곡성군	전라남도	농촌	-4.92	-1.73	0.96	-0.58	-1.68
10	함평군	전라남도	농촌	-2.63	-3.09	0.23	-0.82	-1.66
12	장흥군	전라남도	농촌	-3.75	-2.26	0.62	-0.93	-1.65
13	강진군	전라남도	농촌	-3.68	-1.38	0.53	-1.78	-1.55
14	영광군	전라남도	농촌	-1.61	-4.34	0.94	-0.95	-1.55
15	문경시	경상북도	중소도시	-4.95	-0.54	0.80	-1.40	-1.53
16	진도군	전라남도	농촌	-3.62	-2.32	0.67	-0.19	-1.49
17	신안군	전라남도	농촌	-3.71	-2.93	1.73	-0.55	-1.45
18	진안군	전라북도	농촌	-4.65	-3.19	2.25	0.60	-1.45
20	청송군	경상북도	농촌	-3.23	-2.07	0.59	-0.78	-1.43
19	정선군	강원도	농촌	-2.27	-2.67	0.39	-1.03	-1.43
21	사상구	부산광역시	특·광역시	-1.31	-1.71	-0.93	-1.96	-1.42
22	군위군	경상북도	농촌	-3.15	-4.10	1.92	0.39	-1.41
23	부안군	전라북도	농촌	-3.12	-1.70	0.49	-1.03	-1.37

주: 1) 지역구분은 앞선 도시분류를 따름.

2) 인구증가율은 $(\ln(P_t/P_o)/T \times 100)$ 을 적용한 값이며 05년 0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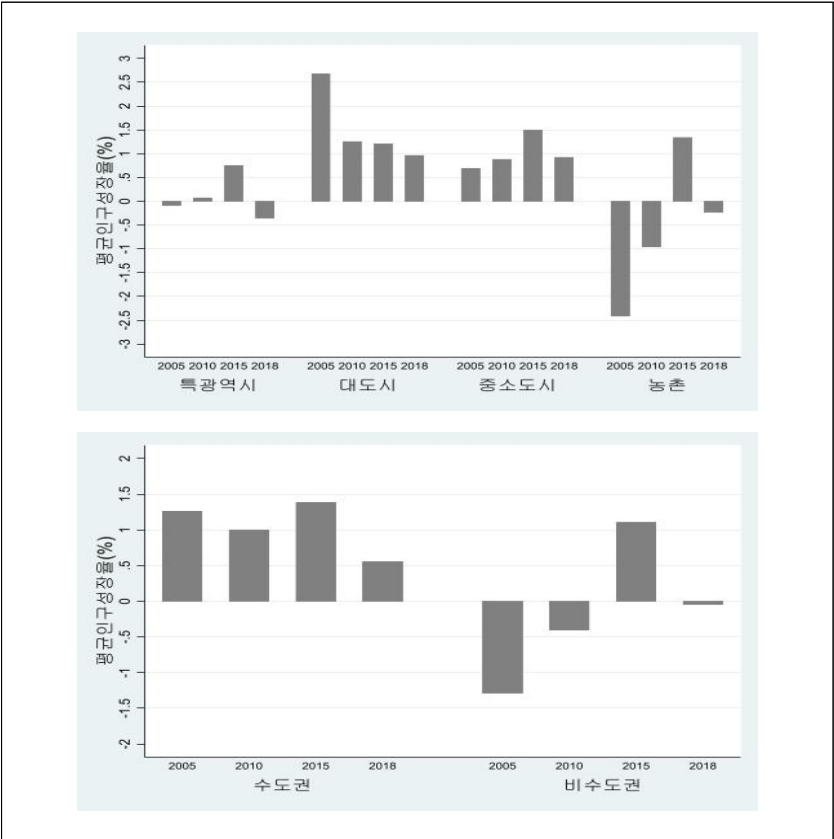
3)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5. 인출.

4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2] 전국 도시 유형별 평균 연간 인구증가율(2000~2018)



주: 1) 숫자는 00~18년 기준 도시 유형별 평균인구증가율임.
2)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0.30. 인출.

도시유형별 평균 인구증가율은 [그림 3-2]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은 2010~2015년을 제외하고는 음의 증가율을 보이며, 특·광역시시의 경우에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인구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간 평균증가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인구증가

를 보인 행정구역은 특·광역시 소속 8개 자치구와 5개 대도시, 10개의 중소도시가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경북 문경시와 대구와 부산 일부 자치구(부산 5개 구, 대구 1개 구)를 제외하면 모두 농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군구별 인구증가율의 표준편차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 도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결과이다.

<표 3-5> 전국 인구증가율 변화

구분	00-05	05-10	10-15	15-18	00-18
연간 인구증가율	0.489	0.543	0.999	0.364	0.625
시군구 표준편차	2.595	1.995	2.019	2.321	1.704

주: 1) 인구증가율: $(\ln(P_t/P_o)/T \times 100)$;

2) 평균값은 시군구 개별값 평균 대신 전국단위 합산 값을 사용.

3) KOSIS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0.30. 인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경향은 자연 인구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표 3-6>은 시간에 따른 자연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비혼율 증가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사망률 증가에 의한 것으로(권상철, 2000), 2000년의 경우 8.6%에서 2018년에는 0.56%로 '0'에 가깝게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곧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국가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4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3-6〉 전국 자연증가를 변화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연간 자연증가율	8.60	4.16	4.49	3.19	0.56
시군구 표준편차	8.522	6.745	6.592	5.676	4.982

주: 1) 자연증가율: 인구 천명 당 자연발생적 인구 증가량. $[(\text{출생자수}) - (\text{사망자수})] / [(\text{총인구}) * 1000]$
2)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0.30. 인출.

나. 남녀성비

전국의 남녀 성비는 2000년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 대비 많았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녀 성비가 역전되어 2018년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7〉 참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높아 여성의 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남녀 출생 성비는 자연적으로 결정되지만, 평균 남녀 성비는 도시의 규모나 형태, 지역 간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선진국에서 대도시 등 시가지에서 여성 인구의 비율이 여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Ritchie & Roser, 2019). 특·광역시 경우 남녀 성비가 2000년 101.0에서 2018년 97.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및 농촌의 경우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2000년과 2018년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감소, 비수도권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표 3-7〉 남녀 총인구수 및 성비 변화(2000~2019)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남녀 성비*	100.8	100.5	100.4	99.9	99.6
남성	23,962,088	24,456,234	25,310,385	25,758,186	25,866,129
여성	23,770,470	24,326,040	25,205,281	25,771,152	25,959,930

주: 1) 남녀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로 나타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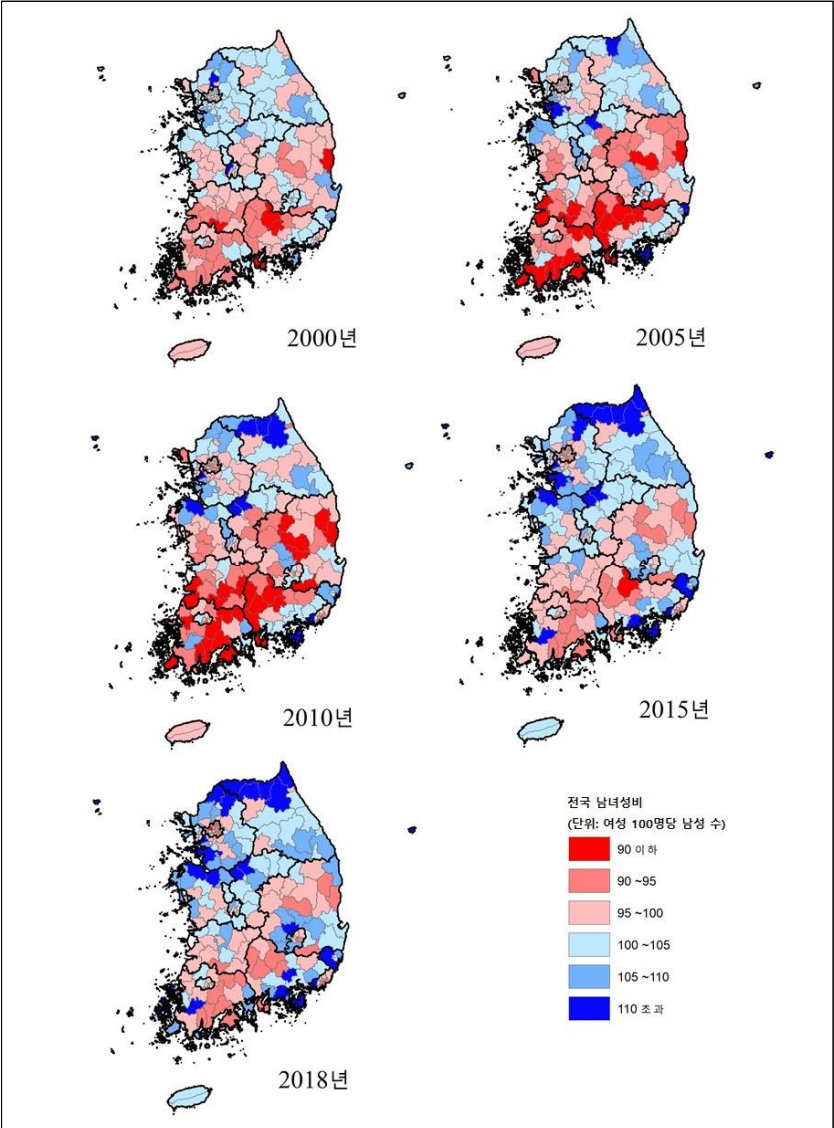
2)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0.15. 인출.

4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3] 시군구별 남녀 성비(2000-2018)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다.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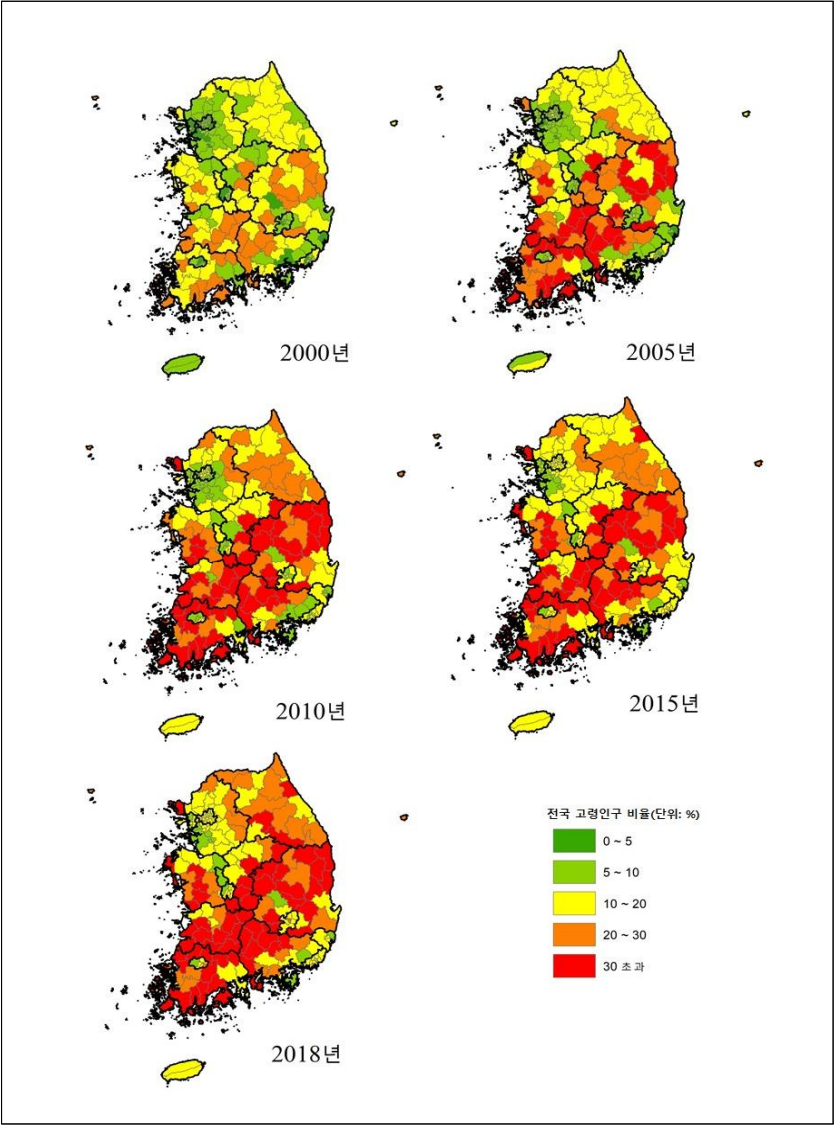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즉 고령화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9).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행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9년 고령화율이 7%를 넘기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편입되었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광역시보다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더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4] 참조).

사회 인구구조의 고령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노령화지수와 고령화율이 있다. 노령화지수는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고,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수의 비율로써 사망률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높은 노령화지수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유년 인구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 인구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노령화지수는 2000년도 35에서 2018년에는 114 정도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3-8〉 참조). 2015년 이후 주요광역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노령화지수가 40을 상회하는 등 고령화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노년부양비의 증가와도 관련되는데, 노년 부양비는 전체 15~6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19년 20.4로 증가하였고, 2065년에는 100.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3-9〉).

4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4] 전국 65세 이상 고령화율(2000-2018)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표 3-8〉 전국 노령화지수와 고령화율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노령화지수	34.98	48.58	69.66	95.16	113.94
시군구 sd	44.464	69.671	98.167	111.39	128.84
고령화율	7.33	9.28	11.3	12.96	14.44
시군구 sd	6.122	8.33	9.4	8.18	8.166

주: 1) 노령화지수 = $[(65\text{세 이상인구}) / (15\text{세 미만 인구})] \times 100$

2) 고령화율 = $[(65\text{세 이상 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3)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0.15. 인출.

〈표 3-9〉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계

연도	노년부양비 ¹⁾	노령화지수 ²⁾	고령자 1명당 생산연령인구 ³⁾
2000	10.2	35.0	9.8
2005	12.9	48.6	7.8
2010	15.4	69.7	6.5
2016	18.1	100.1	5.5
2020	21.7	129.0	4.6
2030	38.2	259.6	2.6
2040	60.1	345.7	1.7
2050	77.6	447.2	1.3
2060	91.4	546.1	1.1
2065	100.4	576.6	1.0

주: 1) 노년부양비 = $(65\text{세 이상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2) 노령화지수 = $(65\text{세 이상 인구} / 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연령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

4)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2019년 이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이며,

자료: 1) 통계청 홈페이지. 2019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701 에서 2020.7.5. 인출.

2)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3) 통계청 홈페이지. 장래인구특별추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에서 2020.7.5. 인출.

라. 교육 수준별 인구

인적자본의 전국 분포 및 지역 간 격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학력자, 초고학력자 및 저학력자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3-10 참조). 본 분석에서 고학력자는 4년제 대졸 이상, 초고학력자는 석사졸업 이상, 저학력자는 중졸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고학력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고학력자 비율이 약 29%에 달해 2000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학력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며 2015년 기준 약 4.5%의 인구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4%의 인구가 저학력자로 집계되었다.

한편, 본 분석의 공간 분석 단위인 시군구 간 교육 수준별 인구비율의 표준편차를 보면 저학력자의 표준편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고학력자 및 초고학력자의 경우 자료의 표준편차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지역 간 고급 인적자본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0〉 교육 수준별 인구비율

구분	2000	2005	2010	2015
고학력자 비율	15.86	22.28	24.36	28.68
시군구 sd	7.94	10.31	10.42	10.77
초고학력자 비율	1.84	2.74	4.23	4.45
시군구 sd	1.578	2.02	2.62	2.75
저학력자 비율	28.82	30.25	26.29	23.53
시군구 sd	17.97	17.98	16.35	14.16

주: 1)고학력자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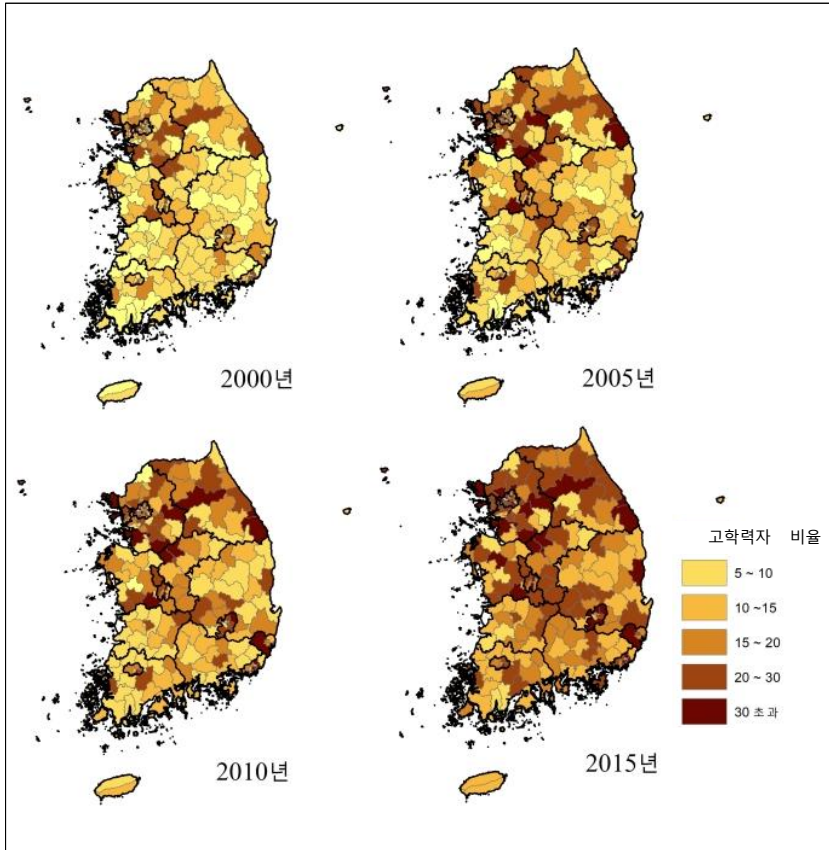
2)초고학력자 = (석사 졸업 이상 인구) × 100

3)저학력자 = (중졸 이하 인구) × 10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그림 3-5] 연도별 전국 고학력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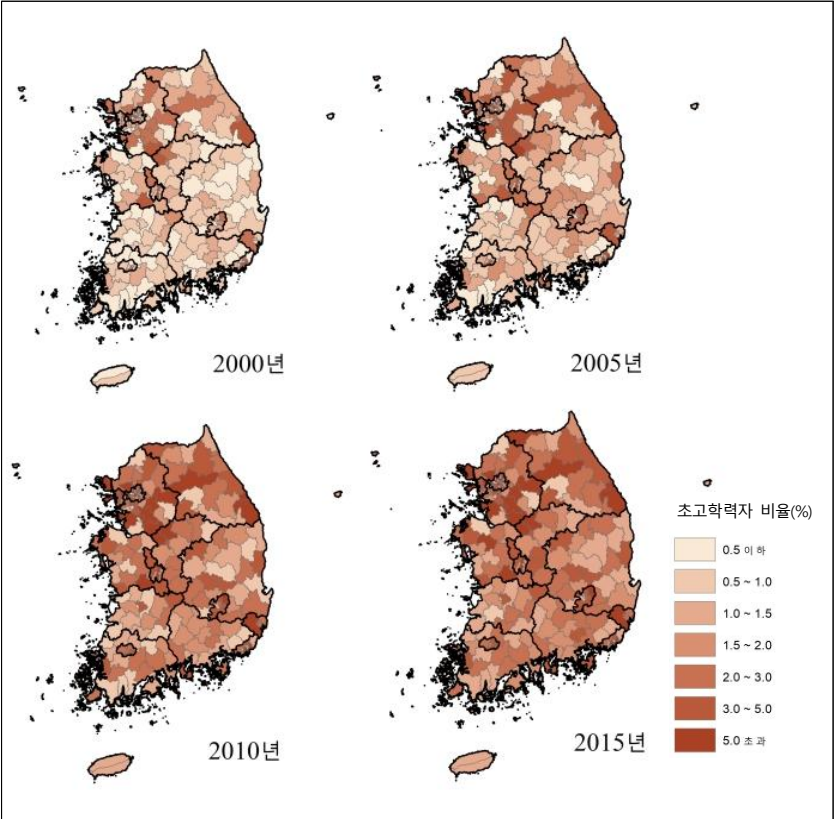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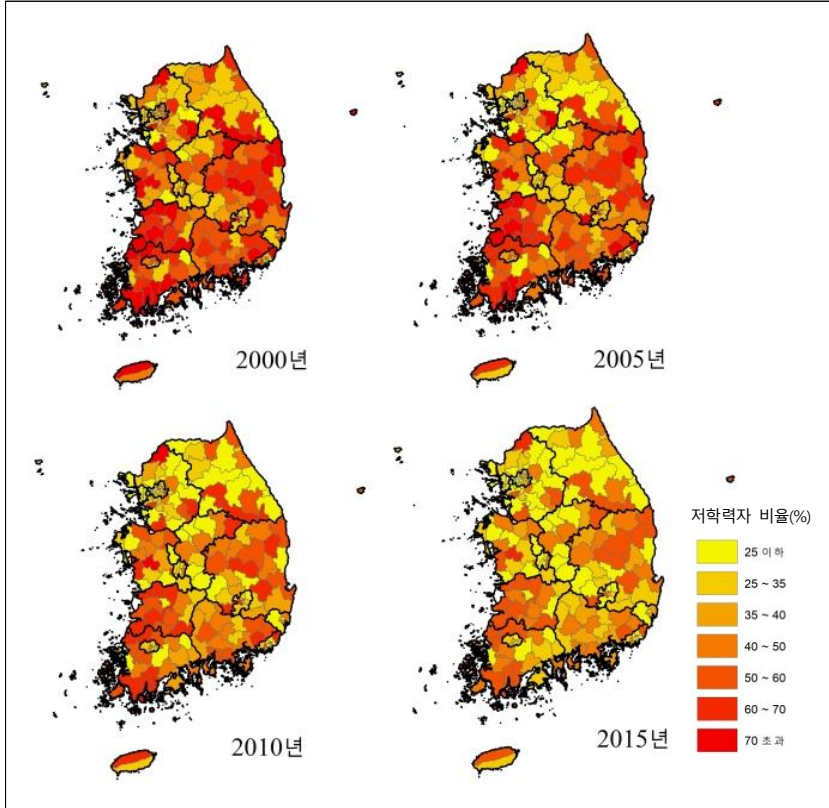
5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6] 연도별 전국 초고학력자 비율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그림 3-7] 연도별 전국 저학력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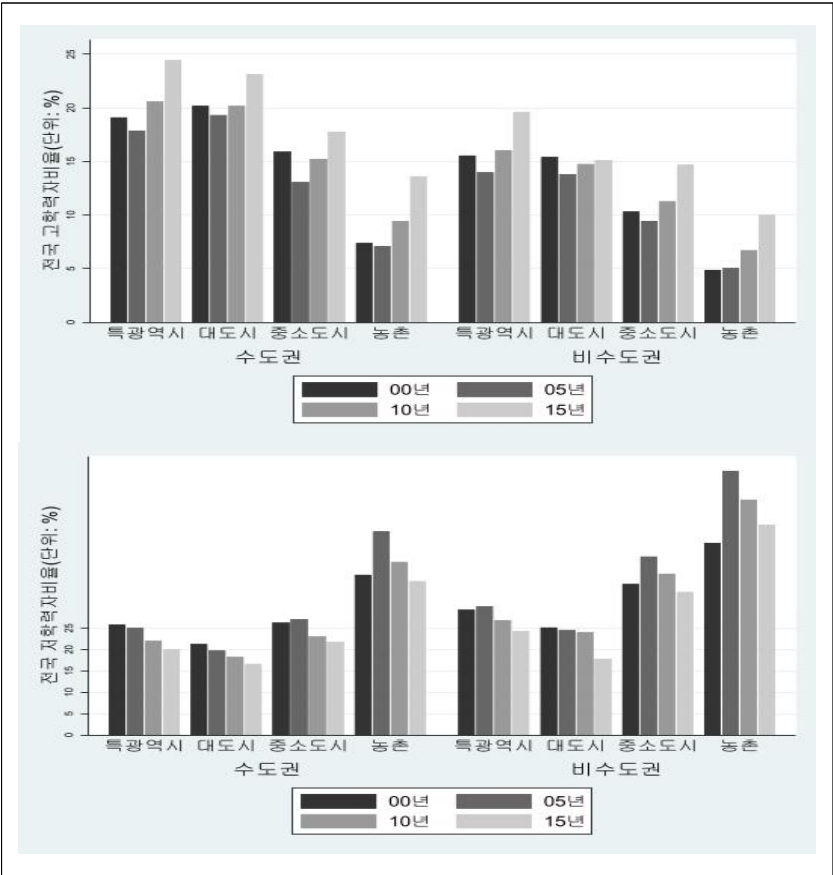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평균 고학력자 비율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규모에 따라라도 특·광역시-대도시-중소도시-농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저학력자 비율보다도 고학력자 비율의 경우 도-농,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0년과 2018년의 값을 비교한 결과, 고학

5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력자 비율은 지역을 막론하고 증가하였으며, 저학력자 비율도 마찬가지로 전국 비율이 2005년 미약하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력별 인구의 변화 양상은 전국적인 평균 교육 수준의 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8] 전국 시군구 집단별 평균 고학력자/저학력자 비율(2000~2015년)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7.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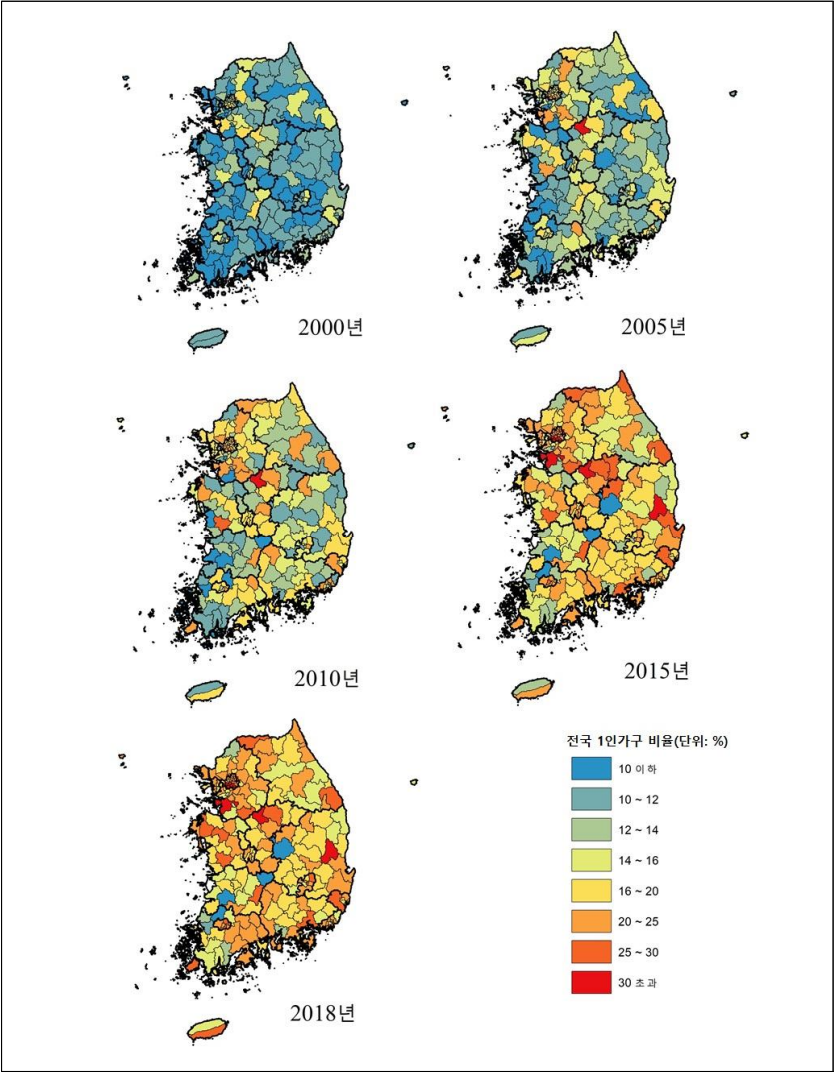
마. 1인 가구

우리나라의 최근 특징적인 인구구조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가구 형태 및 규모의 등장이다. 특히 보편적이었던 4인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청년 실업, 경제적 어려움, 결혼관 변화 등에 따른 결혼 지연, 별거 및 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 가구가 증가하는 등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강은택 외, 2016).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7.8%에서 2018년 31.8%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1인 가구는 3인 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이며,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37.3%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7).

1인 가구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1인 가구 중 약 1/3 정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고령 인구 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비율은 부모 부양에 관한 인식이 변모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소득,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47.2%에 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7년 기준 2.8% 수준으로 7.7%인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노인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5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9] 전국 1인 가구 비율(2000-2018)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 에서 2020.7.15.
인출.

〈표 3-11〉 1인 가구(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65세 미만 1인 가구	11.31	13.75	15.99	19.61	20.73
시군구 표준편차	2.79	3.87	4.48	5.18	5.08
65세 이상 독거노인	6.48	8.62	10.57	10.13	11.06
시군구 표준편차	4.51	5.98	6.81	5.66	5.61

주: 1) KOSIS 국가통계포털의 데이터를 저자가 재구성.

2) 일부 시군구의 경우 데이터 부족이나 행정구역 변화로 인한 결측값이 발생하여 연도별 관찰 값 수 N이 상이하였음

자료: 1) KOSIS 국가통계포털. 독거노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 에서 2020.7.18. 인출.

2) 통계청 홈페이지. 2020 고령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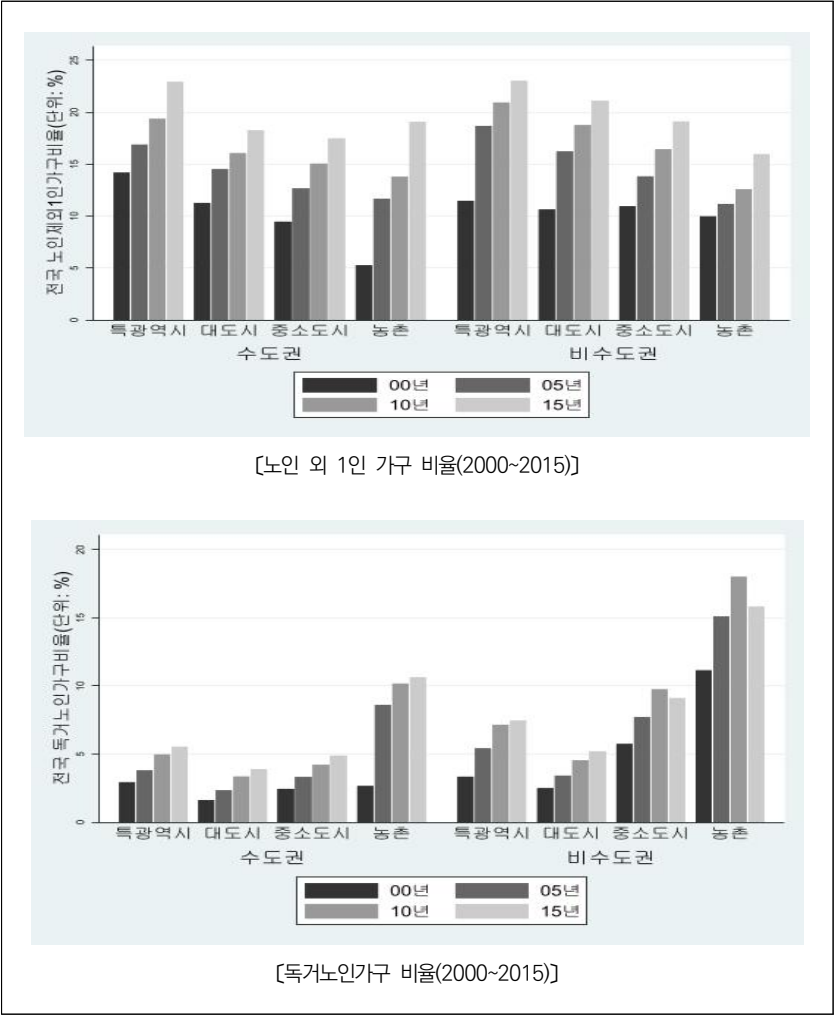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에서 2020.7.18. 인출.

전국에서 가장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고령화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화 지역에 속한다. 농촌에 속하는 경상남도 5개, 경북 6개, 전남 9개, 전북 3개 군에서 2018년 기준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20%를 상회했다. 마찬가지로 전국 독거노인 가구 비율의 지역 간 평균은 노인을 제외한 1인 가구 비율과는 반대로 농촌과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전국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비수도권 농촌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3-10], [그림 3-11] 참조)

노인은 사회 취약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사회의 지원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여 더욱 취약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고령화율 14.4%에 달하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및 포용도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가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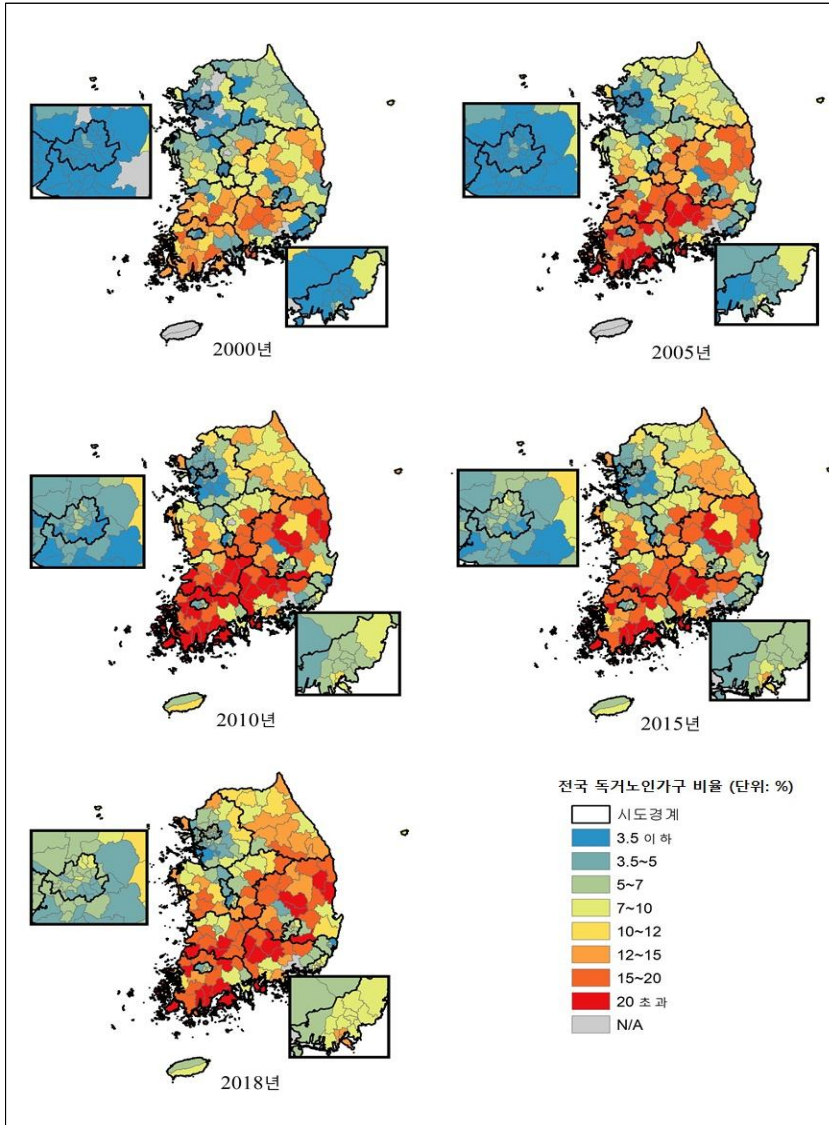
5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10] 전국 시군구 도시유형별 1인 가구 비율(2000~2018년)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독거노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에서
 2020.7.18. 인출.

[그림 3-11] 전국 독거노인 가구 비율(2000-2018)



주: KOSIS 독거노인가구비율 데이터를 저자가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독거노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에서
 2020.7.18. 인출.

바. 외국인 인구

전국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귀화 외국인을 포함한 전국 총 외국인 수는 2006년 54만 2307명에서 2018년 207만 757명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총인구를 기준으로 2006년 1%에 불과했던 외국인이 2018년 전국 총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표 3-12〉 참고).

2000년대 초반 외국인 인구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지역경제와 범죄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인구가 산업 차원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최경수, 2013; 김준형, 2016에서 재인용),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으로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저임금 국가로의 이전을 방지하여 경제기반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준형, 2016, 박철민·김경범, 2014). 특히, 미숙련 인력뿐 아니라 숙련 분야 및 전문직 역시 외국인 인구가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는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국제화와 외국인 인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외국인 비율

구분	2006	2010	2015	2018
외국인 인구수	542,307	1,143,076	1,746,550	2,070,757
시군구 표준편차	3127.57	6676.77	10953.05	12107.92
외국인 비율	1.15%	2.35%	3.42%	4.01%
시군구 표준편차	1.28	2.17	2.81	3.12

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인출하여 재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에서 2020.08.18. 인출.

2018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55만 명(32.5%), 서울특별시 45만 명(21.6%), 경상남도 12만 명(5.9%)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의 58.8%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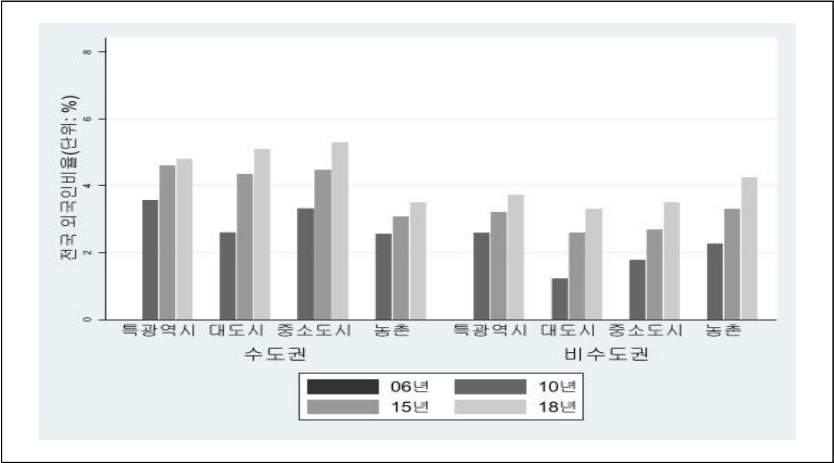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는 2006년의 경우 수도권에 73%가 집중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여 2018년에는 5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는 공업단지가 대거 자리 잡은 중소도시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6년 약 24만 명에서 2018년에는 5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3-12], [그림 3-13] 참조).

한편,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 약 9만 명에서 2018년 1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시기에 상관없이 55% 내외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왔으며, 특·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약 40%가량으로 높고, 중소도시에 약 30% 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6년의 경우 21%였으나, 시간에 따라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줄고 대도시에서의 비율이 늘어나 2018년 기준 약 9% 정도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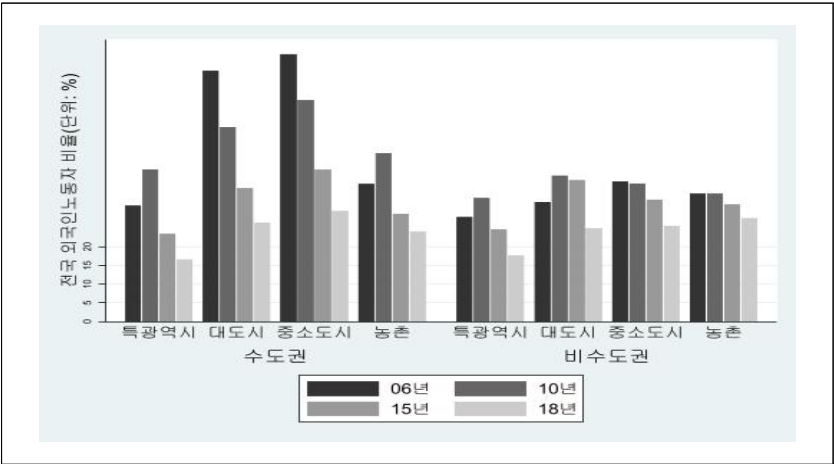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2010년 약 8만 명에서 2018년 16만 명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교육기관이 위치한 특·광역시에 약 63%가 거주하고 중소도시에는 약 20%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서울과 비수도권의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 외에도 전북 전주시, 강원도 춘천 등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별 대학이나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12] 전국 외국인 인구 비율(2006-2018)



[그림 3-13] 전국 도시유형별 평균 외국인노동자 비율(2006-2018)



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인출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에서 2020.08.18. 인출.

사. 생산가능인구

젊은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공급의 증대와 부양수요의 하락으로 인해 자본 축적 및 투자 여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Lee & Mason, 2006). 생산가능인구란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인구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서 인구구조 변화 분석에 활용되어 왔다.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약 33만 명에서 2018년 약 3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2000년 71.5%에서 2018년 72.9%로 크게 변화가 없으며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3-13〉 참고).

생산가능인구의 분포를 보면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000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퍼져있던 데 반하여, 2018년까지 점차 주요 특·광역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와 부산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4〉 참고). 전국 수도권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0년 72.7%에서 2018년 74.7%로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70.4%에서 71.1%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도시유형별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에는 71.0%에서 74.6%로, 중소도시의 경우 69.2%에서 71.5%로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였다(〈그림 3-15〉 참고).

〈표 3-13〉 전국 생산가능인구(2000~2018)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생산가능인구수	32,972,859	33,690,088	34,779,121	37,497,684	37,631,555
생산가능인구비율(%)	71.5	71.3	71.6	73.4	72.9

주: 1) 생산가능인구 비율 = (생산가능인구)/(총인구)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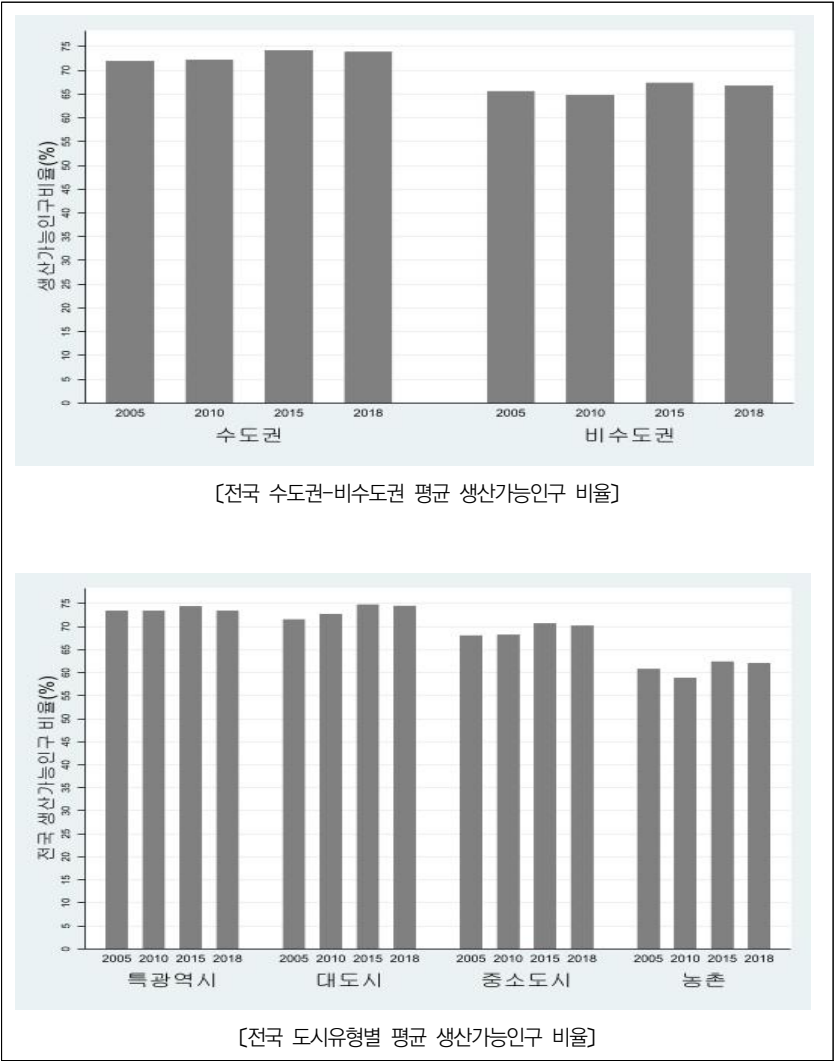
2)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의 연령 별 총인구수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에서 2020.7.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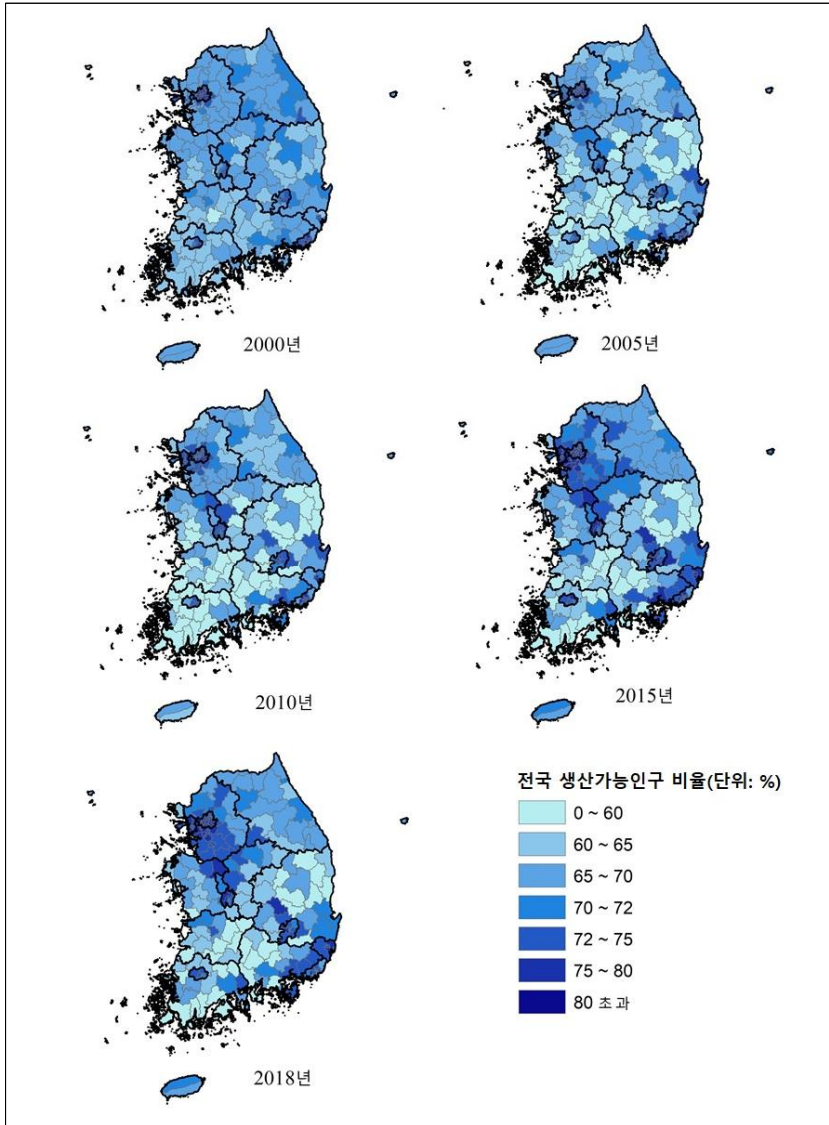
6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그림 3-14] 전국 도시유형별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2000-2018)



주: 1) 생산가능인구 비율 = (생산가능인구)/(총인구)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로 정의함.
2)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의 연령 별 총인구수를 저자가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에서
2020.7.15. 인출.

[그림 3-15] 전국 시군구 생산가능인구 비율(2000-2018)



주: KOSIS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저자가 가공 후 GIS를 활용하여 재구성.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1&tblId=DT_1YL21161에서
 2020.7.15. 인출.

4. 소결

본 절에서는 전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몇 가지 통계적으로 활용이 용이한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고, 그 추이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분석 방법에 활용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분류에 따라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네 가지 도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나타나는 각 인구 지표의 지역 간 격차 및 양상을 파악하였다.

먼저 총인구수는 2000년 약 4,770만 명에서 2019년 약 5,180만 명으로 증가해왔으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아 수는 빠르게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출생아 수 30만 명 수준이 위협받고 있으며, 반면에 고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감소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하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증가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23개 중 총 9개 지역이 경기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는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감소 상위 10%(또는 인구증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23개 지역 중에 11 지역이 전라남도에 속해 있다.

전국의 남녀 성비는 2000년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 대비 높았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녀 성비가 역전되어 2018년 여성의 인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성비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광역시의 경우 성비가 2000년 101.0에서 2018년 97.8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및 농촌의 경우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경향

에 있다. 또한, 수도권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 중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화율이 7%를 넘기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편입하였다. 노령화지수 또한 2000년에 비해 2018년에는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 광역시보다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더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는 노년부양비의 증가 및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복지, 주거 정책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의 인적자본을 살펴보면 고학력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고학력자 비율이 약 29%에 이르러 2000년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초고학력자 비율도 함께 상승하여 2015년 기준 약 4.5%의 인구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기준 약 24%의 인구가 저학력자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고학력자와 초고학력자 비율의 지역 간 표준편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역 간 고급 인적자본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7.8%에서 2018년 31.8%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체 1인 가구 중 약 1/3 정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소득,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4배 가량 증가하여 현재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한다.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기체류자를 포함하는 기타 외국인이며,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외국인 인구 중 약 2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외국인인 전체 외국인 인구 중 약 8%의 비율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수도권과 영남권의 집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촌 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과 동시에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비율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2절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집단별 특성

1. 배경

지역 간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랜 기간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었던 산업과 경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지역 공공재 및 어메니티, 삶의 질 등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Lewis, 1954; Tiebout, 1956; Todaro, 1981; Gupta, 1993; Bartel, 1979; Drakakis-Smith, 1996). 고전적으로 기대소득의 차이로 인해 인구가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이동한다고 하는 민간부문의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Todaro(1981)와 Gupta(1993)의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역시 1960년대 주로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1980년대 이후로부터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주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도심의 교외화 현상 역시 2000년대 전후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권상철, 2000). 1990년대 서울과 부산의 전출인구 수는 전입인구 대비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상철, 2000; 김창환, 2015).

산업화 시기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몰려들었다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의 이동 및 변화 양상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점차 삶의 질, 지역 공공재의 질(어메니티), 인간관계, 거주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및 국내의 인구이동과 관계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Clark, 2003; Mallender & Florida, 2006; 주미진, 2017; 강동우, 2016; 김창환, 2015; 이찬영, 2018). 더불어, 이러한 인구이동 요인의 다변화는 인구이동 자체의 인구 집단별 선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가령, 이찬영(2018)은 연령대별 인구 유출입 결정요인 분석하여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을 기점으로 하여 장·노년층의 인구이동에 있어 삶의 질과 어메니티에 의한 결정요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역시 최근 18년 간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에서 설명한 전국 시군구 간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와 집단별 선별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구이동이 인구 집단별, 도시 유형별로 어떠한 패턴과 경향을 보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전국 229개 시군구의 규모 및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기반으로,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네 가지 도시유형에 따른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여기에 인구 집단별 구분을 추가하여 청년(19~34세 인구), 중·장년(35세~65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세 가지 연령별 구분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경향 및 이에 대한 삶의 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 공공재, 거주환경 등 기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삶의 질과 인구이동의 영향에 대한 기초 분석을 기초로, 인구 집단별 인구이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 및 관련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2.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

가. 지역 간 총인구이동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을 보기 위해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간의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및 2018년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3-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역 간 이동의 시기별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전출지 지역 유형에 대해서 동일한 지역 유형의 전입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이동 중 특·광역시에서 특·광역시로의 이동이 약 35~40%로 우리나라 이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로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다른 도시 유형 역시 동일한 유형 간의 이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도시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시기마다 차이가 있으나 각각 전체 이동의 약 17% 내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모든 시기에 대해서 특·광역시의 순이동은 양(+)의 값으로, 전출인구에 비하여 전입인구가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의 경우에도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이동이 양으로 나타나 오히려 사회적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모든 시기에 있어 순이동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4〉 연도별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단위: 명)

200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3,687,680	280,844	464,086	219,593	155,546
대도시	360,851	937,458	238,559	106,613	-47,006
중소도시	552,468	265,451	1,327,656	170,992	-121,605
농촌	206,750	112,722	164,661	193,555	13,065
총유입	4,807,749	1,596,475	2,194,962	690,753	
인구대비 전입비율	21.60	21.44	18.83	14.58	
인구대비 전출비율	20.90	22.07	19.88	14.31	
2005(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4,727,026	303,547	460,600	164,575	106,482
대도시	361,401	1,636,907	275,102	86,616	-65,620
중소도시	521,901	280,540	2,238,639	140,929	-86,169
농촌	151,902	73,412	121,499	391,824	45,307
총유입	5,762,230	2,294,406	3,095,840	783,944	
인구대비 전입비율	25.90	26.53	24.54	20.81	
인구대비 전출비율	25.41	27.28	25.22	19.60	
201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4,177,299	314,862	387,260	142,458	152,759
대도시	388,446	1,695,062	272,595	79,257	-38,850
중소도시	461,826	307,772	2,069,702	125,532	-117,241
농촌	147,067	78,814	118,034	419,071	3,332
총유입	5,174,638	2,396,510	2,847,591	766,318	
인구대비 전입비율	23.12	23.72	22.86	21.02	
인구대비 전출비율	22.44	24.10	23.80	20.93	
201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4,727,026	303,547	460,600	164,575	184,184
대도시	361,401	1,636,907	275,102	86,616	-34,684
중소도시	521,901	280,540	2,238,639	140,929	-127,667
농촌	151,902	73,412	121,499	391,824	-21,833
총유입	5,762,230	2,294,406	3,095,840	783,944	
인구대비 전입비율	25.90	26.53	24.54	20.81	
인구대비 전출비율	25.41	27.28	25.22	19.60	
2018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3,439,667	294,052	328,485	113,523	184,920
대도시	368,628	1,772,863	260,610	69,743	-63,347
중소도시	440,869	275,757	1,706,202	101,821	-136,589
농촌	111,483	65,825	92,763	305,947	15,016
총유입	4,360,647	2,408,497	2,388,060	591,034	
인구대비 전입비율	19.29	19.23	18.46	16.57	
인구대비 전출비율	18.48	19.73	19.52	16.15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stat.go.kr>에서 2020.09.05. 인출.

한편, 특·광역시에서 전출하는 인구는 특·광역시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 순으로 이동하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다음으로 특·광역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이동한다. 한편 농촌의 경우 역시 동일한 지역 유형인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광역시,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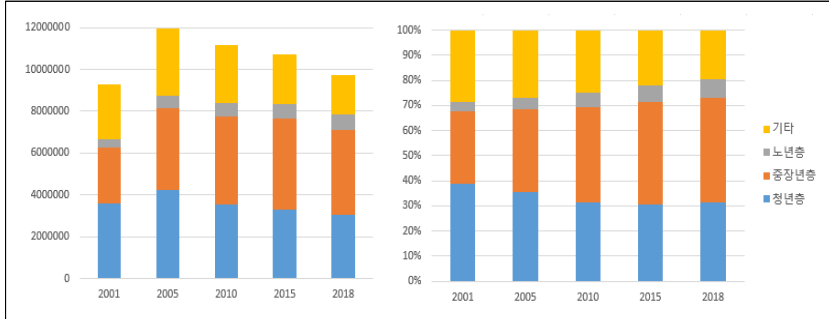
전체 인구 중 이동인구 비율을 측정하는 인구 이동성 측면에서는 특·광역시와 대도시의 이동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촌의 이동성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전국 인구이동의 시간적 추세를 보면 2000년에 비하여 2018년으로 갈수록 특·광역시로의 순이동은 여전히 양이나 전체 인구이동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반면에 대도시로의 순이동은 여전히 음이나 총이동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나. 지역 간 연령별 인구이동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이동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장년층의 이동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중장년층 비율이 29%에서 42%로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년층 역시 과 중장년층과 더불어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이동성만 소폭 감소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6] 연령별 인구이동 건수 및 비중(2000~2018)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0.09.05. 인출.

① 청년층

다른 연령 집단과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청년층의 경우 모든 시기에 대하여 농촌으로의 순이동이 모두 양의 값이라는 것이며, 이는 청년층의 농촌으로의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3-15 참고). 또한 농촌 전출 및 전입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동성, 즉 인구대비 전입 비율 또는 전출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청년 인구의 유입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유입 요인을 밝히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층의 인구이동은 우선 전체 인구이동과 유사하게 동일한 지역 유형 간 이동, 즉 특·광역시에서 특·광역시, 대도시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 유형에 있어 전출지 기준 약 30%의 청년층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이동 중 청년인구의 이동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7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3-15〉 연도별 청년층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단위: 명)

200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402,673	120,619	203,852	98,372	41,497
대도시	160,029	344,174	98,900	46,501	-40,139
중소도시	227,626	103,160	490,588	70,122	-36,126
농촌	76,685	41,512	62,030	68,625	34,768
총유입	1,867,013	609,465	855,370	283,620	
인구대비 전입비율	28.08	28.72	27.38	29.10	
인구대비 전출비율	27.45	30.61	28.54	25.53	
200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634,848	133,681	200,388	73,244	37,386
대도시	166,701	545,663	115,060	38,201	-45,168
중소도시	220,225	113,213	712,760	56,755	-28,942
농촌	57,773	27,900	45,803	109,748	36,724
총유입	2,079,547	820,457	1,074,011	277,948	
인구대비 전입비율	33.84	35.80	35.66	44.97	
인구대비 전출비율	33.23	37.77	36.62	39.03	
201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284,314	126,407	156,046	56,195	45,241
대도시	156,641	484,050	101,198	30,382	-26,382
중소도시	178,231	109,894	579,623	45,914	-38,002
농촌	49,017	25,538	38,793	99,114	19,143
총유입	1,668,203	745,889	875,660	231,605	
인구대비 전입비율	30.53	31.66	33.25	45.09	
인구대비 전출비율	29.71	32.78	34.69	41.37	
201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217,692	128,160	145,672	45,920	35,164
대도시	149,731	524,517	93,570	24,394	-21,620
중소도시	164,192	94,133	502,762	35,194	-22,366
농촌	40,993	23,782	31,911	70,848	8,822
총유입	1,572,608	770,592	773,915	176,356	
인구대비 전입비율	30.49	30.56	30.83	34.84	
인구대비 전출비율	29.81	31.41	31.72	33.10	
2018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077,121	132,516	144,343	45,886	13,660
대도시	144,873	505,505	95,086	24,795	-19,302
중소도시	158,032	93,950	452,917	33,366	-19,107
농촌	33,500	18,986	26,812	64,026	24,749
총유입	1,413,526	750,957	719,158	168,073	
인구대비 전입비율	29.24	29.45	30.30	35.68	
인구대비 전출비율	28.96	30.20	31.11	30.43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 에서 2020.09.05. 인출.

② 중장년층

중장년층의 경우 특·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유형에서는 모두 순이동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출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3-16〉 참고).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유출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중소도시와 농촌 인구의 각각 1% 이상의 중장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특히 유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장년층의 이동 경향은 결혼 이후 자녀의 출산, 육아, 교육 등 일생에서 경제활동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일 자리와 교육환경이 우수한 특·광역시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영한, 1984; 김형미·주경식, 2011). 한편 중장년층의 이동성은 청년층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전출지 기준 약 20%의 인구가 매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노년층

노년층의 인구이동 특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이동성이다(〈표 3-17〉 참고). 각 지역 유형별로 인구 대비 전입 및 전출비율이 전체 인구 이동 경향에 비하여 약 50% 정도 수준이며, 특히 농촌 노년층의 이동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주택, 교육, 환경보다는 건강, 가족 사유의 이동이 많은데 과거와 달리 부모 부양 경향이 감소하면서 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년층의 경우도 특·광역시로의 순이동이 모든 시기에 대하여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는 청년층과 유사하게 농촌으로의 순이동 또한 양으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노년층의 인구이동 경향에 대한 이주 동기 및 지역의 유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7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3-16〉 연도별 중장년층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단위: 명)

200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130,585	77,478	119,835	51,638	68,544
대도시	96,829	272,051	60,511	24,728	1,464
중소도시	158,615	73,842	361,542	42,071	-49,163
농촌	62,051	32,212	45,019	51,794	-20,845
총유입	1,448,080	455,583	586,907	170,231	
인구대비 전입비율	17.17	16.90	13.90	9.10	
인구대비 전출비율	16.36	16.85	15.06	10.22	
200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623,583	89,367	135,765	44,300	54,865
대도시	105,222	533,937	80,037	22,079	-8,820
중소도시	165,931	85,316	728,033	39,830	-36,030
농촌	53,144	23,835	39,245	131,651	-10,015
총유입	1,947,880	732,455	983,080	237,860	
인구대비 전입비율	21.23	21.33	19.61	15.49	
인구대비 전출비율	20.63	21.59	20.33	16.14	
201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634,176	110,889	132,128	48,527	74,129
대도시	136,988	649,006	94,806	26,712	-3,729
중소도시	168,065	112,311	777,832	42,967	-50,876
농촌	60,620	31,577	45,533	163,972	-19,524
총유입	1,999,849	903,783	1,050,299	282,178	
인구대비 전입비율	20.25	20.61	19.88	18.74	
인구대비 전출비율	19.50	20.69	20.85	20.03	
201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676,997	111,203	123,430	40,748	101,742
대도시	140,629	773,739	94,569	24,389	-3,735
중소도시	180,020	110,710	762,327	40,006	-70,059
농촌	56,474	33,939	42,678	137,369	-27,948
총유입	2,054,120	1,029,591	1,023,004	242,512	
인구대비 전입비율	19.62	19.26	17.93	16.04	
인구대비 전출비율	18.65	19.33	19.15	17.89	
2018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452,189	102,040	114,558	40,374	117,255
대도시	141,612	758,239	100,932	26,675	-21,331
중소도시	180,629	114,960	735,869	41,398	-79,172
농촌	51,986	30,888	42,325	139,766	-16,752
총유입	1,826,416	1,006,127	993,684	248,213	
인구대비 전입비율	17.43	17.25	16.85	16.22	
인구대비 전출비율	16.31	17.61	18.19	17.32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 에서 2020.09.05. 인출.

〈표 3-17〉 연도별 노년층 도시유형별 인구이동

(단위: 명)

200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129,238	11,449	19,604	13,522	8,121
대도시	15,164	31,067	9,158	5,508	-2,137
중소도시	24,496	10,717	48,642	8,268	-6,742
농촌	13,036	5,527	7,977	9,258	758
총유입	181,934	58,760	85,381	36,556	
인구대비 전입비율	14.73	15.22	8.76	4.74	
인구대비 전출비율	14.07	15.77	9.45	4.64	
200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207,830	14,295	24,830	14,212	4,769
대도시	17,499	65,540	13,108	6,315	-4,614
중소도시	27,829	12,769	107,539	9,535	-4,205
농촌	12,778	5,244	7,990	28,205	4,050
총유입	265,936	97,848	153,467	58,267	
인구대비 전입비율	16.14	17.26	11.84	6.82	
인구대비 전출비율	15.85	18.08	12.16	6.35	
2010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230,430	16,978	23,986	13,602	9,640
대도시	21,692	84,375	14,833	6,317	-3,196
중소도시	28,923	16,383	123,026	8,629	-7,085
농촌	13,591	6,285	8,031	41,355	641
총유입	294,636	124,021	169,876	69,903	
인구대비 전입비율	13.71	14.27	11.39	7.46	
인구대비 전출비율	13.26	14.64	11.87	7.39	
2015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279,051	17,984	22,681	11,326	18,030
대도시	26,612	109,900	14,963	5,711	-7,051
중소도시	30,866	15,950	119,703	7,469	-9,385
농촌	12,543	6,301	7,256	29,424	-1,594
총유입	349,072	150,135	164,603	53,930	
인구대비 전입비율	12.70	12.88	9.50	5.85	
인구대비 전출비율	12.04	13.49	10.04	6.02	
2018 (O\D)	특·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이동
특·광역시	270,014	17,596	21,949	11,886	20,241
대도시	26,808	115,413	16,254	6,577	-8,493
중소도시	32,304	17,347	122,229	8,385	-12,580
농촌	12,560	6,203	7,253	32,326	832
총유입	341,686	156,559	167,685	59,174	
인구대비 전입비율	10.98	11.09	8.81	6.13	
인구대비 전출비율	10.33	11.70	9.47	6.04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 에서 2020.09.05. 인출.

7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3-18〉 연령별 순인구이동률(%)

(단위 : 연령별 순인구유입수/해당 연령 인구수)

청년층	2000	2005	2010	2015	2018
특·광역시	0.62	0.61	0.83	0.68	0.28
대도시	-1.89	-1.97	-1.12	-0.86	-0.76
중소도시	-1.16	-0.96	-1.44	-0.89	-0.81
농촌	3.57	5.94	3.73	1.74	5.25
중장년층	2000	2005	2010	2015	2018
특·광역시	0.81	0.60	0.75	0.97	1.12
대도시	0.05	-0.26	-0.09	-0.07	-0.37
중소도시	-1.16	-0.72	-0.96	-1.23	-1.34
농촌	-1.11	-0.65	-1.30	-1.85	-1.09
노년층	2000	2005	2010	2015	2018
특·광역시	0.66	0.29	0.45	0.66	0.65
대도시	-0.55	-0.81	-0.37	-0.61	-0.60
중소도시	-0.69	-0.32	-0.48	-0.54	-0.66
농촌	0.10	0.47	0.07	-0.17	0.09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 에서 2020.09.05. 인출.

3.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 특성

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총인구이동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이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군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표 3-19〉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기에 공통적으로 전체 인구이동 중 수도권 시군구 간의 인구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수도권 시군구 간 인구이동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시간에 따라 전체 이동 중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은 2010년과 2015년에는 양의 값을 보이다가 2018년 들어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수가 전입하는 인구수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이동 특성

(단위: 명)

	수도권	비수도권	총유출
2000			
수도권	4,492,857	585,862	5,078,719
비수도권	449,757	3,761,463	4,211,220
총유입	4,942,614	4,347,325	
2005			
수도권	5,801,588	574,471	6,376,059
비수도권	445,712	5,114,649	5,560,361
총유입	6,247,300	5,689,120	
2010			
수도권	5,401,302	507,549	5,908,851
비수도권	476,523	4,799,683	5,276,206
총유입	5,877,825	5,307,232	
2015			
수도권	5,213,590	450,074	5,663,664
비수도권	483,023	4,560,974	5,043,997
총유입	5,696,613	5,011,048	
2018			
수도권	4,722,565	469,950	5,192,515
비수도권	410,152	4,145,571	4,555,723
총유입	5,132,717	4,615,521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 2020.09.05.에서 인출.

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령별 인구이동

청년층의 경우 모든 시기에 있어서 비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층의 유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으로의 순인구이동 비율, 즉 전입지 기준 청년 인구 대비 전입하는 청년 인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청년 인구는 7만 4,000명 정도로 비수도권 거주 전체 청년 인구의 약 1.5% 규모에 해당한다.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과는 달리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으로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높아, 순이동이 양(+)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인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5세에서 65세까지의 중장년층이 비수도권으로부터 지난 10년 간 계속하여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지역 간 이동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더 나은 경제기회, 교육환경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전출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중장년층과 유사하게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양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이동성은 낮으나, 이동 여건이 가능한 경우 의료 및 교통시설 등이 더 나은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0〉 수도권-비수도권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

(단위: 명)

O \ D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000						
수도권	1,699,007	299,696	1,375,319	124,283	163,104	25,102
비수도권	188,907	1,427,858	116,887	1,044,312	22,201	152,224
2005						
수도권	2,041,744	290,075	1,953,036	141,133	250,931	31,756
비수도권	192,709	1,727,435	133,898	1,673,208	26,832	265,999
2010						
수도권	1,665,634	239,651	2,096,385	146,499	294,115	31,640
비수도권	187,341	1,428,731	167,391	1,825,834	33,446	299,235
2015						
수도권	1,544,437	214,217	2,168,349	136,385	350,023	28,535
비수도권	182,973	1,351,844	184,830	1,859,663	32,801	306,381
2018						
수도권	1,442,843	229,862	2,015,153	142,823	346,304	29,696
비수도권	155,868	1,223,141	160,827	1,755,637	31,328	317,776

주: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재구성.

자료: MDIS 국가인구이동통계. <https://mdis.kostat.go.kr> 에서 2020.09.05. 인출.

6. 소결

본 절에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시기별,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을 지역 유형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인구이동 중 특·광역시에서 특·광역시로의 이동이 약 35~40%로 우리나라 이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분석 시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특·광역시와 농촌의 경우 순이동(2015년 농촌 제외)이 양(+)의 값으로,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모든 시기에 대하여 순이동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인구이동의 시간적 추세를 보면 2000년에 비하여 2018년으로 갈수록 특·광역시로의 순이동은 여전히 양(+)이지만, 전체 인구이동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반면에 대도시로의 순이동은 여전히 음(-)이지만 총이동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특·광역시 이외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지역 유형에 따른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 분석 결과, 청년층의 경우 모든 시기에 대해 특·광역시와 농촌으로의 순이동이 양(+)으로 나타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의 순이동은 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으로의 순이동이 양(+)으로 나타난 점은 다른 연령 인구 집단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이유 및 동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의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특·광역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유출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와 교육환경이 우수한 특·광역시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인구이동 특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이동성으로, 특히 농촌 노년층의 이동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특·광역시의 순이동이 모든 시기에 대하여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는 농촌의 순이동 또한 양으로 나타나 특·광역시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유출에 비하여 많음을 의미한다.



제4장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관계

제1절 지역 및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제2절 삶의 질 영향 변수 선정

제3절 인구 집단별 삶의 질과 관련 요인

제4절 인구 집단별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영향

제4장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관계

제1절 지역 및 인구 집단별 삶의 질

1. 삶의 만족도 조사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주어진 지역이 삶을 영위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주민의 삶의 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역시 개인 삶의 질에 대하여 설문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의 주관 하에 4년을 하나의 조사주기로 하며, 조사항목에 따라 1년, 2년, 4년마다 조사되고 있다. 이 중 삶의 질에 대한 항목은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약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설문은 응답자의 삶의 질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귀하의 삶에 (대체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응답은 10점 척도로 받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체가 개인의 삶의 질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만, 해당 설문을 통해 전국 시군구별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인구 집단별, 지역별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앞서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삶의 질의 척도로 보는 접근을 채택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MDIS를 통해 2011, 2015, 2017년

에 해당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구득하였다.²⁾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 등 많은 조사 및 통계자료들이 2010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수집되고 있어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2011, 2017년 결과를 각각 2010, 2018년의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현황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여기서 연령층의 구분은 만 19~34세를 청년층, 만 35~64세를 중장년층, 만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학력 구분은 중학교 졸업 이하를 저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을 고학력, 그 사이의 학력을 중학력으로 구분하였다. 각 연도별로 무응답, 모름 등의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은 약 22만 7천 건에 해당하며, 각 시군구별로 약 9백~1천 건에 이른다. 이 중 남성은 약 10만 2천, 여성은 12만 5천 건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응답자는 다소 감소하고 노년층의 응답자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또한 학력별 응답자 수 역시 시기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고 있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응답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응답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

2) 2019년에 조사된 자료는 2020년 9월 7일에 공개되어 이 연구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표 4-1〉 삶의 질 응답자 현황

구분		남성			여성			계 (%)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2011	저학력	185	14,159	15,868	294	26,107	30,663	87,276 (38.3)
	중학력	14,236	31,319	5,138	16,690	33,007	1,777	102,167 (44.9)
	고학력	5,299	14,394	1,794	6,594	9,481	316	37,878 (16.6)
	무응답	18	152	37	19	182	44	452 (0.2)
	소계	19,738	60,024	22,837	23,597	68,777	32,800	227,773 (100.0)
2015	저학력	166	10,767	16,857	305	19,939	33,638	81,672 (35.9)
	중학력	12,794	30,858	6,645	13,307	34,653	2,842	101,099 (44.5)
	고학력	5,744	16,138	2,392	7,509	11,991	562	44,336 (19.5)
	무응답	6	110	29	7	114	38	304 (0.1)
	소계	18,710	57,873	25,923	21,128	66,697	37,080	227,411 (100.0)
2017	저학력	138	9,344	17,526	275	17,441	35,080	79,804 (35.1)
	중학력	11,952	30,337	7,540	11,933	35,053	3,508	100,323 (44.1)
	고학력	5,484	17,111	2,684	7,412	13,754	714	47,159 (20.7)
	무응답	4	63	38	4	91	47	247 (0.1)
	소계	17,578	56,855	27,788	19,624	66,339	39,349	227,533 (100.0)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Main.do>에서 원시
자료 신청 후 2020.06.22. 수령하여 저자 재산출.

2. 연도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가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시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삶의 질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 집단별, 연도별 삶의 질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지역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두 단계에 걸쳐 계산되었다. 1차적으로 모든 응답자의 삶의 질 응답 점수에 대하여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후 각 지자체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앞서 산출된 지자체별 값에 대하여 각 지역 유형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각 지역 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의 평균을 각각 산출하였다.

분석의 시간단위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삶의 질 조사가 이루어진 2011, 2015, 2017년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집단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 노년층, 여성, 저학력층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으로는 전체인구는 물론, 각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위치에 해당하는 상대적 비빈곤층, 중장년층, 남성, 고학력층 등을 포함하였다.³⁾ 각 인구 집단 구분 기준은 <표 4-2>와 같다. 이때 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 특·광역시, 시, 군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2> 삶의 질 격차 분석을 위한 인구 집단 구분 기준

인구 집단 구분 기준	인구 집단	내용
소득	상대적 빈곤층	지자체별 개인소득 중위값의 1/2 미만 소득 집단
	상대적 비빈곤층	지자체별 개인소득 중위값의 1/2 이상 소득 집단
연령	청년층	연령 만 19~34세 해당하는 집단
	중장년층	연령 만 35~64세 해당하는 집단
	노년층	연령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
성별	남성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모든 연령층의 여성
학력	저학력층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
	고학력층	최종학력이 대학교(4년제) 졸업 이상인 집단

3) 소득과 성별의 경우 각각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연령과 학력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노년층을 보다 양호한 중장년층과 비교하였다. 반면에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학력층과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고졸, 전문대졸 등의 중학력층을 제외한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인구 집단별로 연도별, 지역별 삶의 질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 평균값을 활용하여 ANOVA 분석 및 사후분석(Tukey, Bonferroni)을 실행하였다.

가. 지역 유형에 따른 연도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 비교

2011, 2015, 2017년 삶의 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의 삶의 질은 2011년 6.63에서 2015년 6.76, 2017년 6.89로 약간씩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 유형 및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역시 시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3〉 참조).

지역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 특·광역시, 시 지역은 전국 평균 삶의 질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군 지역은 특·광역시를 비롯한 도시 지역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2015, 2017년에도 계속되어, 군 지역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는 다른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 2015년의 경우 수도권, 특·광역시, 시 지역의 삶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반면, 군 지역의 값은 크게 낮다. 즉 도시와 농촌(군) 지역의 삶의 질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다른 시기와는 달리 군 지역의 삶의 질과 전국 평균을 비롯한 도시지역 삶의 질 간의 차이가 0.05 내외로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군 지역의 삶의 질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집단별 삶의 질 평균값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고학력층, 청년층, 상대적 빈곤층으로, 삶의 질이 전체 인구의 평균적 삶의 질보다 양호하다. 삶의 질을 지역 유형과 함께 비교하면 고학력층과 청년층은 다른 인구 집단들과는 달리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더 양호하였고, 특히 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층의 경우 도시적 어메니티보다 친환경적 어메니티에 대한 선호가 더 높기 때문이며, 청년층의 경우 도시에서의 주거비용 및 혼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중장년층, 남성, 여성으로 전체 인구의 삶의 질과 가장 유사한 인구 집단이다. 이러한 인구 집단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나타내며, 지방으로 갈수록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성, 여성 집단과는 달리 중장년층의 경우 군 지역과 같은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그리 나쁘지 않다. 즉 중장년층의 삶의 질은 지역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지 않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은 지역 유형 보다는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집단은 상대적 빈곤층, 저학력층, 노년층으로,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하여 전체 인구의 평균적 삶의 질보다 낮다. 이 중 상대적 빈곤층과 저학력층의 경우 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어 수도권이나 특·광역시보다 양호하기도 하다.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2015년까지는 수도권이나 특·광역시의 삶의 질이 양호하였으나, 2017년에는 군 지역의 삶의 질이 특·광역시보다 양호하였다. 특히 저학력층의 경우 군 지역 저학력층의 삶의 질이 수도권 및 특·광역시 저학력층의 삶의 질보다 양호하기도 하다.

〈표 4-3〉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평균)

연도	지역유형	전체 인구	비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저학력	고학력
2011	전국	6.63	6.81	5.88	6.93	6.62	6.05	6.69	6.56	6.00	7.16
	수도권	6.64	6.80	5.93	6.91	6.61	6.13	6.70	6.59	6.00	7.13
	비수도권	6.61	6.81	5.83	6.95	6.63	5.98	6.69	6.54	6.00	7.19
	특·광역시	6.64	6.81	5.90	6.90	6.62	6.08	6.69	6.59	5.98	7.14
	시	6.64	6.82	5.87	6.94	6.63	6.05	6.71	6.57	6.01	7.16
	군	6.49	6.74	5.77	6.98	6.60	5.95	6.62	6.36	6.05	7.29
2015	전국	6.76	6.90	6.05	6.89	6.80	6.43	6.78	6.75	6.28	7.22
	수도권	6.77	6.89	6.08	6.88	6.78	6.53	6.78	6.77	6.30	7.18
	비수도권	6.75	6.91	6.02	6.90	6.82	6.33	6.78	6.73	6.25	7.26
	특·광역시	6.77	6.91	6.09	6.90	6.79	6.50	6.78	6.77	6.29	7.20
	시	6.77	6.90	6.02	6.87	6.82	6.38	6.78	6.75	6.26	7.23
	군	6.65	6.82	5.98	6.96	6.76	6.29	6.71	6.60	6.30	7.28
2017	전국	6.89	7.03	6.16	7.05	6.94	6.52	6.92	6.86	6.36	7.30
	수도권	6.91	7.04	6.20	7.02	6.95	6.61	6.94	6.89	6.38	7.29
	비수도권	6.86	7.02	6.11	7.08	6.93	6.43	6.91	6.82	6.35	7.31
	특·광역시	6.90	7.04	6.13	7.05	6.92	6.58	6.93	6.87	6.37	7.28
	시	6.89	7.02	6.18	7.03	6.95	6.47	6.92	6.86	6.34	7.30
	군	6.84	7.02	6.17	7.16	6.96	6.48	6.90	6.77	6.48	7.42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dMain.do>에서 원시
자료 신청 후 2020.06.22. 수령하여 저자 재산출.

지역 유형에 따른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의 표준편차 결과는 〈표 4-4〉와 같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 지역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2011, 2015, 2017년 삶의 질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각각 1.78, 1.76, 1.76으로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즉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별 삶의 질 격차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

면 수도권, 특·광역시, 시 지역은 전국의 값과 거의 비슷한 반면, 군 지역의 삶의 질 표준편차는 2011, 2015, 2017년별로 각각 1.84, 1.82, 1.86으로 다른 지역 유형에 비해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표준편차가 가장 큰 인구 집단, 즉 삶의 질 지역 격차가 가능 큰 인구 집단은 상대적 빈곤층, 저학력층, 노년층 등 앞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집단에 해당한다. 이는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집단이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커 일부 지역의 인구 집단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유형에 초점을 두었을 때, 상대적 빈곤층, 저학력층, 노년층의 지역 간 격차가 군 지역보다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 유형에서 더욱 크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삶의 질 지역 격차가 가능 작은 인구 집단은 고학력층이며, 다음으로는 청년층, 상대적 비빈곤층 등의 순이다. 이 세 집단은 앞서 전체 인구의 삶의 질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들 인구 집단은 상대적 빈곤층, 저학력층, 노년층 등 보다 취약한 인구 집단과는 달리, 표준편차 값이 지역 유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삶의 질 지역격차는 존재하되, 지역에 따라 그 격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빈곤층의 경우 군 지역에서 삶의 질 지역격차가 다른 지역 유형의 그것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체 인구의 삶의 질과 비슷한 수준인 중장년층, 남성, 여성의 경우 지역 격차 역시 평균적인 정도이다. 다만 다른 인구 집단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에서 지역 격차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수도권 및 특·광역시, 군 지역의 순으로 삶의 질 지역 격차가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표준편차)

연도	지역유형	전체 인구	비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저학력	고학력
2011	전국	1.78	1.68	1.97	1.62	1.77	1.94	1.78	1.77	1.92	1.54
	수도권	1.78	1.69	2.00	1.65	1.78	1.98	1.79	1.77	1.94	1.56
	비수도권	1.77	1.67	1.95	1.59	1.76	1.91	1.77	1.77	1.90	1.52
	특광역시	1.79	1.69	1.99	1.63	1.79	1.97	1.80	1.77	1.94	1.55
	시	1.76	1.66	1.95	1.61	1.75	1.92	1.75	1.76	1.91	1.53
	군	1.84	1.73	1.94	1.63	1.80	1.90	1.83	1.84	1.88	1.56
2015	전국	1.76	1.67	2.01	1.66	1.74	1.93	1.78	1.74	1.94	1.54
	수도권	1.76	1.68	2.01	1.67	1.75	1.95	1.79	1.73	1.99	1.55
	비수도권	1.76	1.66	2.00	1.65	1.73	1.91	1.78	1.74	1.89	1.54
	특광역시	1.76	1.66	2.01	1.65	1.75	1.93	1.78	1.73	1.95	1.56
	시	1.75	1.67	2.00	1.67	1.73	1.93	1.77	1.73	1.94	1.53
	군	1.82	1.73	1.99	1.65	1.76	1.93	1.82	1.82	1.90	1.55
2017	전국	1.76	1.67	2.01	1.65	1.72	1.96	1.76	1.75	1.98	1.54
	수도권	1.74	1.66	2.01	1.66	1.71	1.96	1.75	1.74	1.99	1.54
	비수도권	1.77	1.67	2.00	1.64	1.72	1.95	1.77	1.77	1.96	1.54
	특광역시	1.75	1.66	1.98	1.67	1.71	1.92	1.76	1.73	1.95	1.56
	시	1.75	1.66	2.02	1.63	1.71	1.98	1.74	1.75	2.01	1.52
	군	1.86	1.76	2.05	1.67	1.80	1.98	1.84	1.88	1.98	1.56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dMain.do>에서 원시
자료 신청 후 2020.06.22. 수령하여 저자 재산출.

나. 연도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격차 분석: ANOVA 및 사후분석

앞서 삶의 질 평균값을 통해 각 연도별, 인구 집단별로 그 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도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 평균값의 미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그러하다면 세부적으

9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로 어떠한 인구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과 인구 집단별로 ANOVA 및 사후분석(Tukey, Bonferroni)를 실시하였다.⁴⁾ 그 결과 일부 연도 간, 일부 인구 집단 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 간, 인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각 인구 집단별로 시간에 따른 삶의 질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해 앞서 대부분의 인구 집단이 시간에 따라 삶의 질 평균이 향상되었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학력층을 제외한 모든 인구 집단에서, 전 연도 간의 삶의 질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즉, 시간이 갈수록 거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 고학력층의 경우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삶의 질은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4-5〉 각 인구 집단별 시간에 따른 삶의 질 격차 분석 결과

인구 집단	ANOVA 분석 결과	사후분석 결과(Bonferroni)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층 비빈곤층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 여성 남성 저학력층	각 인구 집단별로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각 인구 집단별로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고학력층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2015~2017년 간 유의미한 차이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Main.do>에서 원시
자료 신청 후 2020.06.22. 수령하여 저자 재산출.

4)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1], [부록2] 참조

다음으로, 연도별 인구 집단 간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전체 인구와 각 인구 집단 간의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구성원이 가장 많은 중장년층이나, 남성, 여성 인구 집단의 경우 전체 인구의 삶의 질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가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2011년에는 전체인구와 남성의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이 또한 전체 인구와 중장년층 간 삶의 질 간 차이가 없었음을 빌어 볼 때 전체인구와 남성의 삶의 질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2015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와 남성 / 여성 / 중장년층 간의 삶의 질 차이가 없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삶의 질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15년부터 남성과 전체 인구 간 삶의 질 격차가 없거나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가운데 젠더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사회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각각의 인구 집단들 간의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삶의 질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빈곤층, 노년층, 저학력층 등의 경우 전체 인구는 물론 다른 인구 집단들과의 삶의 질 차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삶의 질에 도달하는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취약한 인구 집단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9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6〉 각 연도별 인구 집단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결과

구분	ANOVA 분석 결과	사후분석	
		Tukey	Bonferroni
2011년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모든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인구 집단 제외 전체 인구 - 중장년층 중장년층 - 남성 노년층 - 저학력층)	모든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인구 집단 제외 전체 인구 - 중장년층 중장년층 - 남성 노년층 - 저학력층)
2015년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모든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인구 집단 제외 전체 인구 - 중장년층 전체 인구 - 남성 전체 인구 - 여성 비빈곤층 - 청년 남성 - 중장년층 여성 - 중장년층 남성 - 여성)	모든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인구 집단 제외 전체 인구 - 중장년층 전체 인구 - 남성 전체 인구 - 여성 비빈곤층 - 청년 남성 - 중장년층 여성 - 중장년층 남성 - 여성)
2017년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모든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인구 집단 제외 전체 인구 - 중장년층 전체 인구 - 남성 전체 인구 - 여성 청년 - 비빈곤층 중장년층 - 남성)	모든 인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인구 집단 제외 전체 인구 - 중장년층 전체 인구 - 남성 전체 인구 - 여성 청년 - 비빈곤층 중장년층 - 남성)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dMain.do>에서 원시
자료 신청 후 2020.06.22. 수령하여 저자 재산출.

다.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t-test, ANOVA 및 사후분석

마지막으로 각 연도 및 인구집단별 ‘지역 간’ 삶의 질 평균값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지역 격차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때 지역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 이후, 검정 결과에 따라 등분산/이분산 t-test를 진행하였다. 이후 도시 규모에 따라 특·광역시, 시, 군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삶의 질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ANOVA 및 사후분석(Tukey, Bonferroni)을 실시하였다⁵⁾(표 4-7).

우선 전체 인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삶의 질 격차가 나타나지만 도시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과 2017년과는 상반된 결과가 2015년에 나타났으나, 이 때에도 특·광역시와 시 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상대적으로 더 도시화되고 다양한 자본이 집중된 곳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빈곤층 또한 전체 인구의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비빈곤층은 빈곤층에 비해 더 많은 인구가 포함된 만큼 전체 인구의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빈곤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있는 데에 반해 도시 규모별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표 4-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의 빈곤 집단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와 군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져 특·광역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이들 간의 격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년층은 다소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시간에 따라 점차 특·광역시, 시, 군 간 삶의 질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군에서의 삶의 질이 2011년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나, 2015년을 제외하면 특·광역시, 시와 삶의 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층과 청년층의 삶의 질 정책은 군 지역보다는 시 혹은 특·광역시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5)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3] 참조

9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7〉 각 인구 집단별, 연도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결과

집단	연도	t-test (수도권/비수도권)	ANOVA 및 사후분석(도시 규모별)	
			Tukey	Bonferroni
전체 인구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2017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비빈곤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2017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빈곤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2017			
청년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특·광역시-군)	
	2017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중장년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7			
노년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시-군)	
	2017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집단	연도	t-test (수도권/비수도권)	ANOVA 및 사후분석(도시 규모별)	
			Tukey	Bonferroni
남성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7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		
여성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2017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시·군)	
저학력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특·광역시-군6)	
	2017			
고학력층	2011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특·광역시-군)	
	2015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시·군)	
		2017	수도권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특·광역시/시/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 * 아래 지역 제외 (특·광역시-시)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dMain.do>에서 원시
자료 신청 후 2020.06.22. 수령하여 저자 재산출.

6) 사후분석에서 특·광역시와 군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Tukey는 $p=0.048$, Bonferroni는 $p=0.055$ 로 사실상 두 지역 간의 삶의 질 차이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층은 모든 지역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노년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뚜렷한 삶의 질 지역 격차가 나타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특·광역시와 시, 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삶의 질을 보여준다. 수도권과 특·광역시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도시화된 지역의 요소들이 노년층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전 연도에 걸쳐 지역 간 삶의 질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시간이 흘러도 지역 간 삶의 질의 차이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삶의 질 평균을 살펴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순, 그리고 특·광역시, 시, 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여성 또한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고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으며, 이에 따라 여성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도시화된 비수도권, 시, 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저학력층과 고학력층도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저학력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규모별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2017년에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군과 가장 낮은 시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반대로 고학력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유지되다 2017년에 격차가 사라진다. 한편, 군, 시, 특·광역시 순으로 높은 고학력층 삶의 질 평균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대부분의 인구 집단 간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각 집단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간 삶의

의 질 차이가 집단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약자 집단의 삶의 질이 전체 인구 또는 대응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격차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단과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 격차의 크기가 다르고, 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집단과 시기가 있기도 하다. 이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공공정책을 통하여 집단별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집단의 삶의 질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 하위 집단별 지역 간 격차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제2절 삶의 질 영향 변수 선정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나 지표 등을 포함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와 삶의 질 또는 행복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종합하여 이른바 삶의 질 지수, 행복지표 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한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평가하는 변수, 특히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100%에 준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변수는 되도록 제한하

였다. 예를 들어, 주택보급률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거와 관련하여 자주 고려되었던 변수지만, 주택의 질을 배제한 단순한 보급률은 지역 격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서 상하수도보급률 역시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제3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고령자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특성과 그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구규모, 인구증가율, 성비, 고령화율(노령화지수), 학력별 인구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넷째, 가능한 경우 취약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지표를 따로 반영하였다. 최근 일부 연구들은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를 개인 수준에 반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생태학적 오류를 고려하여,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들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변수에 대하여 소득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 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변수들 별도로 투입하여 생태학적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7개 부문 30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때 각 인구 집단별 값의 구별이 가능한 경우 전체의 값과 각 인구 집단별 값을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각 변수의 산출 방법은 <표 4-8>과 같다. 첫 번째 주거 부문의 변수들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⁷⁾, 노후주택비율,

공동주택 비율, 점유유형별 비율 등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경제 부문으로, 중위개인소득(ln)과 1인당 조세액(ln), 상대적 빈곤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고용률 등이 해당한다. 교육 부문의 변수로는 4년제 대학 진학률, 국가수준 학업진단평가 결과, 사설 학원 수 등 3개 변수가 있다. 보건복지 부문은 자살률, 사회복지예산 비중, 성인병 환자 비율, 의료기관 종사자 수(ln), 응급의료기관 수, 보육시설(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8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은 크게 세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는데, 지역사회관계 횟수(회/월)와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율, 투표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 및 여가 부문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문화생활 측면에서 영화관 좌석 수(ln)를 비롯하여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공공체육시설 등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안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강력범죄 수(ln), 교통사고 발생 건수(ln), 도시공원 면적(ln) 등 3개 변수를 구성하였다.

연도별, 인구 집단별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위의 7개 부문 30개 변수들과 함께 각 연도별 인구구조와 지역 유형을 통제하였다. 인구구조에 있어서는 인구규모와 인구밀도(또는 시가화구역 인구밀도⁸⁾), 청년비율 및 고령화율(또는 노령화지수), 고학력인구 비율 등을, 지역 구분으로는 수도권 여부와 7대 특·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군 등을 투입하였다.

7)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거하여 건교부장관이 2004년에 공고한 기준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시설(부엌, 화장실, 목욕 관련), 침실(가구원 고려한 방 수), 면적(가구원 수별 면적), 구조·성능·환경(내열, 방습, 방음, 난방, 재난 방지 등) 등 4개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자료의 여건 상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다(최은영·권순필, 2012).

8) 도시화구역 인구밀도는 지자체별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미지정지역을 합한 면적 대비 인구밀도를 의미한다.

10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8〉 삶의 질 영향 요인 변수

부문	지표명	내용	자료 자료(통계)	선행 연구
1. 주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지역별 평균 거래가 / 지역별 가구소득 중위값	부동산실거래가	박인권(2018, 2020), 박인권, 이민주(2016)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전체 가구 수 최저주거기준 이상 달성 가구 비율	통계청 협조자료	김용욱 외(2018)
	노후주택 비율	30년 이상 주택 비율	주택총조사	
	공동주택 비율	총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비율	주택총조사	
	월세 가구 비율	* 2018년은 2010, 2015 자료를 활용해 추정함.	인구센서스	
2. 경제	중위개입소득(In)	지자체별 개입소득의 중위값	지역사회건강조사	박인권(2018, 2020), 임보영, 마강래(2016), 서라벨, 정옥준(2019), 박인권, 이민주(2016)
	1인당 조세액(In)		시도 통계연보	
	상대적 빈곤율	지자체별 총 응답자 중 중위개입소득의 1/2 미만 응답자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박인권(2018, 2020), 박인권, 이민주(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임보영, 마강래(2016), 박인권, 이민주(2016), 이희철(2020)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생산활동 참여 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 * 구 지역은 2015년 2% 표본조사값과 시도별 고용조사의 차이를 2018년 값에 적용하여 추정	지역별고용조사 (mdis)	

부문	지표명	내용	자료 자료(통계)	선행 연구
3. 교육	4년제 대학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 * 70% 추출 자료 제공	EDSS	
	국가수준 학업진단평가 결과	총 과목, 수준에 따라 6개 지표로 구분하여 활용 - 보통 이상 비율(국어, 영어, 수학) - 기초 미달 비율(국어, 영어, 수학) *70% 추출 자료 제공	EDSS	
	사설학원 수	학령인구(만 3~18세) 천 명당 사설학원 수	교육기본통계	이희철(2020)
	자살률	인구 십만 명 당 자살 사망자 수	사망원인통계	
4. 보건 복지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자체 총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 분야 예산액의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구	임보영, 마강래(2016), 홍성효, 유수영(2012)
	성인병 환자 비율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 인원 평균값 / 성인인구 * 100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ln)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응급의료기관 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20조, 제31조에 의해 각각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통계연보	
	어린이집 정원 수(ln)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인구	
	노인장기요양기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수(ln) 2.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수(ln) 3.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ln)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10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문	지표명	내용	자료 자료(통계)	선행 연구
5. 사회 관계 및 참여	지역사회관계(회/월)	한 달간 이웃과의 사회활동 횟수	지역사회건강조사	박인권, 이민주(2016), 박인권(2018, 2020)
	사회활동 참여율	전체 인구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 인구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박인권, 이민주(2016), 박인권(2018, 2020)
	투표율	(투표자 수/선거인 수) *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인권, 이민주(2016), 박인권(2018, 2020)
	영화관 좌석 수(ln값)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극장 현황	
6. 문화 여가	여가활동 참여율	전체 인구 중 여가, 레저 활동에 한 달에 1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박인권(2020)
	공공체육시설	1. 공공체육시설 수(ln) 2. 공공체육시설 조성 면적(m2)(ln) 3. 공공체육시설 간이경기장 수(ln) 4. 공공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수(ln) 5. 공공체육시설 체력단련 및 부대편의 시설 수(ln) * 공공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강력범죄 수(ln)	* 강력범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경찰청	
	교통사고 발생건수 (ln)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7. 안전 및 환경	도시공원 면적(ln)	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 공원 제외	시도기본통계 주택건설 부문	김병석, 서원석(2014) 박인권(2018, 2020), 박인권, 이민주(2016), 임보영, 마강래(2016), 홍성효, 유수영(2012) 김성희(2008), 이희철(2020)

부문	지표명	내용	자료 자료(통계)	선행 연구
인구구조	인구 규모(ln)		인구센서스	
	인구 밀도(ln)		시도통계연보	
	사회화구역 인구밀도(ln)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미지정지역] 인구의 밀도	인구센서스	
	청년 비율	만 19~34세 인구 비율	인구센서스	
	고령화율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주민등록인구	
	노령화지수	만 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센서스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성비	여성 100명 당 남성의 수	인구센서스	
	고학력자 비율	만 25세 이상 인구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	인구센서스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율	만 15~64세 인구 비율	인구센서스	
	수도권			
	특·광역시			
지역유형	대도시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특·광역시 제외)		
	중소도시	그 외 도시		
	군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인구 집단별 삶의 질과 관련 요인

1. 연도별 삶의 질 관련 요인과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로 지역별 삶의 만족도는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11, 2015, 2017년 시기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29개⁹⁾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지역별 삶의 질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외관상 무상관 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각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4-9〉). 2011년의 경우 주거 부문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공동주택 비율, 경제 부문의 중위 개인소득, 1인당 조세액,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문화·여가 부문의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등 6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주거 부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임대(월세) 가구 비율, 경제 부문의 중위 개인소득, 1인당 조세액,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역응급센터 수,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지역사회관계 횟수, 문화·여가 부문의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영화관 좌석 수, 안전 및 환경 부문의 강력범죄수 등 10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주거 부문의 PIR, 임대(월세)가구 비율, 노후주택비율, 경제 부문의 중위 개인소득, 보건복지 부문의 지역응급센터 수,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수,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지역사회관계 횟수, 문화·여가 부문의 정기적

9) 기초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226개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전국 229개로 일관되도록 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율 등 8개 변수가 유의하였다.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주거 부문의 경우 2011년에는 주택의 질(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주택 유형(공동주택 비율) 등 주택의 구조적 특징이 중요한 변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주택가격(PIR), 점유유형(월세 가구 비율) 등의 경제적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주택의 질과 더불어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주택 가치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개인소득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시기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 1인당 조세액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7년을 제외하곤 유의하게 나타난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2017년의 경우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노인 장기요양시설 정원 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령화 현상에 대한 불가피한 결과인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2011년에는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2011년 이후 응급 의료서비스(지역응급센터 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삶의 만족도에 있어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변수들은 2011년에는 모형에 투입조차 되지 않았던 반면, 2015, 2017년에는 지역사회관계 횡수가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관계는 근거리 이웃과의 모임 및 활동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이는 삶의 만족도에 있어 (근거리)지역커뮤니티에서의 활동

과 참여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은 제외되거나 유의하지 않아, 보다 원거리 또는 다양한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거나 유의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기적 여가활동 비율과 영화관 좌석 수가 대체로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공공체육시설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공급이 차지하는 부분이 기대보다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안전 및 환경 부문과 관련하여 강력범죄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2015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문의 경우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한편 각 연도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정도는 인구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의 규모와 밀도, 연령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유의한 변수가 없는 데 반해, 2015년에는 인구밀도와 고령화율, 2017년에는 인구규모와 노령화지수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설명한다. 한편 고학력인구 비율은 모든 시기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유형 또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1, 2015년에는 특·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2017년에는 군 지역 등의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 연도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모형(SUREG) 결과

투입변수		2011	2015	2017
주거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0.0134 ***		
	공동주택 비율	-0.0048 ***	0.0020	
	PIR	-0.0104	0.0243 ***	0.0126 **
	점유유형(월세비율)		-0.0063 ***	-0.0062 **
	노후주택비율			-0.0036 **
경제	소득(ln_중위값)	0.1629 **	0.2150 ***	0.1077 **
	1인당 조세액(ln)	-0.0587 *	-0.1090 ***	
	고용률	0.0045		
	상대적 빈곤율	-0.0039		
교육	대학교입학률		0.0010	
보건복지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56 **	-0.0069 ***	
	지역응급센터 수	0.0078	0.0184 **	0.0247 **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수(ln)			0.0742 ***
	노인장기요양기관 수(ln)	-0.0453		
	노인여가복지시설 수(ln)	0.0005		
사회관계 및 참여	지역사회관계 횟수(회/월)		0.0313 ***	0.0284 ***
	정기적사회활동참여율		0.0054	
문화여가	정기적여가활동 참여율	0.0050 ***	0.0031 *	0.0032 *
	영화관 좌석수(ln)	0.0077	0.0074 *	
	공공체육시설 수(ln) (체력단련,부대시설)			0.0140
안전/환경	강력범죄 수(ln)	-0.0403	-0.0383 *	
인구구조	도시화지역 인구밀도(ln)		-0.0364 **	
	인구규모(ln)			-0.1118 ***
	고령화율	-0.0078	-0.0155 ***	
	노령화지수			-0.0008 ***
	고학력자 비율	0.0118 ***	0.0062 ***	0.0071 ***
지역더미	지역더미(7대 특·광역시)	0.1137 **	0.1114 **	0.0360
	지역더미(군)		0.0519	0.0751 *
_cons		4.9766 ***	5.9945 ***	6.4377 ***
R-sq		0.4852	0.5205	0.3836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의 질과 더불어 주거환경 여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가격과 점유유형 등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주택의 구조적 질과 함께 주거환경 및 어메니티가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경제 상황은 삶의 질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은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1인당 조세액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지는 불가피함을 넘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 여건,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넷째, 개인 삶의 질에 있어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와 참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웃과의 모임 및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향상됨은 이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지역 유형 등의 통제변수를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는 점차 특·광역시와 군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특·광역시의 경우 인구밀도는 높지만 다양한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군 지역은 도시적 어메니티는 부족하지만 혼잡도가 낮고 친환경적 여건과 슬로우 라이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구 집단별 삶의 질 관련 요인과 변화

가. 2011년 인구 집단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2011년 전체 인구의 삶의 만족도에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비율, 개인소득, 여가활동참여율, 고학력자비율 등의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공동주택비율, 1인당 조세액,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의 변수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특·광역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표 4-10〉 참조).

이 중 최저주거기준 이상 비율, 중위 개인소득, 여가활동 참여율, 고학력자 비율 등과 같이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일부 인구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비율,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청년, 여성에 대해서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빈곤층, 노년층, 저학력층 등 보다 취약한 인구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1인당 조세액의 경우 모든 취약 인구 집단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반면,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고학력층에서 조세액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인구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인구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PIR), 노후주택비율, 상대적 빈곤율, 강력범죄수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특정 인구 집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 인구의 그것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은 인구 집단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이를 인구 집단별로 보다 상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상대적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전체 인구 모형과 중복되는 변수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개인소득, 고학력층 비율 등으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노년층, 저학력층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전체 인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적인 변수들에는 노후주택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강력범죄 수, 영화관 좌석 수 등이 있다. 이 중 노후주택비율의 경우 삶의 질에 음(-)이 아닌, 양(+)의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이는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변수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주택의 노후화 대신 취할 수 있는 주거의 질과 경제적 편익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어떠한 변수도 저소득층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주거, 보건복지 관련 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노년층과 저학력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인구 집단이 삶의 질을 위한 관심을 보건복지보다는 주거와 경제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가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저소득층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모형은 물론 다른 인구 집단과도 구별되는 결과이다.

② 청년층

청년층 모형은 전체 인구 모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가운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사회활동참여율 변수가 차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청년층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청년층이 주택 마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서 사회참여 및 관계 부문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이 청년층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 특·광역시 사회활동 참여에 한해서는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특·광역시 청년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경험과 지식 습득 등 편익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구 집단과는 달리 특·광역시에서 청년층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인데, 이는 대도시에서의 혼잡비용과 더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노년층

노년층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노후주택비율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상대적 빈곤율과 강력범죄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저렴한 노후주택을 선호하지만, 주거환경(빈곤율,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보다 양호한 환경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노년층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영화관 좌석 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인구 집단의 삶의 질이 특·광역시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반해, 노년층의 경우 지역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여성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 인구 모형과 거의 동일하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비율, 개인소득, 여가활동 참여율, 고학력자비율 등의 변수가 긍정적 영향을, 공동주택비율,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의 변수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특·광역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전체 인구 모형과의 유일한 차이는 1인당 조세액으로,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저학력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학력층은 전체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사회적 빈곤층, 노인층과는 비교적 유사한 모형을 보인다. 전체 인구 모형과 중복되는 변수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개인소득 뿐이다.

추가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과 노후주택비율, 상대적 빈곤

율, 강력범죄 수, 청년층 비율 등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대부분 사회적 빈곤층, 노년층과 유사하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의 경우 저학력층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에 투입되어 있기에 주택 가격의 변화에 보다 민감함을 짐작케 한다. 이는 앞서 청년층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저학력층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문으로, 보건복지, 사회참여 및 관계, 여가 및 문화 부문 등이 있다. 특히 여가 및 문화 부문의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이나 영화관 좌석 수의 경우 모든 인구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저학력층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에게 있어 정기적인 여가활동이 쉽지 않을뿐더러, 경제 여건에 비해 그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함을 의미한다.

⑥ 고학력층

고학력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또한 전체 인구의 변수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체 인구 모형과 중복되는 변수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공동주택비율, 1인당 조세액, 고학력층 비율 등이며, 반면에 추가적인 변수로는 고용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인요양시설 수, 의료인력 수, 영화관 좌석 수, 강력범죄 수, 인구밀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 개인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반해 1인당 조세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학력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는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보다는 낮은 조세액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삶의 질에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과 의료 인력

수가 고학력층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데 반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노인요양시설 수, 강력범죄 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구밀도가 유일하게 고학력층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지역 유형(특·광역시)이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인구밀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2011년에는 전체적으로 특·광역시일수록 삶의 질이 더 좋지만, 고학력층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 2017년으로 갈수록 특·광역시와 농촌(군) 두 지역 모두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학력층의 경우 2011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10〉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결과(2011년)

변수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	노년층	여성	저학력층	고학력층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0.013 ***	0.016 ***	0.009 ***	0.015 ***	0.015 ***	0.017 ***	0.013 ***
공동주택 비율	-0.005 ***	-0.003	-0.003 *		-0.004		-0.006 ***
노후주택비율 PIR	-0.010	0.010 *	-0.024 **	0.013 ***	-0.014	0.013 ***	
소득(ln 중위값)	0.163 **	0.194 *	0.029	0.302 **	0.160 *	0.333 ***	0.076
1인당 조세액(ln)	-0.059 *	-0.036	-0.054		-0.046	-0.064	-0.118 ***
상대적 빈곤율	-0.004			-0.013 **	-0.005	-0.011 *	
고용율	0.005					0.006	0.011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비율		-0.056 ***					-0.022 *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6 ***		-0.008 ***		-0.006 **		
노인요양시설수(ln)	-0.045			0.051			-0.115 ***
의료인력 수(ln)							0.072 *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청년층			-0.014 ***				
특·광역시/청년층 사회활동참여율			0.024 **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0.005 ***	0.011	0.005 **	0.004	0.005 **	0.003	0.003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_저소득층		0.011 ***					
영화관 좌석 수(ln)	0.008	0.015 *		0.016 *	0.007	0.011	0.009 *
강력범죄수(ln)	-0.040	-0.068 *		-0.085 *	-0.032	-0.082 **	-0.065 **
고학력자 비율	0.012 ***	0.008 **	0.011 ***	0.015 ***	0.013 ***		0.006 ***
인구밀도(ln)		-0.038				-0.035	-0.033 ***
청년 비율			-0.010			0.012 *	
성비				0.009 *			
dum_특·광역시	0.114 **	0.121 *	-0.405 *		0.121 **		
월세 가구 비율			0.005				
사설학원 수			-0.010				
노인 대비 노인 요양시설 정원율		0.030					
여가복지시설수(ln)	0.000	0.001					
지역응급센터 수	0.008				0.008	0.010	0.015
지역사회관계(회/월)			0.018	0.025	0.013	0.023	-0.017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노년층				0.005			
고령화율	-0.008			0.013	-0.007		
dum_수도권				0.079			
C	4.977 ***	3.706 ***	6.853 ***	0.957	4.599 ***	2.183 **	6.657 ***
r2_a	0.444	0.289	0.212	0.310	0.467	0.188	0.319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나. 2015년 인구 집단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2015년 전체 인구의 삶의 질에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개인소득, 지역응급센터 수, 지역사회관계 횃수, 영화관 좌석 수,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고학력자 비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임대(월세)가구 비율, 1인당 조세액, 사회복지예산 비중, 강력범죄 수, 고령화율, 도시화구역 인구밀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역 유형 중 특·광역시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 중 PIR, 개인소득, 1인당 조세액은 모든 인구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변수들도 일부 인구 집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4-11).

한편, 전체 인구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 집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다수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층과 청년층이 전체 인구와 가장 달랐는데,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고용률, 빈곤율, 청년층 비율, 노령화지수가, 청년층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 의료인력 수, 보육시설 정원수, 출생률, 성비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인구규모, 노인요양시설 수,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 등이 일부 인구 집단들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2015년 인구 집단별 모형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 모형과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 모형의 차이가 가장 적다. 노년층과 여성층, 저소득층, 고소득층은 전체 인구 모형과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여성의 모형은 전체 인구 모형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사회적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전체 인구 모형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2010년과 달리 보건복지 부문과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인구 집단에서 지역사회관계 횃수 또는 정기적인 사회활

동 참여율이 유의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응급센터 수 또한 상대적 빈곤층, 노년층, 여성, 고학력층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청년층의 경우 의료인력 수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국 저학력층을 제외한 모든 인구 집단에서 의료여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유형과 관련하여 상대적 빈곤층과 노인층, 저학력층의 경우 전체 인구 모형과는 달리 특·광역시와 군 지역이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인구 집단의 경우 중소도시보다는 특·광역시와 농촌적 환경의 군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사회적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전체 인구 모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률, 상대적 빈곤율 등 경제적인 변수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다른 인구 집단과는 매우 구별되는 변수로 상대적 빈곤층의 삶의 만족도에 경제적 요인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저소득층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빈곤층의 경우 주변에 고소득층보다는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일 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대부분 인구 집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 여가 및 문화 부문 변수들은 제외되었다. 특히 지역사회관계 횃수,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은 2015년 들어 전체 인구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기예, 이러한 현상은 빈곤층에게 사회관계를 맺을만한 여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② 청년층

청년층 삶의 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유의하지 않았고, 보

육시설 정원은 유의하였으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인구 집단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에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인구 집단이 지역응급센터 수에 유의한 데 반해 청년층은 의료 인력 수에 유의하였다.

다른 인구 집단과는 달리 2010년부터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영향을 받았던 청년층은 2015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2010년에는 수도권에 한하여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유의했던 반면, 201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관계 횟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에 보다 중요한 변수임을 짐작케 한다.

③ 노년층 및 여성층

노년층의 경우 전체 인구 모형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변수는 거의 없고, 임대(월세)주택 비율, 사회복지예산 비중, 정기적 여가활동비율, 강력범죄 수 등 인구 전체 모형에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던 변수들이 제외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층 모형은 전체 인구의 모형과 더욱 비슷한 형태이다. 전체 인구 모형과 비교하여 강력범죄 수(-)가 제외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수(-)가 추가된 정도이다.

지역 유형과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모든 지역 유형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저학력층

저학력층 삶의 질에 있어 주거 부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데 반해,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주택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가 소유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더 유의한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관계 및 참여의 지역사회관계 횡수와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 모두 저학력층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 인구 집단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 고학력층

고학력층 모형 역시 전체 인구 모형과 거의 유사한 가운데,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지역사회관계 횡수는 유의하지 않고,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은 유의하다. 이는 근거리 이웃과의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의 관계 및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구구조 및 지역 유형 변수들과 관련이 없다. 즉 인구 규모나 밀도, 고령화율 등은 물론 지역유형 변수도 모두 제외되어, 고학력층의 삶의 질은 지역 유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4-11〉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결과(2015년)

구분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	노년층	여성	저학력층	고학력층
PIR	0.024 ***	0.039 ***	0.040 ***	0.042 ***	0.029 ***	0.034 ***	0.019 **
월세 가구 비율	-0.006 ***	-0.007	-0.009 *	-0.007	-0.008 ***	-0.009 **	-0.008 **
공동주택 비율	0.002		0.005 **		0.002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0.008			-0.011 *	
소득(ln 중위값)	0.215 ***	0.204 **	0.361 ***	0.224 **	0.177 ***	0.188 **	0.177 ***
1인당 조세액(ln)	-0.109 ***	-0.205 ***	-0.166 ***	-0.096 *	-0.122 ***	-0.128 ***	-0.078 **
고용율		0.010 *					
상대적 빈곤율		0.014 ***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7 ***	-0.009 **	-0.003	-0.006	-0.004 *	-0.007 **	-0.006 **
지역응급센터 수	0.018 **	0.029 **		0.031 **	0.028 ***		0.022 **
의료인력 수(ln)			0.118 ***				
보육시설 정원(ln)			-0.131 ***				
노인요양시설 수(ln)					-0.058 *		
지역사회관계(회/월)	0.031 ***		0.031 **	0.041 **	0.035 ***	0.057 ***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저학력층						0.009 *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고학력층							0.005 *
영화관 좌석 수(ln)	0.007 *		0.007	0.016 **	0.009 *	0.016 **	0.013 **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0.003 *				0.004 *		0.005 **
강력범죄 수(ln)	-0.038 *		-0.106 **		-0.030		-0.093 ***
도시화구역 인구밀도(ln)	-0.036 **	-0.061 *	-0.065 **	-0.024	-0.040 **	-0.056 **	-0.021
고령화율	-0.016 ***			-0.025 ***	-0.016 ***	-0.036 ***	-0.007
고학력자 비율	0.006 ***	0.010 ***		0.011 ***	0.007 ***	0.004	
노령화지수		-0.001 ***					
청년 비율		0.019 **	0.009				
합계출생률			0.140 *				0.074
성비			0.007 **	-0.006		-0.007 *	
인구규모(ln)				-0.082 *			
dum_특·광역시	0.111 **	0.176 **		0.145 *	0.053	0.166 **	0.095
dum_군	0.052	0.126 *		0.169 ***		0.142 **	

12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	노년층	여성	저학력층	고학력층
대학교진학률	0.001						
성인병 환자 비율		0.014					
지역사회관계(회/월)_저소득층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	0.005	0.006					
공공체육시설 수 (체력단련시설)(ln)			0.019				
자동차사고 수(ln)			-0.065				
도시공원 면적(ln)			0.021				0.014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노년층				0.004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여성					0.004		
투표율_여성					-0.004		
사설학원 수						0.00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0.014
C	5.995 ***	4.880 ***	6.477 ***	6.742 ***	6.749 ***	7.901 ***	6.934 ***
r2_a	0.481	0.280	0.267	0.378	0.501	0.239	0.242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다. 2017년 인구 집단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2017년 전체 인구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노후주택비율, 임대(월세)주택 비율, 개인소득, 지역응급센터 수, 노인장기요양시설 정원 수, 정기적 여가활동 비율, 인구규모, 고학력자 비율, 노령화지수 등이다. 이 중 지역사회관계 횟수와 고학력자 비율, 노령화지수 등의 변수는 다른 인구 집단에서도 비교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은 일부 인구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 인구 모형과는 구별된다. 또한 전체 인구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빈곤율, 1인당 조세액, 사회복지예산 비중, 강력범죄수, 청년층 비율 등 일부 인구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변수들도 있다(〈표 4-12〉 참조).

이는 앞선 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전체 인구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 2015년 등 이전 시기의 경우 일부 인구 집단은 전체 인구 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갖기도 한 반면, 2017년에는 그러한 인구 집단을 찾기 어렵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각 인구 집단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① 상대적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의 삶의 질은 경제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주거 부문에 있어서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PIR)가 유의했으며, 경제 부문의 소득과 빈곤율이 유의하였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 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일례로 지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수록, 빈곤층의 지역사회관계 횡수가 많을수록 상대적 빈곤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 및 여가 부문은 빈곤층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인구 규모나 인구밀도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지역유형(군)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주거비용이나 혼잡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② 청년층

청년층의 삶의 질에는 주거, 보건복지, 여가, 안전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낮은 반면, 지역사회관계 횡수 등의 사회관계 및 참여 관련 변수의 영

1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향을 받고 있다.

한편, 인구밀도, 청년층 비율, 노령화지수, 고학력층 비율 등 인구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역 더미 변수들은 모형에 투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수들을 통해 인구 규모는 작지만 젊은 지역을 선호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노년층

노년층 삶의 질에는 주거 부문과 보건복지 부문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노후주택비율, 임대(월세)주택 비율, 지역응급센터 수, 노인요양시설 수,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안전 부문의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과도 동일하다.

④ 여성

여성의 경우 주거 부문에서 노후주택비율만이 유의한 것으로 볼 때 주택의 가치보다는 주택의 질이 삶의 질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관계 횟수와 정기적인 여가활동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개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삶의 질에서 보건복지 관련 변수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하며, 강력범죄 또한 2011, 2015년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다만, 수도권 여성에 한하여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유형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농촌(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

⑤ 저학력층

저학력층의 삶의 질은 경제 부문보다는 주거 부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세가 아닐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반면, 중위 개인소득 등 경제 부문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자산이 대부분 주택에 투입된 바, 경제적 지위와 만족도를 주택에서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지역사회관계 횡수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투표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커뮤니티 활동에 긍정적인 데 반해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인구 집단과는 달리 고학력층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노령화지수, 지역 더미 변수를 통해 특·광역시와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고학력층

2017년 고학력층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거 및 경제 부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를 비롯하여 다른 인구 집단들과 비교하였을 때, 주거 및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 변수들은 더욱 강조되는데, 지역사회관계 횡수와 더불어 정기적 사회활동 변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12〉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결과(2017년)

	전체인구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	노년층	여성	저학력층	고학력층
PIR	0.013 **	0.018 *	0.008	0.022 **	0.011	0.025 ***	
노후주택비율	-0.004 **	-0.004	-0.003	-0.007 **	-0.005 **		
월세 가구 비율	-0.006 **			-0.008 *	-0.005	-0.008 *	
소득(ln 중위값)	0.108 **	0.177 *	0.069	0.128	0.121 *	0.122	
1인당 조세액(ln)			-0.118 ***	0.051			
상대적 빈곤율		0.012 **					
지역응급센터 수	0.025 **	0.029 *		0.051 ***	0.021	0.045 ***	0.019 *
노인요양시설정원(ln)	0.074 ***				0.053	0.055	
노인 대비 노인 요양시설 정원율		0.031 **					
노인요양시설수(ln)				0.117 *			
사회복지예산 비중				0.005 *			
지역사회관계(회/월)	0.028 ***		0.038 ***	0.038 **	0.019 *	0.028 *	0.043 ***
지역사회관계(회/월) _저소득층		0.060 ***					
정기적 사회활동 참여율_고학력층 투표율						-0.012 **	0.005 ***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	0.003 *		0.003	0.002	0.004 *		0.004 *
강력범죄수(ln)					-0.013	-0.091 *	
수도권/강력범죄(ln)					-0.076 **		
고학력자 비율	0.007 ***	0.008 **	0.006 **	0.008 **	0.006 **	0.002	0.005 **
노령화지수	-0.001 ***	-0.001 *	-0.001 *	-0.001	-0.001 **	-0.001 **	-0.001 ***
인구규모(ln)	-0.112 ***		-0.130 **	-0.216 ***	-0.103		
청년 비율			-0.013 *				-0.015 **
dum_수도권		0.088		0.088	0.597 **		0.069 *
dum_특·광역시	0.032					0.129 **	
dum_군	0.075 *	0.162 **			0.117 **	0.194 ***	
공공체육시설 수(ln) (체력단련/부대시설)	0.014	-0.007					
고용율							
의료인력 수(ln)			0.065		0.044		
공공체육시설 수(ln) (간이운동장 수)			0.036				
도시화구역 인구밀도(ln)			-0.038				
성인병 환자 비율				0.011			
영화관 좌석수(ln)					0.005	0.009	
인구밀도(ln)						-0.029	
C	6.438 ***	4.013 ***	8.562 ***	6.459 ***	6.302 ***	6.293 ***	6.964 ***
r2_a	0.345	0.240	0.143	0.209	0.331	0.132	0.195

자료: 저자 작성.

라. 소결

각 시기별로 모든 인구 집단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주로 주거, 경제 부문의 변수들로 제한되었으나 2015년, 2017년으로 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주거, 경제, 사회복지 분야가 주요 변수였던 반면, 2015년부터는 그와 더불어 보건의료, 사회관계 및 참여 관련 변수들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관계 횡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은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문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거 부문과 관련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택의 질에서 주거 환경, 주택 가격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이 모든 인구 집단의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5년 이후에는 모든 인구 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대신에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만이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일부 노후주택비율이나 월세 유형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이 제외된 것은 이 변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가보다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은 2011년 평균 85.9%에서 2017년 92.8%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편차도 6.6%에서 3.2%로 낮아진 바 있다.

둘째, 앞서 연도별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영향 요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 부문에서 사회복지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건의료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는데, 이는 모든 인구 집단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2011년 유의했던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음(-)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된 반면, 2015년 이후 지역응급센터 수에 대한 정(+)

의 영향력이 거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나타난다.

셋째, 사회참여 및 관계 부문은 2011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2015년부터 대부분 인구 집단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를 인구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유의한 영향력을 주었던 반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2011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인식도 인구 집단에 따라 대응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넷째, 여가 및 문화 부문의 경우 여성층, 고학력층에게는 전 기간에 걸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일부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제외된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11년 저소득층, 청년층의 삶의 질에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외 기간에는 영향이 없었다. 노년층의 경우 2011, 2015년에 비교적 적은 비용을 누릴 수 있는 영화관 좌석 수에 대해서만 유의하였고, 2017년에는 그마저도 영향이 없었다. 저학력층은 2015년 영화관 좌석 수에만 유의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인구 집단에 상관없이 인구 규모와 밀도, 고령화율(또는 노령화지수) 등의 인구구조 관련 변수는 2011년까지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 대부분의 인구 집단에 유의하게 작용한다.

제4절 인구 집단별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영향

1. 인구이동과 삶의 질 분석 모델 설정

삶의 질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전통모델 중 하나인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삶의 질 격차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기본 분석 모형으로 도입하였다. 분석 모델 기본은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ln(M_{ij}) = \beta_0 + \beta_1 \ln(pop_i) + \beta_2 \ln(pop_j) + \beta_3 \ln(distance_{ij}) + \beta_4 QOLdifference_{ij} + \epsilon_{ij}$$

i : 출발지, j : 도착지, pop : 인구, $distance$: i 와 j 간거리, $QOLdifference$: i 와 j 의 삶의 격차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대상 변수인 삶의 질 격차변수는 앞 절에서 사용되었던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이루어진 삶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모형은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인구 변수는 각 지점의 전입, 전출지의 인구수를 사용하였으며, 지역 간의 거리는 전입지의 중심점에서 전출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GIS로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지역별 분석모델에서는 각 지역별 인구이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더미변수와 삶의 질 격차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분석모델에서는 전입지의 해당 연령 인구 비율을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1, 2015, 2017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령별 인구이동 특징은 청년층,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영향

가. 전체 인구이동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시기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7년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인구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삶의 질 격차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인구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표 4-13). 2017년을 기준으로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을 때 삶의 질 격차가 0.1만큼 감소할수록 인구 이동량은 0.56% 증가했다. 삶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는 2015년의 경우, 인구이동 동기가 삶의 질 개선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 교육 환경(사설학원 수 등), 주택 요인(신도시 개발, 주택 가격 등), 주거환경(교통인프라 등) 등이 주요한 인구이동 동기로 논의(민보경, 변미리, 2017)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 대리변수는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한 변수로 앞서 논의된 삶의 질 관련 변수들을 충분히 대리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한 본 모형은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입지와 전출지의 인구 규모, 두 지역 간 거리 및 삶의 질 격차 변수가 인구이동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인구이동량 규모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지와 전출지 간의 거리는 1% 증가할수록 인구이동량은 0.9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거리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변수별 효과의 특별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4-13〉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730***	0.843***	0.780***
ln(전출지 인구)	0.762***	0.798***	0.792***
ln(지역간 거리)	-0.976***	-0.951***	-0.962***
삶의 질 격차	0.050***	-0.075***	0.056***
_cons	-3.230***	-5.313***	-4.393***
r2	0.680__	0.752__	0.753__

주: * p<0.10,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나. 연령대별 인구이동

연령대별 삶의 질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중장년층은 전체 인구이동 모형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어, 2011년과 2017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2015년에는 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인구이동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반면에 청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 시기에 따라 그 영향 효과가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인구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였다. 분석 시기 중 가장 최근인 2017년의 경우에는 삶의 질 격차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시기에 따라 삶의 질 변화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의 경우 전입지의 청년층 비율의 계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어, 청년층은 유사 연령대의 인구비율이 높은 곳으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입지의 청년층 비율이 1% 증가할 때, 인구이동량은 5.3% 증가한다.

중장년층의 경우, 전체 인구 이동 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1년과 2017년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삶의 질 격차 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본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은 전입지의 다른 요소들이 유입요인(pull factor(유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년층 이동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지역 간 거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거리가 1% 증가할 때 인구이동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거리에 따른 인구이동 규모의 탄력성이 1에 근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인구이동이 거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노년층의 경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2011년과 2017년에는 삶의 질이 인구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2015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는 다르게 삶의 질 개선이 커질수록 인구이동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삶의 질 격차가 연령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545***	0.656***	0.647***
ln(전출지 인구)	0.673***	0.837***	0.742***
ln(지역간 거리)	-0.861***	-0.864***	-0.854***
삶의 질 격차	0.035***	-0.135***	0.002
전입지 청년층 비율	0.016	0.041***	0.066***
_cons	-3.514***	-6.261***	-5.027***
r2	0.657	0.742	0.735
중장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563***	0.736***	0.658***
ln(전출지 인구)	0.678***	0.646***	0.723***
ln(지역간 거리)	-1.001***	-0.992***	-1.000***
삶의 질 격차	0.026***	-0.078***	0.072***
전입지 중장년층 비율	0.003***	0.007***	-0.007***
_cons	-0.933***	-2.976***	-2.285***
r2	0.664	0.731	0.720
노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433***	0.480***	0.524***
ln(전출지 인구)	0.380***	0.381***	0.419***
ln(지역간 거리)	-0.812***	-0.812***	-0.852***
삶의 질 격차	-0.009	0.049***	-0.001
전입지 노년층 비율	0.009***	0.010***	0.014***
_cons	0.808***	-0.043	-0.515***
r2	0.569	0.631	0.625

주: * p<0.10,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다. 수도권 전출 인구이동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전출지로 하는 인구이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이동 특성 비교를 위해 수도권 전입지와 삶의 질 격차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4-15〉 및 〈표 4-16〉 참조). 본 모델 결과에서 삶의 질 격차 변수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비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삶의 질 격차가 인구 이동수에 미치는 영향이고,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는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비수도권 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비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수에 미치는 순(net)영향은 삶의 질 격차 변수와 상호작용 변수 계수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앞서 논의된 전체 인구이동 모형과는 달리 모든 분석 시기에 대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인구이동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집중 시대에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수도권 내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비하여 삶의 질 개선에 따른 인구 이동량의 증가가 매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가 모두 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삶의 질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순영향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절대값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전체 인구이동모형에서 본 바와 같이 삶의 질 외에 다른 변수들이 유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5〉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수도권 전출)

변수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680***	0.855***	0.771***
ln(전출지 인구)	0.640***	0.872***	0.873***
ln(지역간 거리)	-0.800***	-0.727***	-0.786***
삶의 질 격차	0.208***	0.151***	0.170***
수도권전입지*삶의질 격차	-0.174***	-0.131***	-0.147***
_cons	-3.063***	-8.994***	-7.372***
r2	0.722	0.848	0.838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연령대별 삶의 질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전국 모형에 비하여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이 상이하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삶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2015년 제외)으로 이동인구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 2011년과 2017년 모두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비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0.1만큼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0.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과 2017년에는 영향의 방향이 상이하여 추세를 알기 어려우나,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으로부터 비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입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삶의 질 개선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비해 삶의 질 격차가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든 시기에 대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유입에 있어서도 삶의 질 개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순 영향은 정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 격차 변수 계수와 수도권 전입지 상호작용 변수 계수의 합이 '0'에 가까운 값을 가져 영향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비해서 모든 시기에 있어 삶의 질 개선이 인구 이동 규모 증가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노년층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1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가 2015년에는 삶의 질 격차가 정의 영향을 가진 반면, 2017년에는 부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7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노년층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동 규모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노년층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층과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비수도권으로의 이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2015년의 경우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삶의 질이 이동에 미치는 순영향 또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16〉 삶의 질 격차가 연령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수도권 전출)

청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686***	0.803***	0.789***
ln(전출지 인구)	0.568***	0.890***	0.796***
ln(지역간 거리)	-0.722***	-0.607***	-0.698***
삶의 질 격차	0.099***	-0.100***	0.044**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063	0.019	0.064
전입지 청년층 비율	0.028***	0.033***	0.039***
_cons	-4.688***	-11.488***	-9.360***
r2	0.710	0.818	0.824
중장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627***	0.799***	0.722***
ln(전출지 인구)	0.582***	0.767***	0.822***
ln(지역간 거리)	-0.814***	-0.839***	-0.850***
삶의 질 격차	0.186***	0.111***	0.197***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175***	-0.101**	-0.191***
전입지 중장년층 비율	-0.008***	0.001	-0.015***
_cons	-1.796***	-6.816***	-5.664***
r2	0.709	0.835	0.803
노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505***	0.669***	0.609***
ln(전출지 인구)	0.452***	0.527***	0.610***
ln(지역간 거리)	-0.743***	-0.769***	-0.786***
삶의 질 격차	-0.013	0.051***	-0.051***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010	0.116***	-0.026
전입지 노년층 비율	0.022***	0.027***	0.023***
_cons	-1.998***	-4.957***	-4.92***
r2	0.622	0.740	0.708

주: * p<0.10,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라. 비수도권 전출 인구이동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과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을 전출지로 하는 인구이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도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두 집단 간의 이동 특성 비교를 위해 수도권 전입지와 삶의 질 격차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4-17〉 및 〈표 4-18〉 참조).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2011년에는 삶의 질 개선이 인구이동에 정의 효과, 2015년에는 부의 효과가,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모든 시기에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표 4-17〉 삶의 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비수도권 전출)

변수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795***	0.891***	0.856***
ln(전출지 인구)	0.776***	0.782***	0.806***
ln(지역간 거리)	-1.173***	-1.172***	-1.168***
삶의 질 격차	0.041***	-0.156***	0.026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118***	0.075***	0.164***
_cons	-1.827***	-3.048***	-3.031***
r2	0.631	0.695	0.693

주: * p<0.10,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삶의 질 개선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1년은 정의 효과, 2015년은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삶의 질 개선이 인구 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삶의 질 개선의 순효과가 부로 나타나 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청년층 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2015년에는 삶의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동 규모가 증가하나, 2017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이동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삶의 질 격차 계수 절대값이 모든 분석 모델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 악화에 따른 이동인구 규모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2011년과 2017년 두 개의 시점에서 삶의 질이 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모든 시기에 대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동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도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복지 시설 등의 삶의 질 개선이 이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14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18〉 삶의 질 격차가 연령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비수도권 전출)

청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492***	0.596***	0.585***
ln(전출지 인구)	0.724***	0.813***	0.779***
ln(지역간 거리)	-0.105***	-1.084***	-1.060***
삶의 질 격차	0.036*	-0.156***	-0.007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085**	0.061**	-0.034
전입지 청년층 비율	0.103***	0.066***	0.097***
_cons	-2.341***	-2.882***	-2.977***
r2	0.675	0.680	0.678
중장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555***	0.717***	0.640**
ln(전출지 인구)	0.665***	0.637***	0.686***
ln(지역간 거리)	-1.173***	-1.165***	-1.166***
삶의 질 격차	0.010	-0.127***	0.078***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067**	-0.123***	-0.048
전입지 중장년층 비율	0.013***	0.015***	0.004***
_cons	0.865***	-0.889***	-0.058
r2	0.601	0.663	0.645
노년층	2011	2015	2017
ln(전입지 인구)	0.412***	0.388***	0.489***
ln(전출지 인구)	0.335***	0.319***	0.349***
ln(지역간 거리)	-0.939***	-0.849***	-0.969***
삶의 질 격차	-0.018	-0.024**	0.001
수도권전입지*삶의질격차	0.108***	0.240***	0.180***
전입지 노년층 비율	-0.002***	0.002***	0.006***
_cons	3.236***	2.392***	2.276***
r2	0.499	0.522	0.540

주: * p<0.10,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3. 청년의 이동과 삶의 질 요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구이동에 있어서 삶의 질을 비롯하여 전입/전출지의 인구 규모와 거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청년 인구이동을 사례로 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지방으로의 청년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군으로의 이동, 비수도권 도시에서 비수도권 군으로의 이동으로 구분하였다.¹⁰⁾

이를 위하여 본 장의 제2절에서 제시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기존 인구이동 모형에서 삶의 질 변수를 제외하고, 대신 총 30여 개의 삶의 질 영향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특히, 각 변수의 지역 간 차이를 변수화하여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였다.

청년의 지역 간 이동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입지와 전출지 간의 인구 규모와 거리가 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지역 특성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9〉).

먼저 주거요인은 수도권 청년들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 부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과 노후주택 비율의 차이는 모든 이동 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PIR의 경우는 주거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동시에 주거의 질을 대표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비수도권 도시 또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 본 연구의 분석 단위 및 데이터 구축 단위가 시군구이므로 통상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비수도권 도시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5개 특·광역시와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등의 시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과 특·광역시에 해당하는 일부 군의 경우 도 내 군 지역과는 구분되므로 도시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PIR의 감소를 경험하므로, PIR 차이와 청년인구 이동이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PIR 감소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더 많은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후주택 비율 차이가 청년인구 이동량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은 이미 신규주택에 대한 선호보다는 노후주택지가 주는 다른 어메니티 요소 또는 장소성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이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주택의 질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거 점유 유형의 경우 이동 유형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였다. 자가 점유 비율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농촌으로의 이동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월세 점유 비율은 반대로 농촌으로의 이동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은 자가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농촌으로의 이동은 월세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함을 의미한다.

경제 부문의 경우 가구소득과 고용률, 상대적 빈곤율이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 모형에서만 유의하고, 농촌으로의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으로의 청년 이동은 그 목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도시에서의 일자리와 소득이 그 중 하나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농촌으로의 청년 이동에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인당 조세액 변수는 모든 이동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사설학원 수가 도시로의 청년 이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바, 사설학원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변수는 앞 절에서 삶의 질 관련 변수로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청년의 거주지 이동, 특히 농촌으로의 이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 부문의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발병률, 노인요양시설 정원수 등이 청년 이동 모형에 전반적으로 정적 영향을, 노인여가복지 시설과 의료진 수 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병 발병률과 노인요양시설 정원수의 경우 지방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인병 발병률의 경우 개인 고유의 문제로 청년 이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효과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시설 수의 경우 전체 이동 모형과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농촌으로 이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촌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있어 지역응급센터가 중장년이나 노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4-19〉 청년 지역 간 이동 유형별 삶의 질 요인 분석 결과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비수도권 농촌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수도권 →비수도권 농촌	
출발지(O) 인구규모(ln)	1.058 ***	1.281 ***	0.815 ***	0.285 ***
도착지(D) 인구규모(ln)	0.576 **	0.455 **	0.503 **	0.677 ***
거리(ln)	-0.503 ***	-0.495 ***	-0.439 ***	-1.422 ***
도착지 청년 비율	7.916 ***	11.403 ***	6.196 ***	6.635 ***
PIR 차이	0.026 **	0.027 **	0.032 ***	0.037 *
노후주택 비율 차이	0.010 ***	0.008 ***	0.008 ***	0.025 ***
공동주택 비율 차이	0.017 ***	0.022 ***	0.016 ***	0.007
자가 비율 차이	0.015 ***	0.036 ***		
월세가구 비율 차이	-0.024 ***		-0.036 ***	-0.029 ***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차이	0.010	0.025 ***		
1인당 조세액(ln) 차이	-0.164 **	-0.158 **	-0.120 *	-0.120 **
중위소득(ln) 차이	0.120	0.400 ***	0.127	0.199
고용률 차이	0.010 **	0.030 ***		
상대적 빈곤율 차이		0.013 ***	-0.00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차이	0.025	0.023		0.051 ***
사설학원 차이	0.012		0.021 **	0.031 ***
성인병 발병률 차이	0.024 ***	0.015 ***	0.075 ***	
노인요양시설 정원(ln) 차이	0.227 ***	0.302 ***	0.115 **	
노인여가시설 수(ln) 차이	-0.320 ***	-0.387 ***	-0.228 ***	
의료진 수(ln) 차이	-0.129 *	-0.169 ***		-0.278 ***
지역응급센터 수 차이	0.036 **	0.046 ***		
사회복지예산 비중 차이	-0.004	-0.006 **	-0.006 *	0.005
사회활동참여율 차이	0.007 ***	0.007 **	0.007 ***	0.004 **
지역사회관계 횡수 차이	0.025	0.054 ***		
청년 투표율 차이	0.005	0.011 ***		
공공체육시설수(ln) 차이	-0.077 ***	-0.089 ***	-0.109 ***	-0.070 ***
영화관 좌석수(ln) 차이	0.011 *	0.011		-0.010
도시공원 면적(ln) 차이	0.048 **	0.089 ***		
강력범죄 수(ln) 차이	0.187 ***	0.246 ***	0.138 **	0.158
자동차 사고 수(ln) 차이	0.084 *			-0.106 **
경제활동인구 비율 차이	-0.034 ***	-0.077 ***	-0.019 *	0.035 ***
인구밀도(ln) 차이	-0.088 ***	-0.086 **	-0.054	-0.087 **
합계출산율 차이	-0.241 **	-1.200 ***		0.167 ***
노령화지수 차이	-0.002 ***	-0.001	-0.001 ***	-0.001 **
고학력인구 비율 차이			-0.005	-0.007 ***
대학교 입학률 차이	-0.001		-0.002	
자살율 차이	-0.004	-0.003		
보육시설 정원(ln) 차이	0.139	0.192	0.139	
_cons	-12.941 ***	-15.097 ***	-9.340 ***	5.813 ***
N	10,492	5,834	4,658	5,956
r2_a	0.803	0.832	0.625	0.585

주: * p<0.1, ** p<0.05, *** p<0.1. 음영은 지역 간 이동 유형별로 영향의 차이가 상이한 변수를 강조하기 위함.

자료: 저자 작성.

사회관계 및 참여 부문의 변수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참여율은 모든 이동 유형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청년은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도시나 농촌으로 주거지 이동에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역사회관계 횟수와 청년 투표율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청년 이동에 만 유의하였고, 농촌으로의 이동에는 영향이 없었다. 즉 보다 근거리 이웃과의 관계 및 활동은 비수도권 도시에서 활발하며, 농촌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아 이동의 요인이 되기는 불리함을 보여준다.

여가 및 문화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수가 모든 이동 유형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화관 좌석 수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이동의 전체 모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이동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안전 및 환경 부문의 도시공원 면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 모형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농촌으로의 이동에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의 경우 지정된 도시공원 외의 녹지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강력범죄 수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으로의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 도시에서 비수도권 농촌으로의 이동 모형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 또한 동일하게 비수도권 도시에서 비수도권 농촌으로의 이동 모형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비수도권 도시에서 비수도권 농촌으로의 청년 이동 유형이 인구밀도가 낮고 혼잡하지 않을 곳으로의 이동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구구조 관련 변수 중 인구밀도는 전반적으로 모든 이동 유형에서 부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비수도권의 도시와 농촌으로 이동하는 청년은 수도권 및 도시의 과밀을 벗어나 지방 도시 및 농촌의 여유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령화지수와 고학력 인구비율은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 유형에서는 영향이 없었고, 농촌으로의 이동 유형에만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 노인이 적거나 학령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하며, 고학력인구가 적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변수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도시로의 이동에는 부적인 영향을, 비수도권 도시에서 비수도권 농촌으로의 이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부호를 달리하였다. 즉,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경우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낮을수록 이동량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의 도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밀도와 혼잡도에서 차이가 있는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의 청년들의 선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 개선 혹은 악화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이동데이터와 삶의 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분석한 시기 중 2015년을 제외하고는 삶의 질 격차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동 규모가 크게 나타나, 삶의 질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하는 지역 특성별, 연령대별 삶의 질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도출되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연령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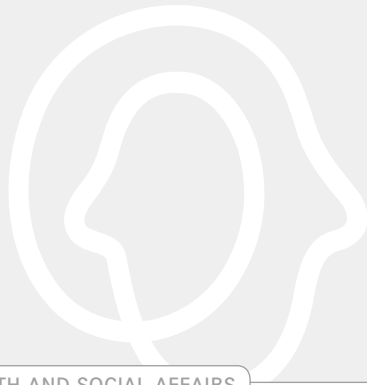
둘째,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수도권 전출-비수도

권 전입의 경우, 모든 시기에 대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연령대에 따라서도 삶의 질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2011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삶의 질 격차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시기에 따라 삶의 질 변화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이동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일관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삶의 질 차이보다는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청년층의 이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전체 인구 이동 특성과 유사하게 도출되어 2011년과 2017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인구 이동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7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인구이동 케이스에서 삶의 질 개선이 중장년층 인구이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017년의 결과는, 시기에 따라 경향성이 일관되게 도출되지 않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중장년층의 최근 인구 이동에 있어 삶의 질 개선이 주요한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유의하게 도출된 경우에도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삶의 질 개선이 노년층 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삶의 질 격차에 대한 대응 전략

제1절 정책대상 및 정책과제

제2절 국내외 정책사례

제3절 주요정책 대상별 대응전략

제5장 삶의 질 격차에 대한 대응 전략

제1절 정책대상 및 정책과제

앞서 각 연도별로 지역 유형, 인구 집단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지역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도시보다는 농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하여 모든 정책적 노력을 비수도권과 농촌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대안이다. 이는 소득,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분야를 달리 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수요는 개인과 세부 집단별 요구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차원의 수요가 지역 내 거주민 개개인의 정책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야만 보다 효율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책 타겟팅을 위하여 각 인구 집단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정책 분야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분석하였던 연도별, 인구 집단별, 지역 유형별 삶의 질 평균 및 표준편차와 영향 요인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책 대상 지역의 도출

빈곤층의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는 물론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 특히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수도권의 특·광역시에서

도 삶의 질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은 비수도권의 특·광역시와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노년층 역시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수도권으로 거주지 이동에 삶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삶의 질 표준편차가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삶의 질이 더 높지만 지자체 간 삶의 질 격차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학력층의 삶의 질은 빈곤층, 노년층과 함께 전체인구의 삶의 질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 더 낮은 값을 보인다. 즉, 저학력층의 삶의 질이 수도권을 비롯한 특·광역시와 농촌(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도시에서 가장 낮은 삶의 질을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도시적 어메니티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친환경적 어메니티는 농촌에 비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삶의 질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다만 다른 지역유형과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삶의 질보다 높은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다른 인구 집단과는 달리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삶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의 삶의 질 정책은 수도권 특·광역시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고, 비수도권과 농촌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세부 인구 집단과 그 특

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에서 빈곤층, 노년층, 여성을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주요한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도권과 특·광역시 지역은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저학력층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할 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인구 집단별로 정책 투입 우선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정책을 투입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전체인구 공통 과제

전체 인구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정책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에 있어 점차 주거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자체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 내 열악한 주거환경의 정비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 여건 확충이 중요하다. 최근으로 올수록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사회가 된 지금 지역응급센

터의 유무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관계에 대한 요구가 크다. 전 인구 집단에 있어서 이웃과의 주기적인 모임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의 장(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수도권이나 특·광역시 등 대도시의 삶의 질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군 지역에서도 삶의 질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농촌만이 갖는 슬로우라이프, 친환경적 어메니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인구 집단별 정책 과제

각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층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경제적 지표에 특히 민감한 경향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데, 특히 사회관계 및 참여, 여가 및 문화 부문의 변수들은 빈곤층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빈곤층이 사회관계나 활동에 참여할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층은 지역 내 빈곤율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커뮤니티의 동질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커뮤니티 활동 및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특·광역시와 농촌지역이 삶의 질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삶의 질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상황과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지역사회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주거

지원 정책과 함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유효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 삶의 질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더 낮게 나타나므로, 대도시 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노년층의 경우 정기적인 여가활동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영화관에 대한 요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년층의 지역사회관계는 또 다른 의미의 여가활동일 수 있는 만큼, 노년층에게 있어 여가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년층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많지 않다. 아직 활동량이 많은 60~70대 노년층에게 있어 도시 내 여가 시설은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노래교실, 콜라텍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노년층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보다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여가 거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 내 지역 격차가 크므로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층의 경우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매우 유사한데, 그 중 특징적인 것은 주택의 질과 주거 환경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은 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므로 주택의 질은 물론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안전시설이나 환경 등도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 당연히 여성 삶의 질은 비수도권과 농촌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따라서 안전이나 친환경 등 비수도권 및 농촌 지역에서 여성층에 호소할 수 있는 어메니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학력층 역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민감하다. 다만 청년층과 달리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학력층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인 주택가격의 상승에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여가문화 부문의 변수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학력층의 삶의 질은 중소도시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중소도시 지자체만의 차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국내외 정책사례

1. 전체인구 공통 정책사례

가. 사회적 외로움 해소 정책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 중 하나는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적 외로움은 공통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인 친구나 동료집단, 이웃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붕괴되었을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상실감, 지루함, 사회적 배제의 감정 등(최현영 외, 2016)을 말한다. 이때 ‘사회적 관계’의 양보다도,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신인철, 최지원, 2019).

또한 이 ‘사회적 외로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애착 대상이 없어서 느끼는 쓸쓸한 감정, 불안한 상태인 ‘정서적 외로움’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외로움은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빈약한 경우 나타나는 감정인만큼, 사회적 통합감을 느끼면 해소될 수 있다(최현영 외, 2016). 즉, 지역사회 관점에서 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외로움을 해

소하는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참여 및 관계 부문의 요인들이 전체 인구뿐 아니라 각 인구 집단의 삶의 질에도 점차 중요해지는 변수로 도출된 결과는 사회적 외로움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즉,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충분한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사회적 외로움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영국은 일찍이 사회적 외로움 문제를 제기했던 조 콕스(Jo Cox) 노동당 의원의 뜻을 기려 설립한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를 계기로,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2018년 1월 체육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 담당 장관으로 겸직 임명하였다. ‘외로움부(部) 장관’은 사회적 외로움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대응 전략 마련, 각종 단체 자금 지원 역할 등을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 개인 등 다양한 차원의 거버넌스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정책 구조를 갖춘 것이 영국 외로움 정책의 핵심이다. 중앙정부는 일관된 조치를 도입하고 촉매제로서 기능하는 한편, 민간은 더욱 개인과 밀착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주도형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맡은 것 또한 특징이다.

스코틀랜드 또한 2017년부터 외로움 문제 대응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2월 “A Connected Scotland”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조직은 국가실행그룹(National Implementation Group)으로,

‘고령자와 평등을 위한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여 타 부처와의 연계 및 장기적 전략 이행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단체가 파트너로 참여한다(Scottish Government, 2018).

나.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사회적 외로움 해소 정책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2004.1.16. 제정)은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전체의 지역 간,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목표¹¹⁾로 한다.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을 기초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국가균형발전 계획, 특수상 황지역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¹²⁾된다.

여기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계획¹³⁾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먼저 관계 중앙행정 기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부처가 작성하는 부문별 계획안과 광역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시도 발전계획안을 토대로 수립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11)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균특법 제1조)

12) 균특법 제4조 제2항

13) 균특법 제4조 제1항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외에도 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도시사업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재생사업이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균특법에 의거하여 접경지역(15개 시군), 도서지역(19개 시군구, 185개 도서)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주민소득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관리하며,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1.14. 제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환경 정비 및 시설보수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때 정책 대상에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지역¹⁴⁾이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균특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3.5. 제정)에 의거하여 읍,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진행¹⁵⁾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2014.1.28. 제정)에 의거하여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꾸려갈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평가·컨설팅·심의를

14)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15)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homepage/main.krc>)

거쳐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에서 법정문화도시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¹⁶⁾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재생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이 존재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제, 공동체, 생활서비스, 주거환경, 경관, 개발 등의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인구 집단별 정책사례

가. 청년층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및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수의 지원 정책이 일자리 및 고용 지원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을 위한 주거 및 고용 분야의 지원의 한 예로 ‘청년 희망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산재 보호 적용 직종 확대, 군 장병 복지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부처별 대략적인 청년 일자리 및 주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표 5-1). 더불어, 국내에서 실시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중 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낸 지자체별 사례를 소개한다.

16)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표 5-1〉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내용 정리

정부 부처	사업 및 내용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지역정착 유도, 창업 지원 및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한 민간취업 연계 독려 등 시행
고용노동부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제공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위한 사업 도모

주: 「온라인 청년센터」의 정보를 가공하여 저자가 재구성.

자료: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2020.12.7. 인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역 주도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최초 목표를 창업에 수월한 물리적, 경제적 여건 조성에 맞추어 소셜벤처 허브를 구축하는 등, 청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주거 여건의 향상에 힘썼다.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역 주도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왕십리 도선동 패션·봉제 사업,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성수동 수제화 등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내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시장 판로개척 등 기업·유지정책 마련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변 시세의 70~80%의 임대료로 입주 가능한 성동안심상가 등 지역의 자생성에 크게 이바지했다(서울자치신문, 2020년 10월 5일 기사; 청솔뉴스, 2020년 10월 6일 기사).

그 외, 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청년 인구의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군 지역으로서, 청년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폈다. 영광군에서 실시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치 정책으로는 청년 취업 활동 수당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이 있다. 영광군은 청년 취업 활동 수당을 통해 대상이 되는 45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했다. 또한, 청년 희망

디딤돌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여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함께 적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한 사업이다(영광신문 2020년 6월 15일 기사). 이와 관련하여, 영광군은 2020년 기준 인구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고용률 및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의 개선이 나타난 점을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의 성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충북 진천군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 유치 이후 인구 증가율 7.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자체별 사례들은 일자리 및 기업 유치 정책이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역사회의 인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 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가 선행되어 다수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Cahuc et al. 2013; Nissen et al. 1998).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Job Corps 프로그램이다. 이는 청년 1인당 미화 16,500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참여자 별 개인이 도합 1,000시간 이상의 훈련과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 대다수가 소득의 증가와 수료 후 높은 취업률을 보여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관리자의 역량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들 수 있다(Cahuc et al. 2013).

반면, 선진국의 사례 중에서 일부 성과가 저조했던 사례들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의 경우 비용 대비 낮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여 도입에 있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김문정·이수형, 2020). 앞서 영광군 등 국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청년 자

립 정책들이 청년 이주율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들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장·단기적으로 기여하는 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2012년 고용시장에서 청년의 모빌리티가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니트족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하여, 이 정책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일부 임시직에 한한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Gallo et al. 2017).

정책의 기대 효과 및 편익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을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성과 연계채권과 같은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책도구의 활용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OECD 2019). 더불어, 다양한 청년이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위험 관리들의 사례를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다면 앞서 언급된 정책들의 시행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주거 지원

한국의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주거 보증금 및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저렴한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 자산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경우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ISA 통장(금융위원회) 외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다(〈표 5-2〉).

〈표 5-2〉 부처별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내용 정리

정부 부처	사업 및 내용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
금융위원회	청년형 ISA 및 대출상품 운영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돈마련을 독려하는 금융상품 지원을 통해 청년 계층의 복지와 주거 안정을 도모

주: 「온라인 청년센터」의 정보를 가공하여 저자가 재구성.
자료: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2020.12.7. 인출.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의 사업의 경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의 경우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주택 공급과 각종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주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계획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주택 공급 및 교육, 여가 관련 주거환경 및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도록 하였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2개 군에 걸쳐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력개발, 기타 서비스 기능 군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테크노폴리스 구현을 도모한 사업으로 2006년 입지 선정 이래 총 11개 기관이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였다. 진천군의 2015년~2018년 기간 연간 인구 증가율은 5.5%로 전체 시군구 중 9위 수준으로 나타난다(국가통계포털 2018). 앞선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주거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의 조성¹⁷⁾은 일자리 증가를

17) 여기에서 사회 서비스 인프라는 신설했던 학교, 도서관, 영화관, 체육시설 등 교육 및 여가와 관련된 도시 인프라를 말한다.

통한 지방 이주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과 및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으로, 그 효과와 효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주거 지원 부문에서도 최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주택 공급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형성하는 주택기금을 통한 공급 방식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5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협회들이 전체 스톡의 35%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이들은 전국차원의 협회를 구성하여 임대료 수익의 1%로 기금을 형성하며, 정부와의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된 사회적 주택기금(Social Housing Grantee Fund, SHGF)이 이들 협회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금리 우대조건의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구조이다. 핀란드 역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과 지원이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용의 35%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이재춘, 2016).

영국의 경우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런던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높은 임대료가 주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임금의 40% 미만의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는 세어형 청년 주택의 공급 사례도 있다.¹⁸⁾ 이 외에도, 세어하우스 임대료 지원 사업 및 주택 보유가 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의 공동소유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

18) 영국 Thames Valley Housing 주택 협회(housing association)이 공급한 'Fizzy Living'의 사례로 자세한 내용은 Rugg & Quilgard(2015)를 참조.

한 제도 및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실제 청년층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아니었음에도 2000~2010년 기간 공동소유주택 소유주의 2/3이 17~24세 사이의 청년으로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ugg & Quilgard, 2015).

3) 교육 지원

앞서 일자리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층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의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통해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 진로 교육의 연계 및 확산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 기회의 제공 및 자기 계발의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지방 교육예산을 2014년 25억 원에서 2018년 55억 원까지 늘리는 정책을 시도하고, 성동혁신 교육지구를 지정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학령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동구가 2013~2015년 기간 대비 2016~2018년 기간에 초등학교 순 전출 인구의 감소가 나타난 점을 보도한 것은 위와 같은 정책의 잠정적 성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출산·보육 지원

출산·육아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 중인 산모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 비용

을 지원하는 등 출산·육아를 경험하는 산모의 고용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육아휴직 및 고용 보장을 위한 복지 차원의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육아휴직이 3년 동안 가능하고, 자녀 교육 수당 등 아동 연령별 수당제도 및 직업 활동에 대한 선택보조금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당제도는 부모의 직업 상황(직업중단 및 실업)이 아이의 교육 및 성장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가정 내 보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시간제 보육이 제도화된 점 등은 프랑스에서 자녀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복지 정책이 철저하게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혼한 부부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족수당과 보육비가 제공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독일과 스웨덴 등 여타 유럽국가 역시 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안기훈, 2018).

전라북도의 경우 특히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설립, 분만 의료취약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낮은 혼인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솔로엔딩 연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만 20세부터 49세의 미혼 남녀에게 개인별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구광역시 북구 역시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여, 신혼부부의 결혼 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아이가 넷 이상인 가정에 대형 차량의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⁹⁾

위와 같은 내용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이 2013년 이래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

19) 지자체 별 사례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수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방식’을 도입함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보건복지부, 2018). 이 외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등 우리나라 역시 모자보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사업은 다수 유럽 및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일례로, 서울특별시가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호주의 ‘산모나 아동기 지속적 가정방문 프로그램’(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앞서 미국보건부가 시행하여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UNICEF 홈페이지). 더불어 프랑스의 경우 다수 유럽국가 중에서도 모자보건 정책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일반보건소와 별도로 모자보건소를 운영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가 별도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인데, 향후 모자보건 서비스 인프라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성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단위와 일치하며, 이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5가지 추진 목표에 따라 각 우수 사례를 파악하였다²⁰⁾(〈표 5-3〉).

먼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잘 구축한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들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부서별 사업

20) 여성 대상 정책은 ‘여성가족부(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여성가족부(2017),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와 ‘대전세종연구원(2019),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발굴 과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 실적을 실적심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여성친화도시 발굴 과제 수, 여성친화도시 계획과 추진 과제와의 정합성, 과제 추진 실적, 여성 인재은행 활용 실적 등을 주요 업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적 차원에서부터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또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한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달서구는 여성 일자리 지원단을 설치하고 재취업 연계 사업을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²¹⁾ 달서구는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주부들을 발굴하여 직업 교육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범죄 안전 취약성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 강원도 강릉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릉시는 2010년부터 ‘마을 생활 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꾸준히 도시 인프라 안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이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친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발전시킨 바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다양한 행정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하드림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시민참여단도 함께 한 이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서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안전 귀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가는 중이다.

21)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확보.

17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표 5-3〉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따른 우수 사례

목표	세부 목표	우수 사례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2.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대구광역시 달서구
3. 지역사회 안전증진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강원도 강릉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광주광역시 북구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 여성가족부(2016), 여성가족부(2017), 대전세종연구원(2019)의 자료를 재구성.

자료: 1) 여성가족부(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2) 여성가족부(2017).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3) 주혜진·이선민·장은정·이유라(2019),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전 세종연구원.

여성친화도시의 또 다른 목표는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노동 현상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광주광역시 북구는 여성친화 특화마을을 운영하였다. 도서관 및 경로당에서는 방학 및 방과 후 저녁 단시간 돌봄 교실을 시행하여 맞벌이 가정에게 시급한 저녁 단시간 돌봄을 해결하고, 경로당과 연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세대 간 교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 돌봄미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 안심 골목길 조성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내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들 수 있다. 사상구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여성들이 제시한 여성친화적 공간 구상이 적용된 성평등 도서관, ‘우먼 라이브러리’를 운영 중이다. 해당 도서관에서는 지역 여성들이 여성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도서를 대여하고, 취미활동이나 소모임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은 그러나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부서 간 협업이 어렵고, 협의체나 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동시에, 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통한 ‘광역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본 연구의 자문회의²²⁾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지적된 바,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3절에서 함께 논의하였다.

다. 노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우수 정책 사례는 WHO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점검 영역 5가지로 통합하여, 해당 영역에 따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²³⁾(〈표 5-4〉). 먼저 노년층은 타 집단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증진시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면서 내부에 노년층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리옹 인력거(Cyclopusse)를 도입하여 노년층의 이동성 증진 외에도 운전자 채용을 통한 인력 고용 효과, 친환경 교통수단 마련, 교통수단 외부 광고 부착을 통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도모하였다.

미국 브루클린에서는 노인들이 가까운 상점이나 의료기관으로 낮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노인전용버스를 운영 중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지역사회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택시 바우처를

22) 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한다.

23) 고령친화도시 우수 사례는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정은하(2016),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계와도시 12호 특집2, 서울시’, ‘경기복지재단(201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 ‘서울시 복지국(201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지급하는 한편, 보행이 어려운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거리 곳곳에 설치하는 City Bench Program을 진행하였다. 미국 전역과 호주에서는 운전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도로 위험 요인이 급증하지 않도록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정보 관련 웹사이트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만큼, 노년층이 살아가는 주택과 주거지의 환경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노년층이 자신의 신체 노화를 고려하여 특히 중점을 두고 수리할 부분이 어디인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년층의 집수리 공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이 본인이 살아가던 거주지에서 높은 삶의 질과 함께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 부천시는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면서 노년층에 특화된 다목적 쉼터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 이들의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미국 뉴욕, 아일랜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스페인 오르티시아 등에서는 고령친화 비즈니스 안내서를 배포하여 지역 내 상점들이 노년층 고객을 대하는 태도, 노년층에게 편리한 매장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와 영국 런던에서는 노년층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노년층에게 지속적인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것도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프랑스나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캔버라에서는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노인 채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

에는 노인 인력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5-4〉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 사례

영역	주요 내용	우수 사례
이동성 증진	-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및 편의 환경 구축 - 고령자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고령친화마을 내 이동 접근성 증진(경기도 수원시) - 리옹 인력거(프랑스) - 노인전용버스(미국 브루클린) - 택시 바우처, City Bench Program(미국 뉴욕) -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보 제공(미국, 호주)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외부환경 개선	-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 설계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제고 -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 정보 제공 및 도구 대여(미국) - 집수리 공사 지원(독일 레겐스부르크)
여가 및 사회참여, 통합 증진	-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 고령자의 가족, 사회, 문화, 종교, 여가활동 접근성 제고 -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 고령친화마을 내 노년층 여가 공간 마련(경기도 부천시) - 고령친화 비즈니스 안내서(미국 뉴욕, 아일랜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스페인 오르티시아) - 아웃리치 서비스(캐나다, 영국 런던)
일자리 제공 및 의사소통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 -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의 확대 -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 노인 채용 사업장 대상 안내서 배부(프랑스, 캐나다 온타리오, 호주 캔버라)
지역사회 연계 건강 서비스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 지역사회 연계 치매 관리(서울특별시) - 마켓라이드, 그린카트(미국 뉴욕)

주: 아래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자료: 1)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 정은하(2016),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계와도시 12호 특집2, 서울시.

3) 경기복지재단(201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

4) 서울시 복지국(201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마지막으로 노년층에게는 전반적인 노화에 대응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전이다. 이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년층에게 보다 밀접하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령친화도시의 점진 지표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고 치매토탈케어시스템을 운영하며,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환경 관련 가이드북과 관련 생활 법률지식 책자를 무료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wi-fi)를 활용한 치매 노인 실종방지 지원, 영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시행 등의 방안도 마련해두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뉴욕에서는 노년층의 자가 건강 관리를 독려하는 마켓라이드, 그린카트 정책을 통해 노년층이 스스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마트 이동을 돕거나, 채소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라. 기타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구집단으로는 ‘창조계급’을 들 수 있다. Florida(2004)는 창조도시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두 요소가 갖춰진 공간에는 창조계급이 모여든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창조도시’ 환경을 조성하면 고학력층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업무의 ‘재미’를 중시(경기연구원, 2017)하는 만큼,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터와 놀이터를 마련하는 것은 창조도시 조성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이 창조도시 조성을 통해 고학력층의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 간 인력 및 삶의 질 격

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도시 정책 사례는 주로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²⁴⁾(표 5-5).

먼저 영국에서 경제 기반이 쇠퇴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던 지역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킨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런던 내 전통적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에 문화산업 연계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문화적 색채가 가미된 도시 디자인으로 새롭게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2014년 기준 창조산업이 국세 중 차지하는 세액은 약 1,682억 달러, 창조경제 창출 일자리 규모는 전체 일자리의 8.8%에 해당하는 약 280만 개, 창조경제에 의한 수출물량은 전체의 8.7%인 179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표 5-5〉 창조도시 조성 우수 사례

사례	목표 및 주요 내용
영국	- 전통적 도시경제 쇠퇴 및 도심공동화현상에 대응. - 전통적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에 문화적 색채와 도시 디자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문화산업 연계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함. - 지역 축제를 주민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
호주	- 미래 자원고갈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90년대부터 창조 및 문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임. - 정권 변화나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추진 강도 격차가 큼.
홍콩	- 디자인을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를 장기 양성 지원정책 실시, 예술가 및 예술 벤처 지원사업 시행. - 디자인 위크 시행 및 판매행사 장려. - 다양한 문화산업 장르를 통합해 지원.

주: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자료: 1) 경기연구원(2017).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2) 신동호(2016), 호주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멜버른의 멜버른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630-641.

3) 이병민(2016).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영국의 테크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24) 해당 사례는 '경기연구원(2017).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신동호(2016), 호주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멜버른의 멜버른시를 사례로', '이병민(2016),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영국의 테크시티 정책을 중심으로'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미래에 찾아올 자원고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창조도시 조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90년대부터 창조 및 문화산업에 주목하여 창조산업 관련 고용변화는 전반적으로 8~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 정권 변화나 각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 창조 문화산업의 추진 강도 격차는 큰 편이다.

홍콩은 특히 '예술'에 집중한 창조도시 우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장기 양성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예술벤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디자인 위크를 시행하여 판매행사를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산업 장르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홍콩 문화산업은 2017년 기준, 그 규모가 GNP의 5% 정도인 약 1000억 홍콩달러, 약 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성과에 이르게 되었다.

제3절 주요정책 대상별 대응전략

1.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전략

이상으로 실증 분석 결과 및 삶의 질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였을 때,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전략은 일반적인 정책으로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해당하는 지역 유형(수도권-비수도권, 특광역시-대도시-중소도시-농촌)과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집단 유형(성별, 연령, 학력, 소득별)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조합하여, 지역의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삶의 질 격차 모니터링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삶의 질의 지역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때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역 평균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정책 대상이 되는 집단 또한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주체, 지표와 평가항목, 평가 방법, 피드백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 재설정

모니터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각기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계층에게 집중하여 세분화된 특화 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새로운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불균형적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재설계

한편,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불균형에 있다. 따라서 인프라와 서비스 전달체계 부문을 재설계함으로써 해당 부문에서의 지역 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및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균형적 전달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초 공공서비스의 전달의 지역 간 균

형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설계도 요구된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책임을 맡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하되, 국가와 LH의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지방화를 달성해야 한다.

라. 자원 취약지역 집중대책

아울러 국가 자원 배분 시, 노동력, 자본, 기술 등 생산 자원이 취약하여 개발 수준이 저조하고, 인프라, 재정, 인구 등 지방정부 자원이 부족해 생활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자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균형특별법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고,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과 연계한 정책을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지역의 자립을 위한 교육, 일자리, 주거, 공공서비스 등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춰지도록 지역 특성

에 맞는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이에 필요한 인재들을 교육·훈련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때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으로 개인의 경제적 안정의 기반이자 건강한 사회활동의 통로가 되고, 자기효능감을 부여하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특히 지원이 필요한 청년, 여성, 노인의 일자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립적 지역경제 위에서 다양한 인구 집단의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 및 정주환경이 또한 갖춰져야 하며, 특히 청년과 노인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바. 생활 및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

한편, 지역사회는 생활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므로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 경제적 기회와 각종 사회·문화적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지역 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노인과 여성 등의 특수한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하는 기존 정책 구조를 개편하여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는 ‘광역적 네트워킹’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지역육아와 돌봄을 가정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돌봄체계(communitary care system)’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지역의 모범적 정책 전국 확대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범적 정책(best practices)을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지역적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정책 설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구 집단-지역별 정책 대응전략

가. 청년층

다음으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는 인구 집단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특·광역시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이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자리와 출산 장려, 의료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관계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및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된 민간취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소셜벤처 지원, 청년활동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특·광역시 지역의 지자체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정책의 경우, 출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적절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이 적절한 주거환경에 위치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종래까지 이 부분에서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 지원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지자체는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주택 및 셰어하우스 공급 등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이들 주택정책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 청년들의 생산활동과 주거 안정이 상호 시너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위한 바우처 지급, 청년 진료비 소득공제 확대, 무료 정신과 상담서비스, 산부인과 진료비 무료 시행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확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나. 노년층

노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비수도권 및 농촌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화로 인해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치매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케어센터 확충, 치매 토탈케어 시스템 운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독립 생활 지원주택 공급, 인지 건강 주거환경 가이드 북 제작 배포, 치매 노인 실종방지 지원, 영양보호사 처우개선, 시장보기 도우미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농촌의 경우, 수도권이나 농촌 외 지역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므로 노인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 정책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대응형 교통(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 DRT) 서비스 확대, 스쿨버스를 이용한 노인 이동성 증진, 택시 쿠폰의 지급 등과 같은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다. 여성층

여성층 또한 비수도권 및 농촌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치안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여가 기회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농촌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도시 인프라 안전 모니터링, 안전지도 제작, 안심 골목길 조성, 여성친화거리 조성 등 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공간적 차원에서 여가공간의 조성, 여가 서비스 장려와 같은 대책도 중요하나, 이러한 공간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대책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저녁 단시간 돌봄 해결, 노인인력을 활용한 자녀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정 내 성평등적 육아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남편 육아휴직제 장려 등과 같이 자녀 돌봄 프로그램 확대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빈곤층

비수도권 및 농촌에서는 빈곤층 중심의 일자리 및 소득 보전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의 불리한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고, 농촌 빈곤층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도농 파트너십 형성, 로

컬푸드 소비 및 직배송 시스템 확대, 식품산업의 고도화 등과 같은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수도권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열악한 만큼, 이들 분야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 저학력층

한편, 저학력층을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 대중적 여가 서비스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비롯한 도시에서 저학력층의 삶의 질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타 인구 집단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학력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의 문화적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 콘텐츠 확대, 콘텐츠 바우처 지급, 100원 영화관 등의 정책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고학력층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고학력층이 특히 비수도권과 농촌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낙후된 이들 지역이 고학력층과 같은 인적자본을 유인하게 되면 지역 전반의 발전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고학력층은 무엇보다 문화와 여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 예컨대, 젊은 예술가 장기 양성 지원정책, 예술가 및 예술벤처 지원사업,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 축제의 고급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대응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구 집단의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국내외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연령별, 학력별, 성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전체 인구 및 각 연령별 인구 집단의 삶의 질 수준을 집계하고, 이의 지역 간, 연령 간, 지역 내 격차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 삶의 질 수준과 지역의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특성

먼저 총인구수의 변화 즉, 인구증가율을 보면, 2000년 이후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 시군이 가장 높고, 인구 감소 경향은 전라남도과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2000~2018년 기간 동안 증가율이 높은 상위 10%에 해당 하는 23개 시군구 중 9개 지역이 경기도에 속하고, 하위 10% 시군구 중 11개 지역이 전라남도에 속해 있다.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상위 10% 지역은 특·광역시 소속 8개 자치구와 5개 대도시, 10개의 중소도시였으며, 농촌은 전무했다. 반면,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경북 문경시와 대구와 부산 일부 자치구(부산 5개 구, 대구 1개 구)를 제외하면 모두 농촌 지역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0~2015년 기간을 기점으로 농촌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완화되었고, 특·광역시 중심으로 인구 감소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세부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남녀성비의 균등화, 노년인구 비율 증가, 고학력자 비율 증가,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외국인 비율의 증가,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증가 경향이 확인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되는데, 특·광역시와 수도권 도시에서는 고학력자, 1인 가구, 외국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여성 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

세부 인구구조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남녀성비의 경우, 전국적으로 여성 인구 대비 남성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33%에서 2010년 11.3%, 2018년 14.4%로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특히 농촌 지역과 비수도권에서 큰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 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고학력자와 초고학력자(석사 이상) 비율의 지역 간 표준편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이동성이 커서 삶의 여건이 좋은 곳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 1980년에는 전체 가구 중 4.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17.8%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31.8%에 이르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를 제외한 1인 가구는 수도권의 특·

광역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독거노인의 분포는 농촌과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노인인구의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외국인 인구는 전국적으로 2006년 536,627명에서 2018년 2,054,621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의 60.1%가 집중되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총인구의 71.47%에서 2018년에 72.89%(3763만 명)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64.96%에서 62.04%로 소폭 감소하였다.

인구이동 특성을 보면 전체 이동 중 특·광역시 자치구(또는 군)에서 다른 자치구(또는 군)로의 이동이 약 35~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거주 인구의 절대적인 비율 및 상대적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전 시기에 걸쳐 대체로 특·광역시와 농촌 지역으로는 순유입이 나타나는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이동을 보면, 청년층은 인구이동이 줄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분석 기간 동안 특·광역시와 농촌으로의 순이동이 양으로 나타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의 순이동은 음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특·광역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에도 특·광역시로의 이주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2. 지역 간, 인구 집단 간, 지역 내 삶의 질 격차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어, 삶의 질 지수(만점 10점)는 2011년 6.63에서 2015년 6.76, 2017년 6.89로 증가해

왔다. 전반적 삶의 질 개선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층-저학력층, 청년층-중장년층, 빈곤층-비빈곤층, 남성-여성 등 인구 집단별로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삶의 질의 전체 인구, 인구 집단별 평균값에도 지역 간,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삶의 질의 지역평균 수준을 지역 간에 비교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된다. 2011~2017년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 인구의 평균적 삶의 질 수준은 비수도권에 비해 일관되게 높다. 인구 규모별로 보면 특·광역시와 자치구(군)와 일반 시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농촌지역은 확실히 낮다.

인구 집단별 삶의 질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집단을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상위집단)은 전체인구의 삶의 질보다 양호한 집단으로 고학력층, 청년층, 비빈곤층이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더 양호하고, 특히 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고학력층의 친환경적 어메니티에 대한 선호와 청년층의 대도시에서의 주거비용 및 혼잡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중위집단)은 삶의 질이 전체 인구의 평균과 비슷한 집단으로서 중장년층, 남성, 여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의 인구 집단들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경우 지역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지 않다. 세 번째 유형(하위집단)은 삶의 질이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서 상대적 빈곤층, 저학력층, 노년층이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점차 향상되어 2017년에는 수도권이나 특·광역시보다 양호(특히 저학력층)하다.

삶의 질 수준의 지역 내 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표준편차를 산출

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 인구의 지역 내 편차를 보면 2011년에는 수도권 내 격차가 비수도권보다 약간 컸으나, 2015년에는 차이가 없어지고, 2017년에는 오히려 비수도권의 지역 내 격차가 커진 것이 확인된다. 도시 규모별로 묶어서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의 지역 내 격차가 2011~2017년 분석 기간 동안 일관되게 가장 크게 나오고, 특·광역시와 시는 차례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 특·광역시와 시의 차이는 미미하다.

전체 인구를 하위집단으로 세분하여 삶의 질의 지역 내 격차를 비교해보면, 삶의 질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인구 집단 유형은 지역 내 격차에서도 유형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삶의 질 ‘하위집단’인 빈곤층, 저학력층, 노년층은 삶의 질의 지역 내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이 지역 내 편차도 커서, 이 집단 내 삶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이 유형의 인구 집단의 지역 내 격차는 전체 인구의 패턴과는 달리 군 지역보다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서 더욱 크다는 사실이다. 한편 삶의 질의 지역 내 격차가 가장 작은 집단은 삶의 질 ‘상위집단’인 고학력층, 청년층, 비빈곤층이다. 이 집단의 경우에는 삶의 질 지역 내 격차는 존재하되, 지역에 따라 그 격차에 변동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준의 지역 내 격차를 보이는 집단은 삶의 질 ‘중위집단’인 중장년층, 남성, 여성이다. 이 인구 집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에서 지역 내 격차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수도권 및 특·광역시, 농촌 지역의 순으로 삶의 질 지역 내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3. 삶의 질 영향요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연도별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전체인구에 대한 모형과 인구 집단별 모형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인구에 대한 모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택의 질과 더불어 주거환경 여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 올수록 주택가격과 점유유형 등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주택 자체의 질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및 어메니티가 중시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경제 상황은 삶의 질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개인소득은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1인당 조세액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불가피함을 넘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 여건,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중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와 참여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구 구조와 지역 유형 등의 통제변수를 고려할 때, 삶의 질은 점차 특·광역시와 군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특·광역시의 경우 인구밀도는 높지만 다양한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군 지역은 도시적 어메니티는 부족하지만 혼잡도가 낮고 친환경적 여건과 정적인 생활(slow life)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구 집단별 모형에서 각 부문별 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주거 부문의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2011년 주택의 질에서 2015년 이후 주거 환경, 주택 가격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이 모든 인구 집단의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5년 이후에는 모든 인구 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대신에 2015년부터는 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만이

양(+)의 영향을 미치며, 노후주택비율이나 월세 유형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이 제외된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은 2011년 평균 85.9%에서 2017년 92.8%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편차도 6.6%에서 3.2%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부문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건 의료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는데, 이는 모든 인구 집단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거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2011년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음(-)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지역응급센터에 대한 정(+)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사회참여 및 관계 부문은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2015년부터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를 인구 집단별로 살펴보면 상대적 빈곤층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반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2011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여가 및 문화 부문과 관련하여 여성층, 고학력층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일부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제외된 경우가 많다. 상대적 빈곤층, 청년층에서는 2011년에만 정기적 여가활동 참여율이 긍정적인 영향이었으나, 그 외 기간에는 영향이 없었다. 노년층의 경우 2011, 2015년에 비교적 적은 비용을 누릴 수 있는 영화관 좌석 수에 대해서만 유의하였고, 2017년에는 그마저도 영향이 없었다. 저학력층은 2015년 영화관 좌석 수에만 대해서만 유의하다.

한편, 분석 단위 지역을 동질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이나 소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 이른바 생태학적 오류를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시군구별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인구 집단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남성, 중장년층, 고학력층, 상대적 비빈곤층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여성, 청년층, 노년층, 저학력층, 상대적 빈곤층 등 인구 집단별로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역시 다양한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오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거나 사례 집단에 대한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인구이동과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역 간 인구이동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동 규모가 크게 나타나, 삶의 질이 인구이동의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하는 지역 특성별, 연령별 삶의 질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전체인구에 대한 모든 지역 간 인구이동과 삶의 질 차이의 관계를 보면, 2011년과 2017년에는 전출지 대비 전입지 삶의 질이 높을수록 인구이동량은 늘어나는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출하여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기에 걸쳐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한다. 이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령대에 따라서도 삶의 질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

이하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2011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삶의 질이 악화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삶의 질 격차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시기에 따라 삶의 질 변화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이동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일관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삶의 질 차이보다는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청년층의 이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모든 시기에 대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이동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유입에 있어서도 삶의 질 개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 내 이동은 삶의 질 격차 영향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삶의 질 개선이 커질수록 인구이동량도 증가하여, 삶의 질 개선이 노년층의 인구이동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유의하게 도출된 경우에도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삶의 질 개선이 노년층 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적 대응방안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요약한 실증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지역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정책 대상 집단 및 과제

우선 우리는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와 인구이동-삶의 질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 전체의 전반적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지역인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이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여러 인구 집단별 삶의 질도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 집단별 삶의 질을 지역 간에 비교해 보면, 인구 집단별 우선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층과 노년층, 여성은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낮으므로, 이들 인구 집단에 대한 정책은 주로 이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청년층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서 삶의 질이 낮으므로, 청년층 삶의 질 정책은 이 지역에 집중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은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만, 수도권과 특·광역시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므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비농촌 지역 지역에서 삶의 질이 특별히 낮으므로 이들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전체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와 인구 집단별로 적용되는 과제로 구분하여 도출된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는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환경과

안정적 주택점유, 소득 수준,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의 관계와 여가활동 참여 등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된다. 특히 지역사회 관계와 여가활동 참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여러 인구 집단별 모형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과제이다.

인구 집단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빈곤층은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소득보전 및 복지서비스 공급, 청년층은 의료서비스와 출산, 노년층은 보건의료서비스, 여성은 치안과 여가, 저학력층은 대중적 여가서비스, 고학력층은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 서비스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부각된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실증분석에서 삶의 질 개념에 의해 포착하지 못한 다른 영역의 정책과제, 예컨대 일자리와 문화 여건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이들의 인구이동량이 삶의 질 상승과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2. 정책적 대응전략

이렇게 도출된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모든 정책 대상 집단이나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이다. 이는 인구 집단별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모니터링 실시, 불균형적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설계, 자원 취약지역 집중대책 수립, 지역의 자립을 위한 교육, 일자리, 주거, 공공서비스 등 연계 인프라 구축, 생활 및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의 모범적 정책 사례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관계와 여가활동의 확대가 모든 인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특화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층 대상의 정책은 수도권과 특·광역시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일자리와 출산 장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및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서비스를 활용한 민간취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소셜벤처 지원, 청년활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런 정책은 청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특·광역시 지역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정책은 출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출산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지자체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주택 및 셰어하우스 공급 등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이들 주택정책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 청년들의 생산활동과 주거 안정이 상호 시너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정책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위한 바우처 지급, 청년 진료비 소득공제 확대, 무료 정신과 상담서비스, 산부인과 진료비 무료 시행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확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년층 대상의 정책은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케어센터 확충, 치매 토탈케어 시스템 운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독립생활 지원 주택 공급, 인지 건강 주거환경 가이드 북 제작 배포, 치매 노인 실종방지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시장

보기 도우미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들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고 노인들의 이동성이 취약하므로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수요대응형교통(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 DRT) 서비스 확대, 스쿨버스를 이용한 노인 이동성 증진, 택시 쿠폰의 지급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층 대상으로도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치안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여가 기회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 안전 모니터링, 안전지도 제작, 안심 골목길 조성, 여성친화거리 조성 등 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여가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여가공간의 조성, 여가 서비스 장려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저녁 단시간 돌봄 해결, 노인 인력을 활용한 자녀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정 내 성평등적 육아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남편 육아휴직제 장려 등과 같이 자녀 돌봄 프로그램 확대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빈곤층 대상으로도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이들의 일자리 및 소득보전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빈곤층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도농 파트너십 형성, 로컬푸드 소비 및 직배송 시스템 확대, 식품산업의 고도화 등과 같은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도시지역에서 이들의 대중적 여가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학력층의 삶의 질이 특히 대

도시 및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 열악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의 문화적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 콘텐츠 확대, 콘텐츠 바우처 지급, 100원 영화관 등의 정책을 추진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고학력층의 경우에는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서 이들의 삶의 질이 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낙후된 지역에서 고학력층과 같이 인적자본을 많이 유인하는 것은 지역 전반의 발전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고학력층은 특히 문화와 여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예술가 장기 양성 지원정책, 예술가 및 예술벤처 지원사업,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 축제의 고급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 강은택·강정구·마강래(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 강현수(2010). “장소의 변영”과 “사람의 변영”: 두 접근방식 의 차이에 대한 이론 과 사례. **지방행정연구**, 24(3), 3-32.
- 경기연구원(2017).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 교육부(2018). “학교-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동참 『2018 진로교육 한마당』 개최”, 2018.12.18.(화) 조간 보도자료, 진로교육정책과.
- 구교준·김성배·윤종현(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173-192.
- 구동희(2007). 부산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2(6), 930-939.
- 권상철(2000). 한국의 인구이동과 대도시의 역할: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57-68.
- _____(2011).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 특성: 이동, 통근자 자료 분석을 통한 도시화 단계의 실증적 검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536-553.
- 김병석·서원석(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통권 83호, 1-14.
- 김선기·박승규(2014).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 격 차 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희(2008).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인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8, 28-43.
- 김영섭(2001).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정책결정**. 한국행정학회 전자사전

20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https://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46&page=1
&term_cate=&term_word=%BB%EE%C0%C7%20%C1%FA&term_k
ey=&term_auth=](https://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46&page=1&term_cate=&term_word=%BB%EE%C0%C7%20%C1%FA&term_key=&term_auth=))

- 김용욱 외(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희·조영태(2008).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구학**, 31(1), 1-26.
- 김준형(2016). 외국인 유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인가와 내국인 인구 변화간 관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학논집**, 15(1), 23-37.
- 김창환(2015). 1990년대 이후 광역권별 지역이동의 계층적 특징: 수도권 전입, 전출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8(1), 1-32.
- 김춘남·박영란·고영호·최성은(201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 경기복지재단.
- 김태경(2017).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김형미·주경식(2011). 경기도 남부지역 학생 이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6), 679-697.
- 노경혜·이초록(2020).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민보경·변미리(2017).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전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서울도시연구**, 18(4), 85-102.
- 박영한(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1, 1-19.
- 박인권(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 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28(2), 71-114.
- 박인권(2020). ‘부분’ 대 ‘전체’. **지역연구**, 36(1), 17-36.
- 박인권·이민주(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26(4), 109-158.
- 박철민·김경범(2014).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5(4), 307-336.
- 보건복지부(2018). **2018 모자보건사업 안내**.

- 부혜진(2015).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26-241.
- 서라별·성옥준(2019).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이 이주 의향에 미친 영향 연구 경기도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199-223.
- 서울시 복지국(201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 신인철·최지원(2019).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 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서울연구원.
- 서인석·기영화·이승중(2016).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의 탐색적 유형화: 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요인 및 지표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25(1), 49-76. 신동호(2016). 호주의 창조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멜버른의 멜버른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630-641.
- 안기훈. (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제 43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연수강좌**.
- 여성가족부(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 _____ (2017).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유미현·김보경(2016).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인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1), 162-181.
- 윤철현·박봉진(2003). 부산시 인구분포패턴의 재편성 과정. **도시행정학보**, 16(2), 169-189.
- 윤희철·정봉현(2014). 인구감소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도시의 삶의 질 지표 연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35-57.
- 이경희(2017). 은퇴 고령층의 주거이동과 생활만족도 분석. **노동리뷰**. 2017년 12월호(통권 제 153호). 69-78.
- 이병민(2016).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영국의 테크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597-615.
- 이상호(2016). 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 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6-15.

_____(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7월호, 2-21.

이은우(1998). 지역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경제연구**, 7(2),
233-254.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 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2-729.

이현출(2018).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 **한국정당학회보**. 17(1),
103-133.

이희철(2020). 대한민국 행복지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 **정책분석평
가학회보**, 30(1), 25-50.

임보영·마강래(2016).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집계적 자
료와 비집계적 자료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89-104.

이재춘(2016).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과 시사점. **국토**. 2016년
12월호(통권 제422호), 20-25.

정은하(2016).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계와 도시**. 12,
24-33.

주미진(2017). 창조계층의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5),
376-387.

주혜진·이선민·장은정·이유라(2019).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전세종연구원.

최경수(2013).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61(3),
153-194.

최슬기(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 인구
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6, 14-40.

최은영·구동희(2012). 부산의 인구 변동 요인과 인구 구조 변화. **국토지리학회
지**, 46(3), 333-345.

최은영·권순필(2012).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년)**. 통계

개발원.

_____ (2018).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5년)**. 통계개발원.

최은영·김기태·문규성·김두겸·최영은(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2017 국정감사 자료집**. 한국도시연구소.

최현영·이동혁(2016), '홀로 있음'에서 고독과 외로움간의 차이탐색. **청소년학연구**, 23(12), 77-103.

최효진·이홍직(2019).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103-1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복지 ISSUE & FOCUS**, 364호, 1-8.

허문구·Dai Erbiao·김동수·박형진(201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패턴 분석**. 산업연구원.

홍성효·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Arifwidodo, S. D., & Perera, R. (2011). Quality of life and compact development policies in Bandung, Indonesi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6(2), pp.159-179.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Plenum.

Balducci, A., & Checchi, D. (2009). Happiness and quality of city life: The case of Milan, the richest Italian city.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14(1), pp.25-64.

Bartel (1979). The Migration Decision: What Role does Job Mobility Play? *American Economic Review*, 69(5), pp.775-786.

Becchetti, L., Pelloni, A., & Rossetti, F. (2008). Relational goods,

- sociability, and happiness. *Kyklos*, 61(3), pp.343-363.
- Benita, F., Bansal, G., & Tuncer, B. (2019). Public spaces and happiness: Evidence from a large-scale field experiment. *Health & Place*, 56, pp.9-18.
- Brueckner, J. K.(2000). Urban sprawl: diagnosis and remedie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3(2), pp.160-171.
- Campell, A. (1972). Aspiration,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in Campbell and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2), pp.441-46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J.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antrill, A. H. and C. W. Roll Jr., (1971). *The Hopes and Fears of American People, in studies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New York: Universe Books.
- Cramer, V., Torgersen, S., & Kringlen, E. (2004). Quality of life in a city: The effect of population dens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9(1), pp.103-116.
- Clark. (2003). *Immigrants and the American Dream: Remaking the Middle Class*. New York: Guilford Press.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 and Reder, M. W.(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pp.89-125). New York, NY: Academic Press.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pp.465-484.
- Florida, R. (2004). "America's Looming Creativity Crisis". *Harvard Business Review*, 82(10), pp.122-131.

- Florida, R. Charlotta Mellander, Peter J. Rentfrow(2013), "The Happiness of Cities". *Regional Studies*, 47(4), pp.613-627.
- Gabriel, S. A., and Rosenthal, S. S. (2004). Quali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versus quality of life - do firms and households like the same c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1), pp. 438-444.
- Gupta et al. (1993). Estimation of Population Coverage in the 1990 United States Census Based on Demographic Analysi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423), pp.1061-1071.
- Helliwell, J. F., Huang, H., & Wang, S. (2014).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pp.145-162.
- Lee & Mason. (2009). Fertility,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ov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 pp.159-182.
- Leung, A., Kier, C., Fung, T., Fung, L., & Sproule, R. (2011).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3), pp.443-462.
- Lewis.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The Manchester School*, 22(2). pp.139-191.
- Liu, B-C., (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s A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Prager Publishers.
- Mellander & Florida. (2006). *The Creative Class or Human Capital: Explaining Legionnaire Development in Sweden*.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CESIS - Centre for Excellence for Science and Innovation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in Economics and Institutions of Innovation.
- Mieszkowski, P. and Mills, E. S.(1993). The causes of metropolitan

- suburbaniz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3), pp. 135-147.
- Morrison, M., Tay, L., & Diener, E. (2011). Subjective well-being and national satisfaction: Findings from a worldwide survey. *Psychological Science*, 22(2), pp.166-171.
- Nissen C. Scerri A. Gousgounis N. Mitev P. Ghenea C. (1998).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A report by an international expert group appointed by the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 Nussbaum, M.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2-3), pp 33-59.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 Porell. Frank, W. (1982). Intermetropolitan Migrat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2), pp. 137-158.
- Poon, J. P., & Shang, Q. (2014). Are creative workers happier in Chinese cities? The influence of work, lifestyle, and amenities on urban well-being. *Urban Geography*, 35(4), pp. 567-585.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itchie, H., and Roser, M. (2019). *Gender ratio*. Our World in Data.
- Rehdanz, K., & Maddison, D. (2008). Local environmental quality and life-satisfaction in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64(4), pp.787-797.
- Rugg J. & Quilgard D. (2015). Young People and Housing: A Review of the Present Policy and Practice Landscape, *Youth & Policy Special Edition*, pp.5-16.
- Scottish Government. (2018). *A CONNECTED SCOTLAND*.

- Sirgy, M. J., Rahtz, D., Cicic, M., & Underwood, R. (2000). A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based services: A quality-of-life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3), pp.279-316.
- Sirgy, M. J., Widgery, R.N., Lee, D.J. et al. (2010). Developing a Measure of Community Well-Being Based on Perceptions of Impact in Various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2), pp.295-311.
- Smith. (1996). Third World Cities: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I - Population, Labour and Poverty. *Urban Studies*, 33(4-5), pp. 673-701.
- Tiebout.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 Todaro. (1981).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New York: Longman.
-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Office for Civil Society, Prime Minister's Office.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 *World Population Aging 2019*(ST/ESA/SER.A/444).
- WHO(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 Zagorski, K., Kelley, J., & Evans, M. D. (2010).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 Evidence from 32 nations. *Polish Sociological Review*, 1, pp. 3-19.
- 고현섭(19.06.04). 성동구, 5년 연속 '일자리대상' 영예 서울자치구 중 최초, 시 사미디어. <http://www.sisamedia.kr/news/view.php?idx=39534>

2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 김석모(2018.5.18.). 인구 30만... 세종시, 중견도시 됐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0233.html.
- 김인희(2019. 11. 18), [인터뷰]정원오 성동구청장 “실핏줄처럼 퍼진 대중교통망으로 ‘사통팔달’ 완성”,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17010009644>
- 박종국(2020.11.18), 진천 학령인구 1년새 260명 ‘경충’…충북 지자체 유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41300064>
- 박지현(2020.10.05.), 성동구, 6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 ‘일자리 최고’, 서울자치신문, <http://www.on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9>
- 영광신문(2020.01.06.),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참여자 모집, 영광신문, <https://www.y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52>
- 윤정원(2020.6.24),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에 스마트 공기청정 시스템 도입,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95>
- 장기우, (2020.7.21), 진천군 2년새 인구 7.7% 늘어… 비수도권 지자체 1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0/102077825/1>
- 조홍복(2020.09.25.), 합계출산율 2.54명 전국 1위… ‘육아 파격지원’ 영광군이 해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25/65PGI4ZITVGZZO56SDHFF4T25U/
- 지영봉(19.12.20). 영광군, 인구·일자리·결혼출산·청년정책 성과 빛났다., 뉴스핌, <https://m.newspim.com/news/view/20191220001081>
- 채종원(2020.8.26.), 청년지원 20조·지역상품권 15조... 내년 예산도 ‘돈 풀기’ 방침,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79971/>

- 최종권(2020.1.13), 한 지붕 두 가족 충북혁신도시...진천은 반색, 음성은 올상
이유는,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80799>
- 통계청 보도자료(2018.9.28).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aSeq=370806&pageNo=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 홍덕표(2020.11.3), 서울 성동구, 공보육률 합계출산율 1위... 보육정책 큰 성
과,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4261297253>
- 홍화연(2020.10.06.),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6년 연속 수상, 청솔뉴스, <http://www.pinenews.co.kr/44374>
- 국가인구이동통계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독거노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인구 총조사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mTabId=M_01_01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1인 가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
- 성동구청 소셜벤처기업 사이트. <http://social.sd.go.kr/platform>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 원시자료 신청 홈페이지. <https://chs.cdc.go.kr/chs/rawDta/rawDtaProvdMain.do>
- 통계청 홈페이지. 장래 인구 추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2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통계청 홈페이지. 2019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
&aSeq=377701](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701)

통계청 홈페이지. 2020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
&aSeq=385322](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s://www.ekr.or.kr/homepage/main.krc>

UNICEF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board/bbs/board.php?bo_table=
cfcst_ory&wr_id=182&page=10](http://childfriendlycities.kr/board/bbs/board.php?bo_table=cfcst_ory&wr_id=182&page=1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
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
_0000000000014&nttId=80781](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4&nttId=80781)

e-나라지표 홈페이지. 출생 사망 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
11.](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부록 1] 인구집단별 삶의 질 격차 분석

〈부표 1-1〉 전체 인구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594363	7.306985 /5.920408	.2176668	128.44**
	15년 (N=229)	6.761204	7.411065 /6.100819	.1858718	
	17년 (N=229)	6.888915	7.408948 /5.955906	.1864615	

주: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이하 〈부표 3-114〉까지 동일한 자료로 분석을 시행함.

〈부표 1-2〉 전체 인구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1668407	.0184316	9.05**	.122607	.2110744
17 vs 11	.2945515	.0184316	15.98**	.2503178	.3387851
17 vs 15	.1277107	.0184316	6.93**	.0834771	.1719444

주: * $p<0.05$, ** $p<0.01$

21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1-3〉 비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789636	7.441774 /6.160889	.2024037	92.52**
	15년 (N=229)	6.902749	7.504683 /6.308041	.1821097	
	17년 (N=229)	7.027495	7.564813 / 6.057359	.1760232	

주: * p<0.05, ** p<0.01

〈부표 1-4〉 비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1131134	.0174932	6.47**	.0711317	.1550951
17 vs 11	.2378593	.0174932	13.60**	.1958776	.279841
17 vs 15	.124746	.0174932	7.13**	.0827643	.1667277

주: * p<0.05, ** p<0.01

〈부표 1-5〉 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5.84184	6.861829 /4.955397	.3295323	64.72**
	15년 (N=229)	6.047382	6.854432 /5.170898	.2779324	
	17년 (N=229)	6.157084	7.302489 /5.074082	.293301	

주: * p<0.05, ** p<0.01

〈부표 1-6〉 빈곤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2055418	.0281327	7.31**	.1380265	.2730571
17 vs 11	.3152437	.0281327	11.21**	.2477284	.382759
17 vs 15	.1097019	.0281327	3.9**	.0421866	.1772172

주: * p<0.05, ** p<0.01

〈부표 1-7〉 청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944135	7.765665 /6.087328	.1994524	39.79**
	15년 (N=229)	6.889255	7.801953 /6.174034	.1906844	
	17년 (N=229)	7.047997	7.862262 /6.252519	.1899708	

주: * p<0.05, ** p<0.01

〈부표 1-8〉 청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0548805	.0180756	-3.04**	-.0982598	-.0115012
17 vs 11	.1038613	.0180756	5.75**	.060482	.1472406
17 vs 15	.1587418	.0180756	8.78**	.1153625	.2021211

주: * p<0.05, ** p<0.01

21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1-9〉 중장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621833	7.315329 /6.059529	.2196133	135.47**
	15년 (N=229)	6.800584	7.47133\6 .260682	.1949381	
	17년 (N=229)	6.935182	7.681476 /6.050351	.1976662	

주: * p<0.05, ** p<0.01

〈부표 1-10〉 중장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1787516	.0190993	9.36**	.1329156	.2245877
17 vs 11	.3133492	.0190993	16.41**	.2675131	.3591852
17 vs 15	.1345975	.0190993	7.05**	.0887615	.1804336

주: * p<0.05, ** p<0.01

〈부표 1-11〉 노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013792	7.357154 /5.094496	.3338106	164.41**
	15년 (N=229)	6.428039	7.293804 /5.63165	.2960729	
	17년 (N=229)	6.51727	7.497485 /5.47842	.3201624	

주: * p<0.05, ** p<0.01

〈부표 1-12〉 노년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4142465	.029631	13.98**	.3431355	.4853576
17 vs 11	.5034775	.029631	16.99**	.4323665	.5745886
17 vs 15	.089231	.029631	3.01**	.0181199	.1603421

주: * $p<0.05$, ** $p<0.01$

〈부표 1-13〉 남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682242	7.326869 /6.017218	.2058362	83.10**
	15년 (N=229)	6.776179	7.545329 /6.209087	.1977769	
	17년 (N=229)	6.922386	7.421199 /5.974091	.1989684	

주: * $p<0.05$, ** $p<0.01$

〈부표 1-14〉 남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0939367	.0187741	5.00**	.048881	.1389924
17 vs 11	.2401435	.0187741	12.79**	.1950878	.2851992
17 vs 15	.1462069	.0187741	7.79**	.1011512	.1912626

주: * $p<0.05$, ** $p<0.01$

2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1-15〉 여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507321	7.288935 /5.743906	.2486492	159.68**
	15년 (N=229)	6.746558	7.356366 /5.877196	.1941521	
	17년 (N=229)	6.856219	7.449253 /5.938554	.1934562	

주: * p<0.05, ** p<0.01

〈부표 1-16〉 여성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2392365	.019967	11.98**	.1913181	.287155
17 vs 11	.3488974	.019967	17.47**	.3009789	.3968158
17 vs 15	.1096608	.019967	5.49**	.0617424	.1575793

주: * p<0.05, ** p<0.01

〈부표 1-17〉 저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6.025107	6.91141 /5.155182	.2867431	105.49**
	15년 (N=229)	6.275443	6.858075 /5.567948	.2365007	
	17년 (N=229)	6.364894	7.275441 /5.536883	.2527374	

주: * p<0.05, ** p<0.01

〈부표 1-18〉 저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2503352	.0242519	10.32**	.1921335	.3085368
17 vs 11	.3397864	.0242519	14.01**	.2815848	.3979881
17 vs 15	.0894513	.0242519	3.69**	.0312497	.1476529

주: * $p<0.05$, ** $p<0.01$

〈부표 1-19〉 고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 인구 삶의 질	11년 (N=229)	7.181858	7.901532 /6.676313	.215322	24.08**
	15년 (N=229)	7.219169	7.971458 /6.75338	.1657476	
	17년 (N=229)	7.301571	7.945631 /6.133665	.1822379	

주: * $p<0.05$

〈부표 1-20〉 고학력층 연도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5 vs 11	.0373106	.0176532	2.11	-.0050549	.0796762
17 vs 11	.1197123	.0176532	6.78**	.0773467	.1620778
17 vs 15	.0824017	.0176532	4.67**	.0400361	.1247672

주: * $p<0.05$, ** $p<0.01$

22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록 2] 연도별 삶의 질 격차 분석

〈부표 2-1〉 2011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2011년	전체 인구(1) (N=229)	6.594363	7.306985 /5.920408	.2176668	685.13**
	비빈곤층(2) (N=229)	6.789636	7.441774 /6.160889	.2024037	
	빈곤층(3) (N=229)	5.84184	6.861829 /4.955397	.3295323	
	청년층(4) (N=229)	6.944135	7.765665 /6.087328	.1994524	
	중장년층(5) (N=229)	6.621833	7.315329 /6.059529	.2196133	
	노년층(6) (N=229)	6.013792	7.357154 /5.094496	.3338106	
	남성(7) (N=229)	6.682242	7.326869 /6.017218	.2058362	
	여성(8) (N=229)	6.507321	7.288935 /5.743906	.2486492	
	저학력층(9) (N=229)	6.025107	6.91141 /5.155182	.2867431	
	고학력층(10) (N=229)	7.181858	7.901532 /6.676313	.215322	

주: * p<0.05, ** p<0.01

〈부표 2-2〉 2011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952724	.0234411	8.33**	.1210383	.2695064
3vs1	-.7525232	.0234411	-32.1**	-.8267572	-.6782891
4vs1	.3497720	.0234411	14.92**	.2755380	.4240061
5vs1	.0274692	.0234411	1.17	-.0467648	.1017033
6vs1	-.5805713	.0234411	-24.77**	-.6548054	-.5063372
7vs1	.0878790	.0234411	3.75**	.0136449	.1621131
8vs1	-.0870420	.0234411	-3.71**	-.1612761	-.0128080
9vs1	-.5692559	.0234411	-24.28**	-.6434900	-.4950219
10vs1	.5874950	.0234411	25.06**	.5132609	.6617290
3vs2	-.9477955	.0234411	-40.43**	-1.0220300	-.8735614
4vs2	.1544997	.0234411	6.59**	.0802656	.2287338
5vs2	-.1678031	.0234411	-7.16**	-.2420372	-.0935691
6vs2	-.7758437	.0234411	-33.1**	-.8500777	-.7016096
7vs2	-.1073934	.0234411	-4.58**	-.1816274	-.0331593
8vs2	-.2823144	.0234411	-12.04**	-.3565484	-.2080803
9vs2	-.7645283	.0234411	-32.61**	-.8387623	-.6902942
10vs2	.3922226	.0234411	16.73**	.3179886	.4664567
4vs3	1.1022950	.0234411	47.02**	1.0280610	1.1765290
5vs3	.7799924	.0234411	33.27**	.7057583	.8542264
6vs3	.1719519	.0234411	7.34**	.0977178	.2461859
7vs3	.8404022	.0234411	35.85**	.7661681	.9146362
8vs3	.6654811	.0234411	28.39**	.5912471	.7397152
9vs3	.1832672	.0234411	7.82**	.1090332	.2575013

22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vs3	1.3400180	.0234411	57.17**	1.2657840	1.4142520
5vs4	-.3223028	.0234411	-13.75**	-.3965369	-.2480688
6vs4	-.9303433	.0234411	-39.69**	-1.0045770	-.8561093
7vs4	-.2618930	.0234411	-11.17**	-.3361271	-.1876590
8vs4	-.4368141	.0234411	-18.63**	-.5110481	-.3625800
9vs4	-.9190280	.0234411	-39.21**	-.9932620	-.8447939
10vs4	.2377229	.0234411	10.14**	.1634889	.3119570
6vs5	-.6080405	.0234411	-25.94**	-.6822746	-.5338065
7vs5	.0604098	.0234411	2.58**	-.0138243	.1346438
8vs5	-.1145112	.0234411	-4.89**	-.1887453	-.0402772
9vs5	-.5967251	.0234411	-25.46**	-.6709592	-.5224911
10vs5	.5600258	.0234411	23.89**	.4857917	.6342598
7vs6	.6684503	.0234411	28.52**	.5942162	.7426844
8vs6	.4935293	.0234411	21.05**	.4192952	.5677633
9vs6	.0113154	.0234411	0.48	-.0629187	.0855494
10vs6	1.1680660	.0234411	49.83**	1.0938320	1.2423000
8vs7	-.1749210	.0234411	-7.46**	-.2491551	-.1006870
9vs7	-.6571349	.0234411	-28.03**	-.7313690	-.5829009
10vs7	.4996160	.0234411	21.31**	.4253819	.5738500
9vs8	-.4822139	.0234411	-20.57**	-.5564480	-.4079798
10vs8	.6745370	.0234411	28.78**	.6003029	.7487711
10vs9	1.1567510	.0234411	49.35**	1.0825170	1.2309850

주: * p<0.05, ** p<0.01
1=전체인구, 2=비빈곤층, 3=빈곤층, 4=청년, 5=중장년층, 6=노년층, 7=남성, 8=여성, 9=저학력층, 10=고학력층

〈부표 2-3〉 2011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952724	.0234411	8.33**	.1187389	.2718058
3vs1	-.7525232	.0234411	-32.1**	-.8290566	-.6759897
4vs1	.3497720	.0234411	14.92**	.2732386	.4263055
5vs1	.0274692	.0234411	1.17	-.0490643	.1040027
6vs1	-.5805713	.0234411	-24.77**	-.6571048	-.5040378
7vs1	.0878790	.0234411	3.75**	.0113455	.1644125
8vs1	-.0870420	.0234411	-3.71**	-.1635755	-.0105086
9vs1	-.5692559	.0234411	-24.28**	-.6457894	-.4927225
10vs1	.5874950	.0234411	25.06**	.5109615	.6640284
3vs2	-.9477955	.0234411	-40.43**	-1.0243290	-.8712620
4vs2	.1544997	.0234411	6.59**	.0779662	.2310332
5vs2	-.1678031	.0234411	-7.16**	-.2443366	-.0912697
6vs2	-.7758437	.0234411	-33.1**	-.8523771	-.6993102
7vs2	-.1073934	.0234411	-4.58**	-.1839268	-.0308599
8vs2	-.2823144	.0234411	-12.04**	-.3588478	-.2057809
9vs2	-.7645283	.0234411	-32.61**	-.8410617	-.6879948
10vs2	.3922226	.0234411	16.73**	.3156892	.4687561
4vs3	1.1022950	.0234411	47.02**	1.0257620	1.1788290
5vs3	.7799924	.0234411	33.27**	.7034589	.8565258
6vs3	.1719519	.0234411	7.34**	.0954184	.2484853
7vs3	.8404022	.0234411	35.85**	.7638687	.9169356
8vs3	.6654811	.0234411	28.39**	.5889477	.7420146
9vs3	.1832672	.0234411	7.82**	.1067338	.2598007

2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vs3	1.3400180	.0234411	57.17**	1.2634850	1.4165520
5vs4	-.3223028	.0234411	-13.75**	-.3988363	-.2457694
6vs4	-.9303433	.0234411	-39.69**	-1.0068770	-.8538099
7vs4	-.2618930	.0234411	-11.17**	-.3384265	-.1853596
8vs4	-.4368141	.0234411	-18.63**	-.5133475	-.3602806
9vs4	-.9190280	.0234411	-39.21**	-.9955614	-.8424945
10vs4	.2377229	.0234411	10.14**	.1611895	.3142564
6vs5	-.6080405	.0234411	-25.94**	-.6845740	-.5315071
7vs5	.0604098	.0234411	2.58	-.0161237	.1369432
8vs5	-.1145112	.0234411	-4.89**	-.1910447	-.0379778
9vs5	-.5967251	.0234411	-25.46**	-.6732586	-.5201917
10vs5	.5600258	.0234411	23.89**	.4834923	.6365592
7vs6	.6684503	.0234411	28.52**	.5919168	.7449838
8vs6	.4935293	.0234411	21.05**	.4169958	.5700628
9vs6	.0113154	.0234411	0.48	-.0652181	.0878488
10vs6	1.1680660	.0234411	49.83**	1.0915330	1.2446000
8vs7	-.1749210	.0234411	-7.46**	-.2514545	-.0983875
9vs7	-.6571349	.0234411	-28.03**	-.7336684	-.5806015
10vs7	.4996160	.0234411	21.31**	.4230825	.5761494
9vs8	-.4822139	.0234411	-20.57**	-.5587474	-.4056804
10vs8	.6745370	.0234411	28.78**	.5980035	.7510705
10vs9	1.1567510	.0234411	49.35**	1.0802170	1.2332840

주: * $p<0.05$, ** $p<0.01$

1=전체인구, 2=비빈곤층, 3=빈곤층, 4=청년, 5=중장년층, 6=노년층, 7=남성, 8=여성,
9=저학력층, 10=고학력층

〈부표 2-4〉 2015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2015년	전체 인구(1) (N=229)	6.761204	7.411065 /6.100819	.1858718	569.71**
	비빈곤층(2) (N=229)	6.902749	7.504683 /6.308041	.1821097	
	빈곤층(3) (N=229)	6.047382	6.854432 /5.170898	.2779324	
	청년층(4) (N=229)	6.889255	7.801953 /6.174034	.1906844	
	중장년층(5) (N=229)	6.800584	7.47133 /6.260682	.1949381	
	노년층(6) (N=229)	6.428039	7.293804 /5.63165	.2960729	
	남성(7) (N=229)	6.776179	7.545329 /6.209087	.1977769	
	여성(8) (N=229)	6.746558	7.356366 /5.877196	.1941521	
	저학력층(9) (N=229)	6.275443	6.858075 /5.567948	.2365007	
	고학력층(10) (N=229)	7.219169	7.971458 /6.75338	.1657476	

주: * $p<0.05$, ** $p<0.01$

22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2-5〉 2015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415450	.0201998	7.01**	.0775756	.2055144
3vs1	-.7138221	.0201998	-35.34**	-.7777915	-.6498527
4vs1	.1280508	.0201998	6.34**	.0640814	.1920202
5vs1	.0393801	.0201998	1.95	-.0245892	.1033495
6vs1	-.3331655	.0201998	-16.49**	-.3971349	-.2691961
7vs1	.0149750	.0201998	0.74	-.0489944	.0789444
8vs1	-.0146462	.0201998	-0.73	-.0786156	.0493232
9vs1	-.4857615	.0201998	-24.05**	-.5497309	-.4217921
10vs1	.4579649	.0201998	22.67**	.3939955	.5219343
3vs2	-.8553671	.0201998	-42.35**	-.9193365	-.7913977
4vs2	-.0134942	.0201998	-0.67	-.0774636	.0504752
5vs2	-.1021649	.0201998	-5.06**	-.1661343	-.0381955
6vs2	-.4747105	.0201998	-23.5**	-.5386799	-.4107411
7vs2	-.1265701	.0201998	-6.27**	-.1905394	-.0626007
8vs2	-.1561912	.0201998	-7.73**	-.2201606	-.0922218
9vs2	-.6273065	.0201998	-31.06**	-.6912759	-.5633371
10vs2	.3164199	.0201998	15.66**	.2524505	.3803892
4vs3	.8418729	.0201998	41.68**	.7779035	.9058423
5vs3	.7532022	.0201998	37.29**	.6892328	.8171716
6vs3	.3806566	.0201998	18.84**	.3166872	.4446260
7vs3	.7287970	.0201998	36.08**	.6648277	.7927664
8vs3	.6991759	.0201998	34.61**	.6352065	.7631453
9vs3	.2280606	.0201998	11.29**	.1640912	.2920300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vs3	1.1717870	.0201998	58.01**	1.1078180	1.2357560
5vs4	-.0886707	.0201998	-4.39**	-.1526401	-.0247013
6vs4	-.4612163	.0201998	-22.83**	-.5251857	-.3972469
7vs4	-.1130759	.0201998	-5.6**	-.1770453	-.0491065
8vs4	-.1426970	.0201998	-7.06**	-.2066664	-.0787276
9vs4	-.6138123	.0201998	-30.39**	-.6777817	-.5498429
10vs4	.3299140	.0201998	16.33**	.2659447	.3938834
6vs5	-.3725456	.0201998	-18.44**	-.4365150	-.3085763
7vs5	-.0244052	.0201998	-1.21	-.0883746	.0395642
8vs5	-.0540263	.0201998	-2.67	-.1179957	.0099430
9vs5	-.5251416	.0201998	-26**	-.5891110	-.4611722
10vs5	.4185847	.0201998	20.72**	.3546153	.4825541
7vs6	.3481405	.0201998	17.23**	.2841711	.4121098
8vs6	.3185193	.0201998	15.77**	.2545499	.3824887
9vs6	-.1525960	.0201998	-7.55**	-.2165654	-.0886266
10vs6	.7911304	.0201998	39.17**	.7271610	.8550998
8vs7	-.0296212	.0201998	-1.47	-.0935905	.0343482
9vs7	-.5007364	.0201998	-24.79**	-.5647058	-.4367670
10vs7	.4429899	.0201998	21.93**	.3790205	.5069593
9vs8	-.4711153	.0201998	-23.32**	-.5350847	-.4071459
10vs8	.4726111	.0201998	23.4**	.4086417	.5365805
10vs9	.9437264	.0201998	46.72**	.8797570	1.0076960

주: * $p<0.05$, ** $p<0.01$

1=전체인구, 2=비빈곤층, 3=빈곤층, 4=청년, 5=중장년층, 6=노년층, 7=남성, 8=여성, 9=저학력층, 10=고학력층

22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2-6〉 2015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141545	0.0201998	7.01**	0.0755942	0.2074959
3vs1	-0.7138221	0.0201998	-35.34**	-0.7797729	-0.6478712
4vs1	0.1280508	0.0201998	6.34**	0.0621	0.1940017
5vs1	0.0393801	0.0201998	1.95	-0.0265707	0.105331
6vs1	-0.3331655	0.0201998	-16.49**	-0.3991163	-0.2672146
7vs1	0.014975	0.0201998	0.74	-0.0509759	0.0809258
8vs1	-0.0146462	0.0201998	-0.73	-0.080597	0.0513046
9vs1	-0.4857615	0.0201998	-24.05**	-0.5517123	-0.4198106
10vs1	0.4579649	0.0201998	22.67**	0.392014	0.5239157
3vs2	-0.8553671	0.0201998	-42.35**	-0.9213179	-0.7894163
4vs2	-0.0134942	0.0201998	-0.67	-0.079445	0.0524567
5vs2	-0.1021649	0.0201998	-5.06**	-0.1681157	-0.036214
6vs2	-0.4747105	0.0201998	-23.5**	-0.5406613	-0.4087597
7vs2	-0.1265701	0.0201998	-6.27**	-0.1925209	-0.0606192
8vs2	-0.1561912	0.0201998	-7.73**	-0.2221421	-0.0902404
9vs2	-0.6273065	0.0201998	-31.06**	-0.6932573	-0.5613556
10vs2	0.3164199	0.0201998	15.66**	0.250469	0.3823707
4vs3	0.8418729	0.0201998	41.68**	0.7759221	0.9078238
5vs3	0.7532022	0.0201998	37.29**	0.6872514	0.8191531
6vs3	0.3806566	0.0201998	18.84**	0.3147057	0.4466074
7vs3	0.728797	0.0201998	36.08**	0.6628462	0.7947479
8vs3	0.6991759	0.0201998	34.61**	0.633225	0.7651267
9vs3	0.2280606	0.0201998	11.29**	0.1621098	0.2940114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vs3	1.171787	0.0201998	58.01**	1.105836	1.237738
5vs4	-0.0886707	0.0201998	-4.39**	-0.1546215	-0.0227198
6vs4	-0.4612163	0.0201998	-22.83**	-0.5271672	-0.3952655
7vs4	-0.1130759	0.0201998	-5.6**	-0.1790267	-0.047125
8vs4	-0.142697	0.0201998	-7.06**	-0.2086479	-0.0767462
9vs4	-0.6138123	0.0201998	-30.39**	-0.6797631	-0.5478615
10vs4	0.329914	0.0201998	16.33**	0.2639632	0.3958649
6vs5	-0.3725456	0.0201998	-18.44**	-0.4384965	-0.3065948
7vs5	-0.0244052	0.0201998	-1.21	-0.090356	0.0415457
8vs5	-0.0540263	0.0201998	-2.67	-0.1199772	0.0119245
9vs5	-0.5251416	0.0201998	-26**	-0.5910925	-0.4591908
10vs5	0.4185847	0.0201998	20.72**	0.3526339	0.4845356
7vs6	0.3481405	0.0201998	17.23**	0.2821896	0.4140913
8vs6	0.3185193	0.0201998	15.77**	0.2525685	0.3844701
9vs6	-0.152596	0.0201998	-7.55**	-0.2185468	-0.0866451
10vs6	0.7911304	0.0201998	39.17**	0.7251795	0.8570812
8vs7	-0.0296212	0.0201998	-1.47	-0.095572	0.0363297
9vs7	-0.5007364	0.0201998	-24.79**	-0.5666873	-0.4347856
10vs7	0.4429899	0.0201998	21.93**	0.3770391	0.5089408
9vs8	-0.4711153	0.0201998	-23.32**	-0.5370661	-0.4051644
10vs8	0.4726111	0.0201998	23.4**	0.4066602	0.5385619
10vs9	0.9437264	0.0201998	46.72**	0.8777755	1.009677

주: * $p<0.05$, ** $p<0.01$

1=전체인구, 2=비빈곤층, 3=빈곤층, 4=청년, 5=중장년층, 6=노년층, 7=남성, 8=여성,
9=저학력층, 10=고학력층

23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2-7〉 2017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2017년	전체 인구(1) (N=229)	6.888915	7.408948 /5.955906	.1864615	551.65**
	비빈곤층(2) (N=229)	7.027495	7.564813 /6.057359	.1760232	
	빈곤층(3) (N=229)	6.157084	7.302489 /5.074082	.2933010	
	청년층(4) (N=229)	7.047997	7.862262 /6.252519	.1899708	
	중장년층(5) (N=229)	6.935182	7.681476 /6.050351	.1976662	
	노년층(6) (N=229)	6.51727	7.497485 /5.47842	.3201624	
	남성(7) (N=229)	6.922386	7.421199 /5.974091	.1989684	
	여성(8) (N=229)	6.856219	7.449253 /5.938554	.1934562	
	저학력층(9) (N=229)	6.364894	7.275441 /5.536883	.2527374	
	고학력층(10) (N=229)	7.301571	7.945631 /6.133665	.1822379	

주: * $p<0.05$, ** $p<0.01$

〈부표 2-8〉 2017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385802	.0209708	6.61**	.0721690	.2049914
3vs1	-.7318309	.0209708	-34.9**	-.7982421	-.6654197
4vs1	.1590819	.0209708	7.59**	.0926707	.2254931
5vs1	.0462669	.0209708	2.21	-.0201443	.1126781
6vs1	-.3716452	.0209708	-17.72**	-.4380564	-.3052340
7vs1	.0334711	.0209708	1.6	-.0329401	.0998823
8vs1	-.0326961	.0209708	-1.56	-.0991073	.0337151
9vs1	-.5240209	.0209708	-24.99**	-.5904321	-.4576097
10vs1	.4126558	.0209708	19.68**	.3462446	.4790670
3vs2	-.8704111	.0209708	-41.51**	-.9368224	-.8039999
4vs2	.0205016	.0209708	0.98	-.0459096	.0869129
5vs2	-.0923133	.0209708	-4.4**	-.1587245	-.0259021
6vs2	-.5102255	.0209708	-24.33**	-.5766367	-.4438143
7vs2	-.1051092	.0209708	-5.01**	-.1715204	-.0386979
8vs2	-.1712764	.0209708	-8.17**	-.2376876	-.1048651
9vs2	-.6626012	.0209708	-31.6**	-.7290124	-.5961900
10vs2	.2740756	.0209708	13.07**	.2076644	.3404868
4vs3	.8909128	.0209708	42.48**	.8245016	.9573240
5vs3	.7780978	.0209708	37.1**	.7116866	.8445091
6vs3	.3601857	.0209708	17.18**	.2937745	.4265969
7vs3	.7653020	.0209708	36.49**	.6988908	.8317132
8vs3	.6991348	.0209708	33.34**	.6327236	.7655460
9vs3	.2078100	.0209708	9.91**	.1413988	.2742212

23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vs3	1.1444870	.0209708	54.58**	1.0780750	1.2108980
5vs4	-.1128149	.0209708	-5.38**	-.1792262	-.0464037
6vs4	-.5307271	.0209708	-25.31**	-.5971383	-.4643159
7vs4	-.1256108	.0209708	-5.99**	-.1920220	-.0591996
8vs4	-.1917780	.0209708	-9.14**	-.2581892	-.1253668
9vs4	-.6831028	.0209708	-32.57**	-.7495140	-.6166916
10vs4	.2535739	.0209708	12.09**	.1871627	.3199851
6vs5	-.4179122	.0209708	-19.93**	-.4843234	-.3515010
7vs5	-.0127958	.0209708	-0.61**	-.0792071	.0536154
8vs5	-.0789631	.0209708	-3.77**	-.1453743	-.0125518
9vs5	-.5702879	.0209708	-27.19**	-.6366991	-.5038767
10vs5	.3663889	.0209708	17.47**	.2999777	.4328001
7vs6	.4051163	.0209708	19.32**	.3387051	.4715275
8vs6	.3389491	.0209708	16.16**	.2725379	.4053603
9vs6	-.1523757	.0209708	-7.27**	-.2187869	-.0859645
10vs6	.7843010	.0209708	37.4**	.7178898	.8507122
8vs7	-.0661672	.0209708	-3.16	-.1325784	.0002440
9vs7	-.5574920	.0209708	-26.58**	-.6239032	-.4910808
10vs7	.3791847	.0209708	18.08**	.3127735	.4455959
9vs8	-.4913248	.0209708	-23.43**	-.5577360	-.4249136
10vs8	.4453519	.0209708	21.24**	.3789407	.5117631
10vs9	.9366767	.0209708	44.67**	.8702655	1.0030880

주: * p<0.05, ** p<0.01
1=전체인구, 2=비빈곤층, 3=빈곤층, 4=청년, 5=중장년층, 6=노년층, 7=남성, 8=여성, 9=저학력층, 10=고학력층

〈부표 2-9〉 2017년 인구집단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385802	.0209708	6.61**	.0701119	.2070485
3vs1	-.7318309	.0209708	-34.9**	-.8002992	-.6633626
4vs1	.1590819	.0209708	7.59**	.0906136	.2275502
5vs1	.0462669	.0209708	2.21	-.0222014	.1147352
6vs1	-.3716452	.0209708	-17.72**	-.4401135	-.3031769
7vs1	.0334711	.0209708	1.6	-.0349972	.1019394
8vs1	-.0326961	.0209708	-1.56	-.1011644	.0357722
9vs1	-.5240209	.0209708	-24.99**	-.5924892	-.4555526
10vs1	.4126558	.0209708	19.68**	.3441875	.4811241
3vs2	-.8704111	.0209708	-41.51**	-.9388794	-.8019428
4vs2	.0205016	.0209708	0.98	-.0479667	.0889699
5vs2	-.0923133	.0209708	-4.4**	-.1607816	-.0238450
6vs2	-.5102255	.0209708	-24.33**	-.5786938	-.4417572
7vs2	-.1051092	.0209708	-5.01**	-.1735775	-.0366409
8vs2	-.1712764	.0209708	-8.17**	-.2397447	-.1028081
9vs2	-.6626012	.0209708	-31.6**	-.7310695	-.5941329
10vs2	.2740756	.0209708	13.07**	.2056073	.3425439
4vs3	.8909128	.0209708	42.48**	.8224445	.9593811
5vs3	.7780978	.0209708	37.1**	.7096295	.8465661
6vs3	.3601857	.0209708	17.18**	.2917174	.4286540
7vs3	.7653020	.0209708	36.49**	.6968337	.8337703
8vs3	.6991348	.0209708	33.34**	.6306665	.7676031
9vs3	.2078100	.0209708	9.91**	.1393417	.2762783

23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0vs3	1.1444870	.0209708	54.58**	1.0760180	1.2129550
5vs4	-.1128149	.0209708	-5.38**	-.1812833	-.0443466
6vs4	-.5307271	.0209708	-25.31**	-.5991954	-.4622588
7vs4	-.1256108	.0209708	-5.99**	-.1940791	-.0571425
8vs4	-.1917780	.0209708	-9.14**	-.2602463	-.1233097
9vs4	-.6831028	.0209708	-32.57**	-.7515711	-.6146345
10vs4	.2535739	.0209708	12.09**	.1851056	.3220422
6vs5	-.4179122	.0209708	-19.93**	-.4863805	-.3494439
7vs5	-.0127958	.0209708	-0.61	-.0812642	.0556725
8vs5	-.0789631	.0209708	-3.77**	-.1474314	-.0104948
9vs5	-.5702879	.0209708	-27.19**	-.6387562	-.5018196
10vs5	.3663889	.0209708	17.47**	.2979206	.4348572
7vs6	.4051163	.0209708	19.32**	.3366480	.4735846
8vs6	.3389491	.0209708	16.16**	.2704808	.4074174
9vs6	-.1523757	.0209708	-7.27**	-.2208440	-.0839074
10vs6	.7843010	.0209708	37.4**	.7158327	.8527693
8vs7	-.0661672	.0209708	-3.16	-.1346355	.0023011
9vs7	-.5574920	.0209708	-26.58**	-.6259603	-.4890237
10vs7	.3791847	.0209708	18.08**	.3107164	.4476530
9vs8	-.4913248	.0209708	-23.43**	-.5597931	-.4228565
10vs8	.4453519	.0209708	21.24**	.3768836	.5138202
10vs9	.9366767	.0209708	44.67**	.8682084	1.0051450

주: * $p<0.05$, ** $p<0.01$

1=전체인구, 2=비빈곤층, 3=빈곤층, 4=청년, 5=중장년층, 6=노년층, 7=남성, 8=여성,
9=저학력층, 10=고학력층

[부록 3]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1) 수도/비수도권 간 격차 분석

〈부표 3-1〉 전체 인구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전체 인구 2011	비수도권 (N=163)	6.544577	.2465831	.4.047346*	-2.5340*
	수도권 (N=66)	6.625902	.2082306		

주: * $p < 0.05$, ** $p < 0.01$

〈부표 3-2〉 전체 인구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전체 인구 2015	비수도권 (N=163)	6.692887	.2141268	.63789530	-2.4403*
	수도권 (N=66)	6.76731	.1957719		

주: * $p < 0.05$, ** $p < 0.01$

〈부표 3-3〉 전체 인구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전체 인구 2017	비수도권 (N=163)	6.817049	.2216723	.84206894	-3.5380**
	수도권 (N=66)	6.927035	.1899626		

주: * $p < 0.05$, ** $p < 0.01$

23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4〉 비빈곤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비 빈곤층 2011	비수도권 (N=163)	6.766893	.2406333	3.3309949	-.9792
	수도권 (N=66)	6.799887	.2048378		

주: * $p<0.05$, ** $p<0.01$

〈부표 3-5〉 비빈곤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비 빈곤층 2015	비수도권 (N=163)	6.863363	.2110307	.67385734	-1.0241
	수도권 (N=66)	6.894296	.1966836		

주: * $p<0.05$, ** $p<0.01$

〈부표 3-6〉 비빈곤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비 빈곤층 2017	비수도권 (N=163)	6.993307	.2109588	.7004345	-2.0211*
	수도권 (N=66)	7.053415	.1849345		

주: * $p<0.05$, ** $p<0.01$

〈부표 3-7〉 빈곤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빈곤층 2011	비수도권 (N=163)	5.79531	.3498017	4.0655924*	-2.5106*
	수도권 (N=66)	5.90705	.2849501		

주: * $p<0.05$, ** $p<0.01$

〈부표 3-8〉 빈곤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빈곤층 2015	비수도권 (N=163)	5.970278	.3185497	1.5805864	-2.4594*
	수도권 (N=66)	6.079514	.2659703		

주: * $p<0.05$, ** $p<0.01$

〈부표 3-9〉 빈곤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빈곤층 2017	비수도권 (N=163)	6.091615	.3264126	.00521409	-2.9210**
	수도권 (N=66)	6.229429	.3156997		

주: * $p<0.05$, ** $p<0.01$

〈부표 3-10〉 청년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청년층 2011	비수도권 (N=163)	6.96118	.2539817	6.3497451*	.8362
	수도권 (N=66)	6.937381	.1653698		

주: * $p<0.05$, ** $p<0.01$

〈부표 3-11〉 청년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청년층 2015	비수도권 (N=163)	6.93057	.2609482	4.2981553*	1.2940
	수도권 (N=66)	6.891677	.1790306		

주: * $p<0.05$, ** $p<0.01$

23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12〉 청년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청년층 2017	비수도권 (N=163)	7.1056	.2693967	4.8603828*	1.8549
	수도권 (N=66)	7.047508	.1880021		

주: * $p<0.05$, ** $p<0.01$

〈부표 3-13〉 중장년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중장년층 2011	비수도권 (N=163)	6.604262	.2446086	1.7943875	-.3501
	수도권 (N=66)	6.61654	.2294333		

주: * $p<0.05$, ** $p<0.01$

〈부표 3-14〉 중장년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중장년층 2015	비수도권 (N=163)	6.787261	.2048296	.00297765	.3142
	수도권 (N=66)	6.77782	.2088532		

주: * $p<0.05$, ** $p<0.01$

〈부표 3-15〉 중장년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중장년층 2017	비수도권 (N=163)	6.913506	.2153396	.05431867	-1.6064
	수도권 (N=66)	6.964078	.2168688		

주: * $p<0.05$, ** $p<0.01$

〈부표 3-16〉 노년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노년층 2011	비수도권 (N=163)	5.951396	.3482583	.51834680	-2.7977**
	수도권 (N=66)	6.092235	.3369009		

주: * $p<0.05$, ** $p<0.01$

〈부표 3-17〉 노년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노년층 2015	비수도권 (N=163)	6.284337	.2880348	.00060354	-5.4719**
	수도권 (N=66)	6.519957	.3121354		

주: * $p<0.05$, ** $p<0.01$

〈부표 3-18〉 노년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노년층 2017	비수도권 (N=163)	6.402749	.3039492	.16415081	-4.7661**
	수도권 (N=66)	6.618784	.3268345		

주: * $p<0.05$, ** $p<0.01$

〈부표 3-19〉 남성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남성 2011	비수도권 (N=163)	6.647659	0.2248464	0.28498157	-1.4836
	수도권 (N=66)	6.696354	0.2252799		

주: * $p<0.05$, ** $p<0.01$

24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20〉 남성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남성 2015	비수도권 (N=163)	6.741903	0.2187439	0.01387626	-0.9163
	수도권 (N=66)	6.771118	0.218052		

주: * $p<0.05$, ** $p<0.01$

〈부표 3-21〉 남성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남성 2017	비수도권 (N=163)	6.874282	0.2285173	0.38670329	-2.4844*
	수도권 (N=66)	6.954495	0.2021853		

주: * $p<0.05$, ** $p<0.01$

〈부표 3-22〉 여성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여성 2011	비수도권 (N=163)	6.442375	0.2842569	7.2144255**	-3.2957**
	수도권 (N=66)	6.555932	0.2136282		

주: * $p<0.05$, ** $p<0.01$

〈부표 3-23〉 여성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여성 2015	비수도권 (N=163)	6.644228	0.232301	2.5024836	-3.6789**
	수도권 (N=66)	6.763055	0.1914681		

주: * $p<0.05$, ** $p<0.01$

〈부표 3-24〉 여성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여성 2017	비수도권 (N=163)	6.760691	0.2362425	1.7352644	-4.2237**
	수도권 (N=66)	6.899643	0.1961182		

주: * $p<0.05$, ** $p<0.01$

〈부표 3-25〉 저학력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저학력층 2011	비수도권 (N=163)	6.012171	0.3053299	2.3089686	-0.2825
	수도권 (N=66)	6.024422	0.2762448		

주: * $p<0.05$, ** $p<0.01$

〈부표 3-26〉 저학력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저학력층 2015	비수도권 (N=163)	6.252343	0.2608398	0.67629180	-1.7783
	수도권 (N=66)	6.318892	0.2453272		

주: * $p<0.05$, ** $p<0.01$

〈부표 3-27〉 저학력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저학력층 2017	비수도권 (N=163)	6.362192	0.2790974	0.34988049	-1.3610
	수도권 (N=66)	6.417252	0.2727298		

주: * $p<0.05$, ** $p<0.01$

24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28〉 고학력층 2011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고학력층 2011	비수도권 (N=163)	7.228686	0.2505447	8.1226079**	2.0465*
	수도권 (N=66)	7.167894	0.1811578		

주: * $p<0.05$, ** $p<0.01$

〈부표 3-29〉 고학력층 2015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고학력층 2015	비수도권 (N=163)	7.277562	0.2221393	6.1576465*	3.1310**
	수도권 (N=66)	7.195272	0.1600343		

주: * $p<0.05$, ** $p<0.01$

〈부표 3-30〉 고학력층 2017년 수도/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 levene test 및 t-test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t값
고학력층 2017	비수도권 (N=163)	7.346794	0.255411	5.0989661*	0.9493
	수도권 (N=66)	7.317967	0.1856102		

주: * $p<0.05$, ** $p<0.01$

2) 규모별(특·광역시/시/군) 지역 간 격차 분석

〈부표 3-31〉 전체인구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인구 2011년	특·광역시 (N=74)	6.613364	7.123567 /6.160072	.1841998	2.09
	시 (N=78)	6.583999	7.306985 /5.925289	.2399120	
	군 (N=77)	6.537802	7.108279 /5.920408	.2598242	

주: * $p<0.05$, ** $p<0.01$

〈부표 3-32〉 전체인구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93658	.0372652	-0.79	-.1172841	.0585526
3vs1	-.0755627	.0372652	-2.03	-.1634810	.0123557
3vs1	-.0461969	.0372652	-1.24	-.1341152	.0417215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33〉 전체인구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93658	.0372652	-0.79	-.1192470	.0605154
3vs1	-.0755627	.0372652	-2.03	-.1654439	.0143185
4vs1	-.0461969	.0372652	-1.24	-.1360781	.043684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4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34〉 전체인구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전체인구 2015년	특·광역시 (N=74)	6.773531	7.148882/ 6.174516	0.1769588	8.84**
	시 (N=78)	6.765149	7.411065/ 6.274542	0.1857027	
	군 (N=77)	6.654993	7.393974/ 6.100819	0.218127	

주: * p<0.05, ** p<0.01

〈부표 3-35〉 전체인구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83823	.0314679	-0.27	-.0826234	.0658587
3vs1	-.1185378	.0314679	-3.77**	-.1927788	-.0442968
3vs2	-.1101555	.0314679	-3.5**	-.1843965	-.035914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36〉 전체인구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83823	.0314679	-0.27	-.0842808	.0675162
3vs1	-.1185378	.0314679	-3.77**	-.1944363	-.0426393
3vs2	-.1101555	.0314679	-3.5**	-.1860540	-.034257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37〉 전체인구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전체인구 2017년	특·광역시 (N=74)	6.896555	7.408948/ 6.365212	0.2101902	1.85
	시 (N=78)	6.889234	7.238638/ 6.400383	0.1530769	
	군 (N=77)	6.838234	7.406877/ 5.955906	0.2399506	

주: * $p<0.05$, ** $p<0.01$

〈부표 3-38〉 전체인구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73208	.0330652	-0.22	-.0853301	.0706886
3vs1	-.0583212	.0330652	-1.76	-.1363306	.0196881
3vs2	-.0510004	.0330652	-1.54	-.1290098	.0270089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39〉 전체인구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73208	.0330652	-0.22	-.0870717	.0724302
3vs1	-.0583212	.0330652	-1.76	-.1380722	.0214297
3vs2	-.0510004	.0330652	-1.54	-.1307514	.0287505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4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40〉 비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비빈곤층 2011년	특·광역시 (N=74)	6.805679	7.346692/ 6.459729	0.1746228	0.91
	시 (N=78)	6.778575	7.441774/ 6.308231	0.2185361	
	군 (N=77)	6.757759	7.307627/ 6.160889	0.2576417	

주: * p<0.05, ** p<0.01

〈부표 3-41〉 비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71039	.0355418	-0.76	-.1128283	.0586206
3vs1	-.0479203	.0355418	-1.35	-.1336448	.0378042
3vs1	-.0208164	.0355418	-0.59	-.1065409	.064908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42〉 비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71039	.0355418	-0.76	-.1128283	.0586206
3vs1	-.0479203	.0355418	-1.35	-.1336448	.0378042
4vs1	-.0208164	.0355418	-0.59	-.1065409	.064908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43〉 비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비빈곤층 2015년	특·광역시 (N=74)	6.913577	7.34944/6. 405004	0.1794687	5.12**
	시 (N=78)	6.904268	7.470581/ 6.420455	0.1774417	
	군 (N=77)	6.822843	7.504683/ 6.308041	0.2186384	

주: * $p<0.05$, ** $p<0.01$

〈부표 3-44〉 비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93091	.0312055	-0.3	-.0829310	.0643128
3vs1	-.0907341	.0312055	-2.91*	-.1643560	-.0171121
3vs2	-.0814250	.0312055	-2.61*	-.1550469	-.007803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45〉 비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93091	.0312055	-0.3	-.0845747	.0659565
3vs1	-.0907341	.0312055	-2.91	-.1659996	-.0154685
4vs1	-.0814250	.0312055	-2.61	-.1566906	-.006159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4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46〉 비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비빈곤층 2015년	특·광역시 (N=74)	7.036511	7.564813 /6.539889	0.1982667	0.16
	시 (N=78)	7.020119	7.428701 /6.606207	0.1461044	
	군 (N=77)	7.023015	7.445951 /6.057359	0.2238529	

주: * p<0.05, ** p<0.01

〈부표 3-47〉 비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163922	.0311023	-0.53	-.0897705	.0569861
3vs1	-.0134961	.0311023	-0.43	-.0868744	.0598823
3vs2	.0028961	.0311023	0.09	-.0704822	.076274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48〉 비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163922	.0311023	-0.53	-.0914087	.0586244
3vs1	-.0134961	.0311023	-0.43	-.0885126	.0615205
4vs1	.0028961	.0311023	0.09	-.0721204	.0779127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49〉 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빈곤층 2011년	특·광역시 (N=74)	5.881937	6.734858 /5.003204	0.2988906	1.11
	시 (N=78)	5.805463	6.861829 /4.955397	0.3537226	
	군 (N=77)	5.822259	6.80202 /5.039941	0.34341	

주: * $p<0.05$, ** $p<0.01$

〈부표 3-50〉 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764741	.0538798	-1.42	-.2035906	.0506424
3vs1	-.0596780	.0538798	-1.11	-.1867945	.0674385
3vs2	.0167961	.0538798	0.31	-.1103203	.1439126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51〉 빈곤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764741	.0538798	-1.42	-.2064286	.0534803
3vs1	-.0596780	.0538798	-1.11	-.1896324	.0702765
4vs1	.0167961	.0538798	0.31	-.1131583	.1467506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5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52〉 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빈곤층 2015년	특·광역시 (N=74)	6.087458	6.605198 /5.214538	0.2745982	2.42
	시 (N=78)	6.019641	6.59783 /5.255511	0.2644485	
	군 (N=77)	5.981156	6.854432 /5.170898	0.3590985	

주: * $p<0.05$, ** $p<0.01$

〈부표 3-53〉 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678167	.0489445	-1.39	-.1832895	.0476561
3vs1	-.1063017	.0489445	-2.17	-.2217745	.0091711
3vs2	-.0384850	.0489445	-0.79	-.1539578	.0769878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54〉 빈곤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678167	.0489445	-1.39	-.1858675	.0502341
3vs1	-.1063017	.0489445	-2.17	-.2243525	.0117491
4vs1	-.0384850	.0489445	-0.79	-.1565358	.0795658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55〉 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빈곤층 2017년	특·광역시 (N=74)	6.131461	7.063901 /5.319169	0.3366172	0.47
	시 (N=78)	6.177783	6.786619 /5.53473	0.2338771	
	군 (N=77)	6.171685	7.302489 /5.074082	0.3747016	

주: * $p<0.05$, ** $p<0.01$

〈부표 3-56〉 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463211	.0518980	0.89	-.0761199	.1687621
3vs1	.0402238	.0518980	0.78	-.0822172	.1626648
3vs2	-.0060973	.0518980	-0.12	-.1285383	.1163437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57〉 빈곤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463211	.0518980	0.89	-.0788534	.1714957
3vs1	.0402238	.0518980	0.78	-.0849507	.1653984
4vs1	-.0060973	.0518980	0.12	-.1312719	.119077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5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58〉 청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청년층 2011년	특·광역시 (N=74)	6.955826	7.422093 /6.238414	0.1819021	0.91
	시 (N=78)	6.928104	7.765665 /6.340118	0.2058706	
	군 (N=77)	6.975738	7.582846 /6.087328	0.2614042	

주: * p<0.05, ** p<0.01

〈부표 3-59〉 청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77217	.0354398	-0.78	-.1113333	.0558899
3vs1	.0199121	.0354398	0.56	-.0636995	.1035237
3vs2	.0476338	.0354398	1.34	-.0359778	.131245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60〉 청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77217	.0354398	-0.78	-.1132000	.0577566
3vs1	.0199121	.0354398	0.56	-.0655662	.1053904
4vs1	.0476338	.0354398	1.34	-.0378445	.1331121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61〉 청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청년층 2015년	특·광역시 (N=74)	6.897771	7.30018/6. 306718	0.174145	3.08*
	시 (N=78)	6.871515	7.378495/ 6.36901	0.1895628	
	군 (N=77)	6.956671	7.801953/ 6.174034	0.2744659	

주: * $p<0.05$, ** $p<0.01$

〈부표 3-62〉 청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62569	.0351663	-0.75	-.1092232	.0567095
3vs1	.0589001	.0351663	1.67	-.0240663	.1418664
3vs2	.0851570	.0351663	2.42*	.0021906	.168123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63〉 청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62569	.0351663	-0.75	.1110755	.0585618
3vs1	.0589001	.0351663	1.67	-.0259186	.1437187
4vs1	.0851570	.0351663	2.42*	.0003383	.1699756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5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64〉 청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청년층 2017년	특·광역시 (N=74)	7.051495	7.523526 /6.612655	0.1974308	6.73**
	시 (N=78)	7.029425	7.747754 /6.674967	0.1522232	
	군 (N=77)	7.158374	7.862262 /6.252519	0.3157764	

주: * p<0.05, ** p<0.01

〈부표 3-65〉 청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220701	0.037599	-0.59	-0.110776	0.0666358
3vs1	0.1068789	0.037599	2.84*	0.018173	0.1955848
3vs2	0.128949	0.037599	3.43**	0.0402431	0.2176549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66〉 청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20701	.0375990	-0.59	-.1127564	.0686163
3vs1	.1068789	.0375990	2.84*	.0161925	.1975652
4vs1	.1289490	.0375990	3.43**	.0382626	.219635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67〉 중장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중장년층 2011년	특·광역시 (N=74)	6.626454	7.238547 /6.269282	0.1988392	0.59
	시 (N=78)	6.622117	7.315329 /6.209162	0.2328107	
	군 (N=77)	6.588779	7.095921 /6.059529	0.2657663	

주: * $p<0.05$, ** $p<0.01$

〈부표 3-68〉 중장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43372	.0378893	-0.11	-.0937281	.0850536
3vs1	-.0376751	.0378893	-0.99	-.1270659	.0517158
3vs2	-.0333378	.0378893	-0.88	-.1227287	.056053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69〉 중장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43372	.0378893	-0.11	-.0957238	.0870493
3vs1	-.0376751	.0378893	-0.99	-.1290616	.0537115
4vs1	-.0333378	.0378893	-0.88	-.1247244	.0580487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5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70〉 중장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중장년층 2015년	특·광역시 (N=74)	6.786359	7.290006 /6.263347	0.1940369	1.79
	시 (N=78)	6.820033	7.47133 /6.260682	0.19136	
	군 (N=77)	6.75803	7.420549 /6.299644	0.2209137	

주: * $p<0.05$, ** $p<0.01$

〈부표 3-71〉 중장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36736	.0327851	1.03	-.0436751	.1110222
3vs1	-.0283297	.0327851	-0.86	-.1056784	.0490190
3vs2	-.0620033	.0327851	-1.89	-.1393519	.015345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72〉 중장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36736	.0327851	1.03	-.0454020	.1127491
3vs1	-.0283297	.0327851	-0.86	-.1074052	.0507458
4vs1	-.0620033	.0327851	-1.89	-.1410788	.017072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73〉 중장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중장년층 2017년	특·광역시 (N=74)	6.91744	7.681476 /6.368334	0.2310238	0.91
	시 (N=78)	6.947431	7.404031 /6.516885	0.1620621	
	군 (N=77)	6.960155	7.43679 /6.050351	0.2030622	

주: * $p<0.05$, ** $p<0.01$

〈부표 3-74〉 중장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99915	.0324892	0.92	-.0466589	.1066420
3vs1	.0427156	.0324892	1.31	-.0339349	.1193660
3vs2	.0127240	.0324892	0.39	-.0639264	.0893745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75〉 중장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99915	.0324892	0.92	-.0483702	.1083533
3vs1	.0427156	.0324892	1.31	-.0356462	.1210773
4vs1	.0127240	.0324892	0.39	-.0656377	.0910858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5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76〉 노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노년층 2011년	특·광역시 (N=74)	6.017699	6.712486 /5.293621	0.3038702	0.11
	시 (N=78)	6.012983	7.357154 /5.094496	0.3582997	
	군 (N=77)	5.993069	6.779976 /5.274654	0.3703622	

주: * $p<0.05$, ** $p<0.01$

〈부표 3-77〉 노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47159	.0559083	-0.08	-.1366182	.1271864
3vs1	-.0246302	.0559083	-0.44	-.1565325	.1072721
3vs2	-.0199143	.0559083	-0.36	-.1518166	.111988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78〉 노년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47159	.0559083	-0.08	-.1395630	.1301312
3vs1	-.0246302	.0559083	-0.44	-.1594773	.1102170
4vs1	-.0199143	.0559083	-0.36	-.1547614	.1149329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79〉 노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노년층 2011년	특·광역시 (N=74)	6.498824	7.293804 /5.710253	0.3022761	9.27**
	시 (N=78)	6.381832	7.142406 /5.671082	0.2726539	
	군 (N=77)	6.291869	6.905615 /5.63165	0.3168901	

주: * $p<0.05$, ** $p<0.01$

〈부표 3-80〉 노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169914	.0482103	-2.43*	-.2307320	-.0032507
3vs1	-.2069549	.0482103	-4.29**	-.3206956	-.0932143
3vs2	-.0899635	.0482103	-1.87	-.2037042	.0237771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81〉 노년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169914	.0482103	-2.43*	-.2332714	-.0007114
3vs1	-.2069549	.0482103	-4.29**	-.3232349	-.0906749
4vs1	-.0899635	.0482103	-1.87	-.2062435	.026316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6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82〉 노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노년층 2017년	특·광역시 (N=74)	6.576228	7.497485 /5.47842	0.3568354	2.52
	시 (N=78)	6.470297	7.077992 /5.776513	0.2748876	
	군 (N=77)	6.478985	7.324215 /5.596166	0.3332128	

주: * p<0.05, ** p<0.01

〈부표 3-83〉 노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059313	.0523597	-2.02	-.2294615	.0175989
3vs1	-.0972431	.0523597	-1.86	-.2207733	.0262871
3vs1	.0086882	.0523597	0.17	-.1148420	.132218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84〉 노년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1059313	.0523597	-2.02	-.2322194	.0203568
3vs1	-.0972431	.0523597	-1.86	-.2235312	.0290450
4vs1	.0086882	.0523597	0.17	-.1175999	.134976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85〉 남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남성 2011년	특·광역시 (N=74)	6.697291	7.22551 /6.204985	0.1870952	1.37
	시 (N=78)	6.673807	7.326869 /6.124784	0.2166164	
	군 (N=77)	6.639005	7.114176 /6.017218	0.2492713	

주: * $p<0.05$, ** $p<0.01$

〈부표 3-86〉 남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34834	.0354718	-0.66	-.1071706	.0602037
3vs1	-.0582856	.0354718	-1.64	-.1419727	.0254016
3vs2	-.0348021	.0354718	-0.98	-.1184893	.048885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87〉 남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34834	.0354718	-0.66	-.1090390	.0620721
3vs1	-.0582856	.0354718	-1.64	-.1438411	.0272699
4vs1	-.0348021	.0354718	-0.98	-.1203577	.050753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6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88〉 남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남성 2015년	특·광역시 (N=74)	6.781412	7.192454 /6.209087	0.194563	2.58
	시 (N=78)	6.780252	7.545329 /6.279675	0.1957583	
	군 (N=77)	6.714589	7.426718 /6.257726	0.2313011	

주: * p<0.05, ** p<0.01

〈부표 3-89〉 남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11599	.0336534	-0.03	-.0805571	.0782373
3vs1	-.0668230	.0336534	-1.99	-.1462202	.0125743
3vs1	-.0656631	.0336534	-1.95	-.1450603	.0137341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90〉 남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11599	.0336534	-0.03	-.0823297	.0800099
3vs1	-.0668230	.0336534	-1.99	-.1479928	.0143469
4vs1	-.0656631	.0336534	-1.95	-.1468329	.0155067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91〉 남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남성 2017년	특·광역시 (N=74)	6.927584	7.404653 /6.386713	0.2315799	0.29
	시 (N=78)	6.920572	7.393932 /6.539716	0.1597043	
	군 (N=77)	6.902395	7.421199 /5.974091	0.236	

주: * $p<0.05$, ** $p<0.01$

〈부표 3-92〉 남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70120	.0343145	-0.2	-.0879688	.0739448
3vs1	-.0251895	.0343145	-0.73	-.1061463	.0557673
3vs2	-.0181775	.0343145	-0.53	-.0991343	.0627793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93〉 남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70120	.0343145	-0.2	-.0897762	.0757523
3vs1	-.0251895	.0343145	-0.73	-.1079537	.0575747
4vs1	-.0181775	.0343145	-0.53	-.1009417	.0645867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6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94〉 여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여성 2011년	특·광역시 (N=74)	6.529722	7.024171 /6.050286	0.198872	2.49
	시 (N=78)	6.495718	7.288935 /5.743906	0.2827629	
	군 (N=77)	6.436405	7.126487 /5.780647	0.2924144	

주: * $p<0.05$, ** $p<0.01$

〈부표 3-95〉 여성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40035	.0423158	-0.8	-.1338375	.0658306
3vs1	-.0933166	.0423158	-2.21	-.1931506	.0065174
3vs2	-.0593131	.0423158	-1.4	-.1591472	.0405209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96〉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40035	.0423158	-0.8	-.1360664	.0680594
3vs1	-.0933166	.0423158	-2.21	-.1953795	.0087463
4vs1	-.0593131	.0423158	-1.4	-.1613760	.0427498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97〉 여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여성 2015년	특·광역시 (N=74)	6.766078	7.152765 /6.141013	0.1791596	16.46**
	시 (N=78)	6.750309	7.283152 /6.269506	0.1936834	
	군 (N=77)	6.595541	7.356366 /5.877196	0.2322466	

주: * $p<0.05$, ** $p<0.01$

〈부표 3-98〉 여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157697	.0328492	-0.48	-.0932694	.0617301
3vs1	-.1705370	.0328492	-5.19**	-.2480368	-.0930373
3vs2	-.1547674	.0328492	-4.71**	-.2322671	-.0772676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99〉 여성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157697	.0328492	-0.48	-.0949996	.0634603
3vs1	-.1705370	.0328492	-5.19**	-.2497670	-.0913070
4vs1	-.1547674	.0328492	-4.71**	-.2339973	-.075537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6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100〉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여성 2017년	특·광역시 (N=74)	6.866742	7.449253 /6.264072	0.2090039	4.13*
	시 (N=78)	6.858364	7.2271 /6.255242	0.1618663	
	군 (N=77)	6.774244	7.393042 /5.938554	0.2741988	

주: * $p<0.05$, ** $p<0.01$

〈부표 3-101〉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83782	.0355943	-0.24	-.0923543	.0755980
3vs1	-.0924980	.0355943	-2.6*	-.1764742	-.0085219
3vs2	-.0841199	.0355943	-2.36	-.1680960	-.0001437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02〉 여성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83782	.0355943	-0.24	-.0942292	.0774728
3vs1	-.0924980	.0355943	-2.6*	-.1783490	-.0066470
4vs1	-.0841199	.0355943	-2.36	-.1699709	.0017311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03〉 저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F값
저학력층 2011년	특·광역시 (N=74)	6.019817	6.714013 /5.427718	0.264	0.34
	시 (N=78)	6.025835	6.91141 /5.155182	0.3094518	
	군 (N=77)	6.055702	6.707666 /5.410378	0.2878601	

주: * $p<0.05$, ** $p<0.01$

〈부표 3-104〉 저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60183	.0465704	0.13	-.1038533	.1158899
3vs1	.0358852	.0465704	0.77	-.0739864	.1457567
3vs2	.0298669	.0465704	0.64	-.0800047	.1397385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05〉 저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060183	.0465704	0.13	-.1063062	.1183428
3vs1	.0358852	.0465704	0.77	-.0764394	.1482097
4vs1	.0298669	.0465704	0.64	-.0824576	.142191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6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106〉 저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저학력층 2015년	특·광역시 (N=74)	6.288077	6.84248 /5.712733	0.2332474	0.60
	시 (N=78)	6.259608	6.858075 /5.567948	0.2336227	
	군 (N=77)	6.303335	6.819559 /5.605701	0.2803128	

주: * $p<0.05$, ** $p<0.01$

〈부표 3-107〉 저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84693	.0404733	-0.7	-.1239563	.0670177
3vs1	.0152579	.0404733	0.38	-.0802291	.1107449
3vs2	.0437272	.0404733	1.08	-.0517598	.1392142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08〉 저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84693	.0404733	-0.7	-.1260881	.0691495
3vs1	.0152579	.0404733	0.38	-.0823609	.1128767
4vs1	.0437272	.0404733	1.08	-.0538916	.1413460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09〉 저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저학력층 2017년	특·광역시 (N=74)	6.373653	7.13636 /5.536883	0.2695806	5.32**
	시 (N=78)	6.341622	7.106622 /5.842453	0.2275914	
	군 (N=77)	6.475486	7.275441 /5.692047	0.2929143	

주: * $p<0.05$, ** $p<0.01$

〈부표 3-110〉 저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20316	.0428529	-0.75	-.1331327	.0690695
3vs1	.1018330	.0428529	2.38*	.0007319	.2029342
3vs2	.1338646	.0428529	3.12**	.0327635	.2349658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11〉 저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20316	.0428529	-0.75	-.1353899	.0713267
3vs1	.1018330	.0428529	2.38	-.0015253	.2051913
4vs1	.1338646	.0428529	3.12**	.0305063	.2372229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27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112〉 고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고학력층 2011년	특·광역시 (N=74)	7.19133	7.699786 /6.694601	0.1772514	3.13*
	시 (N=78)	7.162289	7.901532 /6.676313	0.2400601	
	군 (N=77)	7.252732	7.765114 /6.690659	0.2589047	

주: * p<0.05, ** p<0.01

〈부표 3-113〉 고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90415	.0369219	-0.79	-.1161498	.0580669
3vs1	.0614016	.0369219	1.66	-.0257068	.1485100
3vs1	.0904431	.0369219	2.45*	.0033347	.1775514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14〉 고학력층 2011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90415	.0369219	-0.79	-.1180946	.0600117
3vs1	.0614016	.0369219	1.66	-.0276515	.1504547
4vs1	.0904431	.0369219	2.45*	.0013899	.1794962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15〉 고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고학력층 2015년	특·광역시 (N=74)	7.195829	7.556176 /6.75338	0.1600168	4.02*
	시 (N=78)	7.23177	7.747071 /6.864141	0.1552645	
	군 (N=77)	7.282193	7.971458 /6.803547	0.2396173	

주: * $p < 0.05$, ** $p < 0.01$

〈부표 3-116〉 고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59411	.0305884	1.17	-.0362248	.1081070
3vs1	.0863643	.0305884	2.82*	.0141984	.1585302
3vs2	.0504232	.0305884	1.65	-.0217427	.1225891

주: * $p < 0.05$, ** $p < 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17〉 고학력층 2015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359411	.0305884	1.17	-.0378360	.1097181
3vs1	.0863643	.0305884	2.82*	.0125872	.1601413
4vs1	.0504232	.0305884	1.65	-.0233538	.1242003

주: * $p < 0.05$, ** $p < 0.01$
1=특·광역시, 2=시, 3=군

27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부표 3-118〉 고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ANOVA 분석

구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F값
고학력층 2017년	특·광역시 (N=74)	7.280425	7.909072 /6.702599	0.187127	9.19**
	시 (N=78)	7.3043	7.84849 /6.921904	0.1569697	
	군 (N=77)	7.416056	7.945631 /6.133665	0.2665023	

주: * p<0.05, ** p<0.01

〈부표 3-119〉 고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Tukey)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38748	.0337833	0.71	-.0558287	.1035783
3vs1	.1356311	.0337833	4.01**	.0559276	.2153346
3vs2	.1117563	.0337833	3.31**	.0320527	.1914598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표 3-120〉 고학력층 2017년 규모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사후분석(Bonferroni)

구분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vs1	.0238748	.0337833	0.71	-.0576082	.1053578
3vs1	.1356311	.0337833	4.01**	.0541481	.2171140
4vs1	.1117563	.0337833	3.31**	.0302733	.1932392

주: * p<0.05, ** p<0.01
1=특·광역시, 2=시, 3=군

[부록 4] 제3차 자문회의 회의록

10/22 자문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회의명: 삶의 질 격차 완화방안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10:30-12:30
- 참석자: 정현주(서울대 환경대학원), 임동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전희정(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인권, 송재민, 윤병석, 박정현, 이한나(이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내용: 데이터 분석 결과 검토, 삶의 질 격차 관련 정책 사례 분석, 계층 및 지역별 정책방안에 관한 자문의견 청취

□ 모형 해석 보완점

- 가치관 및 사회적 변화(전희정 교수)
 - 가치관의 변화 주택 시장의 변화 등이 해석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전체 인구 모형과 여성 모형이 비슷한 것은 전반적 삶의 질의 선택에 여성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는 방증일 수 있음 이를 더 강조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

□ 계층 지역 문제별 정책방안 및 주의점

- 정부 지자체의 정책 방향(정현주 교수)
 - 중앙: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중요
 - 지자체: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계층에게 집중한 세분화된 타겟팅 정책이 필요할 것 따라서 청년층 고학력층에 특화된 정책도 지자체에게는 의미 있음.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자체의 새로운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물리적 시설의 중요성(전희정 교수)
 - 물리적 시설은 기본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회 참여와 관계도 있어야 함. 정책 우선순위.

27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 여성

- 지자체의 여성 맞춤형 대응 정책의 중요성

: regression 모형 결과, 점차 지역사회관계와 정기적 여가활동이 여성들의 삶의 질에서 영향력이 생겨나는 현상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의사결정 권한이 증가하고 이들의 의지가 반영된 지출과 삶의 선택이 많아진 결과 따라서 지자체의 여성 맞춤형 대응 정책이 중요함(정현주 교수).

- 광역적 네트워킹의 필요성

: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한계 중 하나는 지자체 간 경쟁을 하는 구조라는 것.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적 네트워킹'으로 정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함. 예컨대 귀가 도우미 버스 시스템 등을 권역별로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정현주 교수).

- 중앙에서 출산수당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전희정 교수).

○ 외국인(정현주 교수)

- 현황

: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국가 외국인은 국내 인구의 약 4%. 곧 5%를 초과할 예정. 이들 중 장기 체류자는 느린 증가 추세인데 반해 단기 체류자(C3 비자)가 근 몇 년 사이 급증. 이들 중 결혼이주여성들은 규모상으로는 매우 소수. 김해, 김포, 화성 외국인 클러스터 있음.

- 외국인 중 어떤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별로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노동이주자(E9 비자): 수도권에서 중요한 계층. 다방면에서 최악의 조건.

- 결혼이주여성

: 이들 중 50%가 수도권 거주. 그러나 이들은 인구생산의 주요 대상인 만큼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체감온도가 높을 것.

○ 개인 역량 강화(임동균 교수)

- 개인의 역량 강화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고려해볼 수 있음. 현재의 평생교육 플랫폼은 적극적인 계층만 주로 소비하는 경향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위원

회 또한 적극적 계층에게 맞춰진 한편 일방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강좌 등은 지루함 또는 반감을 유발할 수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요성

: 취약계층의 소득 상승이 삶의 질 개선의 중요할 것 협동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되 현재 협동조합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원 방안이 필요해보임. 예컨대 수익모델 자문 교육, 자금 지원 등 .

- 주민 자존감 향상 정책

: 지역 자산을 발굴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지역 공유자산 매핑, 마을기금 구축, 마을 주식제 커뮤니티 쉼어 등) 또한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성공함.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생 마을 도서관 건립 가난한 마을에 인프라 설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이 유명해지고 자부심이 생기면 활기찬 동네가 됨.

○ 농촌 개발(임동균 교수)

- : 주요 사례: OECD rural policy 3.0, EU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 저밀도 경제 사례. 국내에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식품 클러스터 등이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계획 4차(2021-2025),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농촌협약제도 추진,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그램(문재인 정부 프로그램).

- 저밀도 경제 농촌에서도 혁신과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

- 이들 사례는 기존의 도농 격차라는 개념보다 훨씬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총체적 웰빙 현상 등을 설명함, 전반적으로 농업 정책에서 농촌 정책(마을 공동체 개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

- 농촌 정책은 상위 정책들과 연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고립 소외(임동균 교수)

- 문화적 변화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

- ex) 영국의 외로움 부서. Door knock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동네 마트에 테이블을 설치한 사례, 소수자 일대일 상담 , 노년층 디지털 연결 강화 프로그램, 미시적 프로그램 벤치마킹, 서울연구원의 '외로움 정책 연구' 등.

○ 노년층과 베이비 붐 세대(박인권/임동균/송재민/전희정 교수)

27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연구(제1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의 지역 격차에 대한 대응방안

- 젊은 노인 계층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귀농귀촌했던 노인들은 노쇠하면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여 다시 도시로 돌아옴. 농촌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사실상 의료. 'Aging in place'가 가능한 실버타운의 부재 노년층의 우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nursing home이 활발하며 노년층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

□ 후속 연구 제안

○ 연구 방법의 다각화

-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 인구 이동과 삶의 질 사이에 'why'를 넣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본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의 삶의 질을 보았다면, 개별 가구 입장에서 이동을 통해 변화하는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본 연구는 추후 종합적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함(정현주 교수).
- 패널 모형 활용: 두 연도를 비교하는 패널모형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전희정 교수).

○ 여성 관련 독립 변수 보완(전희정 교수)

- 여성에게 도시의 특정 어메니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보강되면 좋을 것. 예컨대, 걷기 좋고 아동들을 데리고 가기 좋은 빵집,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카페 등.
- 출산 관련 보건복지 요인 또한 추가되면 좋을 것.